

韓國史研究

통권 200호 기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한국사 연구, 발자취에서 새로운 방향성 찾다.



일시: 2022. 12. 9(금) 10:40~18:00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01호 리베르타스홀

주최: 한국사연구회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비교문화연구소

韓國史研究

통권 200호 기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사 연구,  
발자취에서  
새로운 방향성 찾다.

# 韓國史研究 통권 200호 기념 학술대회 식순

## <1부>

사회: 오치훈(경기대학교)

10:50~10:55 개회사

이진한(한국사연구회 회장, 고려대학교)

10:55~11:00 축사

안병우(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11:00~11:40 기조강연 I 한국학·지역학의 발흥과 한국사연구

오영교(한국사연구회 前회장, 연세대학교)

11:40~12:20 제1발표 I 공간과 자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길로 들어선 고려사 연구

발표: 문경호(공주대학교)

토론: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12:20~13:30 점심 식사

13:30~14:10 제2발표 I 21세기 고대사 연구의 성과와 방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역량의 축적-

발표: 한영화(성균관대학교)

토론: 윤성호(한성대학교)

14:10~14:50 제3발표 I 조선후기 재정사연구를 통해 본 국가와 향촌공동체의 생존방식

발표: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토론: 이민우(안동대학교)

14:50~15:00 휴식

## <2부>

사회: 유바다(고려대학교)

15:00~15:40 제4발표 I 한국 근대사 연구의 주요 분석개념에 대한 재고

-근대성, 식민성, 공공성, 일상성-

발표: 김윤희(한남대학교)

토론: 고태우(서울대학교)

15:40~16:20 제5발표 I 한국현대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원조·개발·발전사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 이동원(서울대학교)

토론: 이정은(순천대학교)

16:20~16:30 휴식 및 장내 정리

16:30~18:00 종합토론

좌장: 정태현(한국사연구회 前회장, 고려대학교)

18:00~18:00 폐회사

# 한국학·지역학의 발흥과 한국사연구

오영교(연세대)

1. 서론
2. 한국학의 대두와 논의 과정
3. 국내 지역연구의 전개와 연구방법론 정립의 모색
4. 한국사연구의 현황과 지향

## 1. 서론

한국사연구회는 1967년 “한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사연구회 회칙 2조)는 취지로 창립되었다. 학회 연구위원회는 연구발표회와 학술대회 개최, 단행본·연구총서 등의 기획·출판 등 각종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지령200호를 맞이하는 학술지 『한국사연구』는 명실공히 한국사연구자들의 내실 있는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국연구재단에 의해 우수학술지로 선정되어 여전히 학계 대표학술지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본 학술대회는 한국사연구회와 한국사학계의 가능성과 의의에 대해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본 성격이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다. 학회 구성원인 우리가 분명히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하고 정책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오늘날 한국사학계가 고민하며 살피는 사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인한 국가의 위상과 남북분단의 극복, 세계화과정 중 보편성의 담보, 역사향유의 주체로서의 민의 존재와 국가위상, 미디어시대 영상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대중화, 대학과 중고교의 역사교육, 교육부의 2002교육과정 강행에 따른 현직 역사교사들의 반대선언, 오늘 집중 언급하는 한국학과 지역학의 발흥에 대한 정통역사학계의 대응고민 등이다. 다수의 문제로 끊임없이 도전받는 한국사학계와 연구자들의 고민을 서로 나누고자 한다.

21세기에 들어와 한국사 분야의 연구성과는 연구자들의 각성과 더불어 질양의 측면에서 눈부신 진전이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과 지방, 공히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한국학과 지역학(국내지역학)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오랜 전통의 연구방법론을 구사하고 다른 인문·사회과학과 달리 정치·경제·사회·사상·문화의 종합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사가 한국학·지역학의 근간·외연으로 연계되고 한국사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의 연구와 지역학술운동으로 관여되고 있다. 본고는 분과학으로 한국사 연구, 국제심포지엄에서 해외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학발표, 그리고 지역학 연구에 다년간 참여한 필자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다. 따라서 한국사학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두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시각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한다.

한국학은 본국학-조선학-국학이라는 학적 계통성을 지니며, 수많은 대학과 국가기관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주요 한국학연구기관이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회고와 진단을 통해 과연 “한국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해야만 하나”에 대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결과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학 연구의 문제점은 후발학문이자 한국학을 모방하고 심지어 양적팽창을 위해 변주하는 지역학의 실태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199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과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대학과 지역별로 지역학 연구소가 건립되고 지역문화, 지역민의 삶의 질, 지방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를 지향하는 연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지역민들의 인식전환과 역량 증진의 결과로써 전개되는 학술문화운동이며 지역의 독자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필자도 한국사전공자이면서 국내 지역학연구에 다년간 참여하며 끊임없이 반복했던 서론이기도 하다(오영교, 2019,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 2019, 「춘천학의 지향과 연구방법론 제언」, 『춘천학연구』 창간호). 필자는 개인적으로 대학과 연계되는 지역학 가령 도봉학(덕성여대, 도봉구), 강진학(연세대 국학연구원강진분원, 강진군), 삼척학(강원대, 삼척시)의 연구와 기초발제에 참여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지역학 연구가 방법론과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양적으로만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지역에 대한 모든 연구가 해당 지역학’이라고 전제하고 지역의 이름으로 단편적이고 나열적인 연구가 통제 없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보게 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추이는 지역학 연구자들이 기존 한국학 연구체계를 따르고 연구방법론을 모방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과 이를 모방·변주한 지역학 공히 학제간 융합,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연구방법론과 틀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관련 분과 학문들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변주의 모습으로 특정의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여 출발부터 실용성을 강조하며 전문적인 학계나 연구기관의 제제 없이 편만한 종합학문체계로서 연구방법론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의 연구가 한국학’이라면 ‘특정지역에 대한 모든 연구가 해당 지역학’이라고 전제하고 ‘○○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사실을 보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지역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근본적인’ 시도를 모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고투가 병행되는 현실도 잘 알고 있다.

이제 새로운 한국학·지역학연구를 위해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기본 성격이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향하는 바가 분명한 기본 이론이 있어야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하고 정책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하나의 학문이 학문으로서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확정해야 될 뿐 아니라 그를 지탱해주는 사상적·방법적 기초를 근간으로 하는 독특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한국학·지역학은 단순히 ‘한국학·지역에 관한 다양한 학문연구(현상적인 Studies)’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국사는 융합·통합을 추구하는 한국학·지역학과는 궤를 달리하는 분과학문이자 특유의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담고 있다. 한국학·지역학 연구의 전범이 되는 학문분야이다.

본고는 한국학 대두의 계통성과 연구과정, 국내 지역학의 연구 상황과 연구방법론 모색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이끄는 한국사학계의 대응 정도, 특히 한국사연구가 처해있는 학적 환경과 문제점, 지향점을 짚기 위해 필자가 고민하는 몇 가지 사안을 구성원들과 함께 점검해보고자 한다.

## 2. 한국학의 대두와 논의과정

### 1) 한국학의 대두와 전개

1970년대 이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서 증폭되어 왔다. 용어상으로 보더라도 한말의 ‘본국학(本國學)’에서 시작하여 일제시대(1930년대)의 ‘조선학(朝鮮學)’을 거쳐 해방 이후 ‘국학(國學)’, 그리고 1960년대 이후 ‘한국학(韓國學)’이라는 다양한 명칭 속에 전개되고 있다. 한국을 인식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은 그 자체의 복합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관한 지식체계를 시범적으로 정의해 왔으며, 그 연구 속에 각 시대적 상황과 역사로부터 돌출된 주요 논점들이 반영되어왔다.

우선 ‘본국학’에 대해서 살펴보면, 1894년에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로 ‘본국사’라는 범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황성신문』은 1899년에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어 교육과 함께 병행하여 ‘본국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sup>1)</sup> 이러한 ‘본국’, ‘본국학’의 표현은 자주적 근대화를 목적으로 한 애국계몽운동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개항 이후 증가하는 외세의 압력에 대한 한국 스스로의 자기 각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시기 한국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의 ‘조선학 운동’이라 불리는 조류에 의해 나타난다. 이 시기 동안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연구를 ‘국학’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인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학운동’은 정치적 차선책으로 제기한 문화운동이자 당시의 한국 현실에 대응한 당면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국가적 위기 가운데에서 한국의 전통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한국 연구의 전통적인 근원이자, 회고적으로 정의된 조선후기의 ‘실학’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리되고 연구시각의 주요한 흐름으로 표방되었다. 당시 한국은 식민지로 전락하여 민족위기의 정도가 심각했던 만큼 국학의식이 내연하고 있었다. 운동에 참여한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정치노선을 막론하고 한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학적 탐구를 임무로 자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조선적이면서 세계적이고, 세계적이면서 조선 및 조선인적”이라는 명제, 즉 근대성과 세계성을 관철할 수 있는 민족적인 자아·주체성의 재정립을 목표로 하였다.<sup>2)</sup> 그러나 ‘조선학운동’은 시대적인 제약으로 일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이러한 ‘조선학’운동이 ‘국학’이라는 명칭을 회복하였다. 특히 1950

1) 이우성·정창열, 1981, 「한국학의 반성과 전망」, 『한국학 연구입문』, 지식산업사, 9~11쪽.

2) 안재홍, 1934, 「조선학의 문제」, 『신조선』 1934년 12월호.

년대 냉전체제하 분단고착기 한국의 전통에 대한 관심은 점증하였으며, 이는 1950년대 후반 ‘국학’의 범주 하에서 중요한 연구의 표현으로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국가주의적 충동과 반공주의의 국제적 조류가 강하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국학’의 내용은 회고적이고 배타적이며, 편협한 성격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후 전개된 제반 상황 속에서 국학의 입지는 매우 비좁아졌다. 아울러 국학의식마저 점차 실종되어가는 추세였다.

이에 실종된 국학의식을 찾아 산발적으로 국학 혹은 한국학을 되새기는가 하면, 한편에서 ‘지역학적 의미의 한국학(Korean studies)’이 등장하였다. ‘한국학’의 명칭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산발적으로 논의되다가 특히 1990년대 이후로 그 주제와 주요한 논의를 형성해갔다. 즉 이 시기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사회주의권의 침몰과 민족주의의 발흥, 문명권의 충돌이 초래한 세계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초래되고 있었다. 이후 국내외 대학 내에서 한국학에 대한 분과, 강좌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경쟁적으로 한국학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한국학은 세계화시대 일종의 ‘전략적 연구영역’이 된 셈이다.

따라서 한국 연구에는 대체로 두개의 학술적인 조류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하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에서 ‘계승되는 전통의 기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본국학’, ‘조선학’, ‘국학’으로 대표되는 조류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학문적 영향 아래서 성립된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일부인 1960년대 이후의 ‘한국학’ 개념이다. 이에 한국 현실에서의 고유한 전통의 구성이나 작동이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새롭게 소개된 ‘한국학’ 개념은 쉽사리 한국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조류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고 자신들을 차별화하고자 했으며 거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한국학’이라는 ‘이질적인’ 조류보다는 ‘국학’의 범주로서 자신들의 연구를 정의내리는 것을 선호했다.<sup>3)</sup>

## 2) 한국학의 위상 정립과 연구방법론 논의

한국학에 대해 역량과 연구성과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 지금에 와서 “한국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다소 새삼스러운 것이다. 주지하듯 최근 30여 년 동안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빠짐없이 특별하게 힘을 들여 대단위 한국학관련 연구원을 설립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많은 연구성과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학의 범주 설정을 둘러싸고 복합적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학 연구의 과정에서 다양한 경향과 지향이 반영되고 계승되어 논쟁적이고 대치적인 성격을 띠어왔다. 첫째, 현상적인 문제로 인문학(특히 국사, 국문학, 국어학, 한국철학, 사상 등)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론의 상충, 전통학문 고유의 분과학적 연구방법과 통합·일반화적 연구방법의 대립, 지역과 세계, 이념과 실증 등이 섞이며 한국학의 개념 정의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하였다.

둘째, 한국학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다기한 경로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남북을 불문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목표에 따라 한국학연구를 축적, 주도해왔다. 다음으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해외 이산자 중에서 한국학에 관한 학술적인 노력이 돌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외교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국에 대

3) Kim Keong-il, 2004, "Introduction" (Pioneers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한 학술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학 연구에는 다양한 연구주체들과 목표 및 지향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 최근에 해외한국학의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한국학의 개념적인 혼선은 일단 다기적인 연구주체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한국학의 학문적 정합성 정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연관해서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이 제기될 때에도 조선학이 ‘학’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존재했다. 가령 현상윤은 ‘애국학’과 같이 제국의 지역학으로 보인다고 해서 조선학이라는 명칭에도 반대했지만, “조선을 한 개의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 데 모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각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주장을 통해 종합적·독자적인 ‘학(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회의했다.<sup>4)</sup>

2010년 한국학의 정리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한국인의 마음, 사랑, 음식, 책, 의학, 철학 등 가장 한국적인 스물 두가지 주제가 관련학자들의 글로 소개되고 있다. 편집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영하 교수는 본 작업이 한국학 개념 규정의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국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자임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에는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학문 분과별로 생각하는 한국학이 다르고 학자들마다 사고하는 한국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여 즉답을 피하고 있다.<sup>5)</sup>

결국 오늘날까지 한국학의 개념이나 범주 설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연구자의 관심과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이해되어 왔으며, 개념적 불명료성과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다.<sup>6)</sup> 국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연구영역을 거둬 정의하는 연구자와 새로운 한국학의 개념을 도입하여 활동하는 연구자 사이에 약간의 길항도 보인다. ‘전통 하나만을 떼어서 강조하고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 관념에 빠지기 쉬워 세계 조류를 외면한 감정에 흐르기 쉽다.’라는 지적과 ‘선진국이 후진국 연구의 편의상 붙인 입문, 초보, 소개서로서의 연구경향을 추수하며 구체적인 콘텐츠가 갖추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상호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국학(=자국학)계열과 한국학(=지역학, Area studies)계열은 학문하는 정신과 자세가 다르다고 하며 해외 학자들의 한국학 연구 참여를 분류하여 살펴기도 한다.<sup>7)</sup>

국내 주요대학에서 수행되는 한국학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생각보다는 한국학 자체의 개념 정의나 방법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던 듯하다. 그 경향성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학은 국학 위주의 학문 틀만의 고수가 아닌 사회과학을 포함한 학제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된다.<sup>8)</sup> 본래 한국학이 자기정체성, 즉 자아의 확인과 창조에 근본적인 뜻이 있으

4) T기자, 「조선연구의 기운에 際하야(3) 현상윤씨와의 일문일답」, 『동아일보』 1934년 9월 13일. 당시 사회주의자들도 ‘과학적 조선학’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데 대해, 실천활동을 반대한다는 이유와 함께 정체불명의 ‘학’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조형열, 2017,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과 ‘실천적 조선연구론」, 『한국사연구』 177, 256~259쪽). 이처럼 1930년대 당시에도 조선학의 학문적 체계성과 독자성에 대한 회의가 수반되고 있었다.

5) 주영하 편, 2011, 『한국학의 즐거움』, 휴머니스트.

6) 한말 일제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구동향을 검토하여 한국학의 방법론과 근대학문의 역사를 살핀 연구로 조형열, 2019, 「한국학의 기원에 대한 연구동향과 학문론적 방법론의 모색」,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의 형성』(제20회 근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2019.7)이 참조된다.

7) 김경일, 2003,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4, 161쪽.



나, 굳이 세계성을 외면하면 세계화 시대에 의미를 갖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일국적 시계를 넘어 전 세계에 한국학을 비추어보고 인류보편의 차원에서 의미를 갖도록 하는 일은 당연히 요망되고 지향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주제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한국에 관한 사회과학·인문과학의 연구분야 모두를 한국학으로 상정하는 입장은 냉정히 짚어보아야 한다. 한국학이란 한국에서 연구된 모든 것을 장바구니에 담아 놓는 식의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한국 사회·문화의 정수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한편 많은 학자들은 국학과 한국학의 두 명칭을 구별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에서 볼 때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국내용’의 국학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학을 일반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다. 학문에서 우리와 남들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학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명칭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도입한 방법에 따라 우리 자료를 다루고, 외국학자들의 학풍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국학의 의의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국학을 지향해야 하고, 국학을 세계화하는 학문을 한국학이라 명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학에서 이론 성과를 찾아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도 이야기한다.<sup>9)</sup> 우리에게 타당한 결론이 세계 전체에서도 타당할 수 있는가를 광범위한 비교연구를 통해 검증하여, 학문의 주체성과 보편성을 함께 확보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바람직하게 설계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견해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학의 콘텐츠 설정을 위해 한국학 자체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주제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학을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대학에서 ‘한국학 사업 10개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학 사업의 목표 및 지향과 관련하여 이렇다하게 내세울 만한 중심 주제나 사업 영역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표출시켜 “한국학의 개념과 위상 정립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국학을 둘러싼 국내외의 연구 경향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고 미래에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 주제나 연구영역에 대한 대규모의 장기적인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각성이 강조된 점을 참조할 만하다.

둘째, 동아시아적 시각과 세계사적 시각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학 발전의 자양분을 삼자는 것이다. 서구의 학문과 논리를 우리의 삶과 문화의 논리에 맞추어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서구적 잣대를 상대화하여 활용해야 된다. 서구적 가치를 상대화시킬 때 동아시아적 시각과 조응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상의 다른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여유도 생긴다는 것이다.<sup>10)</sup> 가령 동일 한자문화권임을 전제로 문학 분야에서 중국·한국·일본·베트남 사이의 보편적 문학(중국의 고전문학의 전용)과 각기 각국의 고유한 문학형식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비교문학연구와 보편성 및 특수성의 문제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분야에서 한국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국민회의운동은 상호간의 양상의 차이는 크지만 공통성이 폭넓게 내재한다고 본다.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역사인식 단위로 설정하고 상호의 한계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이 제기되고 있다.<sup>11)</sup>

8) 1981, 「(기획)종합학문으로서의 한국학 - 연구의 공동화모색-」, 『정신문화』 4-1.

9) 조동일, 2002, 「한국학연구의 새 방향」, 『한국학논집』 29, 8-9쪽.

10) 전형택, 2000, 「한국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논리: 아시아 전통과 근대 세계와의 관련에서」,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또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한국의 학자들이 미국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미국에서의 한국학은 지역연구 프로그램의 진범 아래, 비교 연구의 적용을 요구했고, 지역연구의 수단적 방법들을 제시하였다.<sup>12)</sup> 이러한 연구는 일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학자들에게 자극을 주었고 한국학이 동아시아적 전망에 지평을 넓혀가는 발전과정에 공헌하였다. 결국 비교 연구는 전통적 사례들의 비교가 명백히 정리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한 것이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아시아 및 미국학자들과의 협동과 교환이 존재하여야 한다. 일국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반성에 다다르려면, 세계적 맥락에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상의 선도적인 연구자들의 한국학 연구는 그 방법론에서 국내 분야의 연구수준을 제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학 분야에서 해외 연구자의 수는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다수의 해외 한국학 연구가 한국학 분야 내에서는 유명하더라도 각각의 분과학문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국학이라는 지역학 연구자로서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분과학문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한국학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11) 한국 역사학계에도 동아시아의 관점은 앞으로 붙잡고 씨름해야 할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단위로 역사가 서술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국사를 초월한 동아시아사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 현재의 필요, 그리고 미래의 당위가 함께 어우러져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중·일 지식인들과 정치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재의 경향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학계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며, 현장에서의 역사교육에도 반영하여 교사·교수자의 인식전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2) 대표적인 해외 한국학 학자로서, 미국 대학에서 초기 한국학자의 한 사람인 개리 레드야드(Gary Ledyard)의 연구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전역을 다루고 있었으며, 한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연구를 선용하고자 했다. 또한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동아시아 사회의 특징과 변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임스 팔레(James B. Palais)는 조선왕조의 실제양상에 대해 중국의 전통과 연관하여 이해하였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서 실학자 유형원에 대한 연구 역시 동아시아 체계의 맥락에서 수행하였다. 마티나 도이홀러(Martina Deuchler) 역시 여말선초의 변혁을 중국의 당송변혁기와 비교하였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작업은 한국전쟁에 대해 일본의 재건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와의 연관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만주사변-베트남전쟁과 관련지으면서 이러한 전쟁들이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들의 연구에서 ‘아시아 사회’라는 틀에 근거한 지식의 추출이라는 것이, 제국주의적 이론의 방법론과 유사한 측면이라는 것, 그로 인해 실제 아시아 사회의 역동적인 구조를 지나치게 일반화할 수 있는 우려도 더불어 지적되기도 했다. 해외 한국학의 흐름과 경향을 이해하는데 다음의 논고가 참조되었다.

강동규, 2013, 「시각의 다원화 및 경계 넘어서기 -학술단행본을 통해서 본 해외 한국학동향, 2007~2012-」, 『역사와 담론』 67.

곽수민, 2012,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 및 발전요인 연구」, 『정신문화연구』 35-3.

김 영, 2009, 「영국에서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연구동향」, 『한국학연구』 21.

박태균, 2018, 「해외 한국학 연구의 질적도약을 위하여」, 『역사비평』 122.

심재훈, 2013, 「추세, 안착, 공명 -영어권학술지에 나타난 한국학연구, 2007~2012-」, 『역사와 담론』 67.

윤은하, 2013, 「해외 한국학 제3세대를 바라보며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2007~2012)-」, 『역사와 담론』 67.

셋째, 한국학의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학의 연구범위는 기존의 분과별 연구범위들과 다양한 정도로 겹친다. 개별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학과 다른 분야에 동시에 관련되는 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어느 선을 넘으면 한국학보다는 다른 분야 쪽에 큰 비중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분류기준과 한국에 대한 이해에 핵심적인 주제와 확대된 주제 사이의 순위를 고려한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학이 각분과의 학제간 연구에 의한 통합적 성격을 띠는 것은 분명하나 기존의 분과 학문체제의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지식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통합을 의도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고유한 방법과 이론을 확립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개되면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학제적 연구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각 분과들에 고유한 방법과 이론들을 빌어와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에 있다. 이에 대한 점검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한국학 연구가 종합적 학문분야로서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면서 독자적인 분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은 불가능하고, 대학 내에서 학문 분과들의 세분화와 고착화 추세에 종속되면서 그 위상이 극히 축소될 것임이 예견된다. 각 대학의 학과, 학분 분야 편제상 분화와 개별화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되는 실태 속에, 실제 학문의 수요자인 학생이나 일반 독자, 특히 해외 연구자들의 다음과 같은 드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즉 민족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라고, 미래를 바람직하게 창조하는 방향·가능성·능력을 묻고 있으며, 외국에서 수행하는 한국학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세분되지 않고 지역연구의 통합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 거기에 응답하는 국내의 연구성과가 절실하게 되었다. 한국학에 포함되는 개별영역인 문학, 언어, 역사, 철학, 예술 등의 분야에 대해 상호관련과 내부연관을 밝히는 총체적인 연구를 깊이 있게 전개할 때 개별영역의 문제점이 제대로 해명된다고 본다. 지난하지만 한국학은 개별연구를 통합하여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일관된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한국학 연구지원 사업에서 지원분야가 지나치게 분산되는 데 따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국학 연구의 폭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도 있다. 즉 광범한 학문분야에 걸친 연구과제들은 한국학으로서의 의미를 얼마나 가질지 의문이 들 수 있는 연구주제·분야들까지 확대되어, 결국 한국학의 연구지원 대상은 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하면 모두 한국학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학이라는 학문영역을 너무 편협하게 한정시켜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겠으나 하나의 ‘학(學)’이라는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향할 연구주제와 그 적합성을 충실히 고민하고 논의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21세기가 진행되는 요즈음 분명 한국학은 한국인, 나아가 세계인이 공유하고 고민하는 학문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계속되고 있다.

### 3. 국내 지역연구의 전개와 연구방법론 정립의 모색

## 1) 국내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국내 지역학

많은 학자들이 탈중심의 다극화 사회가 되면 국가·정부권력 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개체성이 보다 중시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그동안 국학·한국학에서 다루는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어느 지방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전국 단위의 연구와 중앙학계의 이론 정립을 위한 사례로 인정했을 뿐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의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상위의 한국학 연구를 위해 지역학의 기초연구와 사례가 토대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민족국가 민족문화의 담론 속에서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말살할 수는 없다. 전국 단위의 연구만 힘써 지역학은 소홀하게 여긴 관습은 민족국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념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민족국가 형성과정의 주도권 장악여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집단 어떤 하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도 소중한 의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질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화’란 각 지방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과 특성을 신장시켜 나가는 추세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지방화의 진전은 경제생활과 지역개발의 측면, 그리고 문화생활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경주시키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특성화하려는 노력과 의식도 형성시켰다.

중앙집권적인 권력체계가 전개된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사회과학을 불문하고 이때까지의 연구경향은 지방차원의 미시적 접근을 소홀히 하고 거대 이론에 치중하여 국가수준에서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종래에 지방은 중앙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중심부와 주변부, 본점과 지점, 전체와 부분, 우월함과 열등함 등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후자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강원도의 경우 중심이 아닌 주변, ‘문화’가 아닌 ‘자연’, 생산이 아닌 소비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었다. 강원도와 관련된 학문적 담론 역시 한국 학계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지형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지역사회)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었다. 비록 국가차원의 현상으로 보이더라도 그 내면에는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사적인 담론과 전통 등이 구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한 지방사회를 설정할 때 그것은 공동체로서 동질적인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성향과 사회 경제적 세력들의 각축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지방수준에서의 정치적 행위와 경제활동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들 사이에 지속되어 오는 관계의 망과 문화체계의 이해 없이는 적절하게 해석되지 못한다. 현재라는 것이 과거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며 역사적 축적은 현재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학연과 새로운 학연의 존재형태, 마을과 생활조직, 경제적 관계, 역사를 되살리는 문화활동과 외부 세계와의 연계 조직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등의 학문 분과간의 실증적 연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방연구의 이론적 시각과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열병처럼 번지는 지역전통의 확립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풍수지리설에 근거

한 역사읽기나 지역의 풍경 감상하기, 그리고 지방 사람의 성향 인식하기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비과학적이며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가령 강원도에서 ‘암하노불(岩下老佛)’ ‘감자바위’의 해석에 대해 일희일비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풍수지리설이나 심리유형의 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구조와 문화체계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정치과정이든 경제활동이든 그것은 현지 주민들에 의하여 다양한 계산과 전략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다. 그 계산에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전통과 관습과 함께 현실적인 이익을 따지는 합리성과 이성적 판단이 함께 얹혀 있다. 이것이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지역학은 무엇이며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서 건립된 많은 연구소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당연한 질문으로 해당지역에는 얼마나 다양한 삶의 양식이 존재하는가? 지역을 구성하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연환경적 상황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역적 것’은 중앙이나 여타 다른 지역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여 지역에 대한 인식과 표상을 재정립하고 그 주변성을 극복할 토대를 공고히 다지려는 학문적 실천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대의 지역을 다룬 여러 연구들은 비록 관찰영역은 다양하게 확대되었으나 대부분 과거와 단절된 채, 현상유지에만 급급해하는 방식에 머물며 정책적인 대안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나마도 각 학문분야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상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지 못하다. 지역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조사도 대체로 관과 소수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만이 반영되었을 뿐 실제로 연구대상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관점과 의견, 요구를 바탕으로 한 것은 거의 없었다.

지역학은 무엇보다 기능적으로 나뉘어진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대상을 놓고 연구하여 얻은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에서 이루어진 삶의 총체성이라는 문제를 인식한 지역학은 더 이상 어떤 단일학문분야의 종속물이 아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대안이 이른바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학제적이라는 것은 분과학문의 존재를 인정된 위에서 분과학문 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것일 뿐이지 현상 자체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자는 인식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총체적인 삶에 대한 접근은 분과 학문적이어서도 안되고 학제적 방식에만 머물러서도 안되며 궁극적으로 통합 과학적이어야 한다. 의도적인 분절성을 배제해야 한다. ‘모든 것은 모든 다른 것들과 얹혀있다.’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사고(systemic thinking)의 인식을 기초로 하는 통합과학(unity of science)의 이념이 삶의 총체성이라는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sup>13)</sup>

또한 지역학은 ‘경계선상의’ 학문이기도 하다. 순수한 학문을 지향하면서도 실용적인 성과를 산출해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학의 작업은 학문적 순수성을 전제로 한 기초작업과 실용성을 담보한 장·단기 과제로 계기적인 작업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학의 우선적인 관건은 필요한 정보(역사, 인물, 문화 등)를 충분히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스

13) 전경수, 1997, 「지역연구의 방법을 위한 인식기초」,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 35~40쪽.

스로 깨닫고 그 내용을 지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학이 해당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이란 실용적으로 해석하면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문화적,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실용적인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정보의 축적과 배급, 홍보 및 관리의 전 측면에서의 전략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지역학의 초기 토대 구축단계에서 인문학적 연구의 중요성, 지방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지역학은 지역의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수많은 리더에게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정주민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함양시켜 발전의 동인 및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지역전통문화의 새로운 발견과 위상정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작업에서 가장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새롭게 진취적인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는 단초작업으로서의 지역학, 그것이 지역발전과 관련된 두 번째 필요성이다.

## 2) 국내 지역학 연구의 전망과 연구방법론 정립의 모색

국내에서의 지역학은 1993년 설립된 서울학연구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 지역학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역연구는 해당 지역소재 국·시립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부속센터, 민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학 연구의 문제점은 종합적 학문분야로서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면서 독자적인 분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설정하기보다, 대학 내에서 학문 분과들의 세분화와 고착화 추세에 종속되면서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학제적 연구 방식 역시 자신에 고유한 접근방식이라기 보다는 각 분과들에 고유한 방법과 이론들을 빌어와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학에 비해 후발적인 지역학이 자신의 고유한 방법과 이론을 확립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개된다면 향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학문에서의 주체의식의 확립이 중요한 것이다.

연구지원 분야만을 볼 때 한국학과 유사하게 지역학 역시 그 분야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 그것은 특정 지역 지역학 연구의 폭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도 있다. 즉 광범한 학문분야에 걸친 연구과제들은 지역학으로서의 의미를 얼마나 가질지 의문이 들 수 있는 연구주제·분야들까지 확대되어, 결국 특정 지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만 하면 모두 ‘○○학’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전개되고 지방문화의 활성화 사업으로 지자체의 연구비 지원이 강화되자 많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자신들의 연구가 모두 ‘○○학’·‘○○지방사’의 본령을 연구한 것처럼 기존의 연구까지 ‘○○학’으로 강조하는 모습도 보인다.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지역학의 연구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 어떤 주제, 어떤 자료, 어떤 분석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론의 범주화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때의 연구조차 지역학의 연구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다소 문제이다.

‘○○학’이라는 학문영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출범하고자 하므로 영역을 너무 편협하게 한정시켜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겠으나 학문의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체계를 세우기 어려운 분산된 연구결과물들을 지역학이라는 범주 속에 포함시켜 작업을 계속해 간다면 그 타당성에 공감받을지 적잖이 우려가 된다.

지역학과 관련된 개념적 혼란은 한국학의 연구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명확하게 연구분야가 정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분야이므로 다양한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역학의 실체는 점차 만들어가는 것이며 완성태는 어쩌면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작부터 어느 무엇도 범주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누군가의 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성립여부를 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겨진다.<sup>14)</sup> 지역학은 궁극적으로 ‘○○ Studies’에 머무르지 않고 ‘○○ology’, 즉 ‘-logy’를 지향하는 학문의 의지가 담겨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의 학문이 학문으로서의 모습, 즉 ‘○○학’이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확정해야 될 뿐 아니라 그 ‘○○학’을 지탱해주는 사상적·방법적 기초를 근간으로 하는 독특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분과 학문의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에만 지역학은 비로소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학은 단순히 ‘지역에 관한 다양한 학문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내 지역학의 연구과정에서 그동안의 지역 연구가 분과학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학자는 물론 전국단위의 학자를 참여시킴으로서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고 개방적으로 연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의 단위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 지역학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사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타지역과 비교가 가능한 연구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학의 연구범위가 행정구역을 넘어 동일문화권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타지역 및 특성이 유사한 국외지역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지역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학 관련 영역은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그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종교, 생업, 기술, 생태, 환경, 의료 등 다방면에 이른다. 관련 학술 분야로 지리학, 민속학은 물론, 동양, 인류학, 국제 관계학, 인구 통계, 지역 과학의 광범위한 여러 분야, 여러 종류의 필드 과학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 전문 분야 내에서의 특정 지역 연구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분야를 초월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야별 협력·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학 관련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분야별 자료의 연구 성과물 뿐만 아니라 연구자 관리, 연구기관, 연구발신기관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정보

14) 최근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지역학연구소가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연구의 형태로 이미 잘알려진 서울학연구소를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연구과정을 적극 체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는 기존 서울 시사편찬 위원회와 시정개발연구원이 존재한다. 서울학연구소는 서울학이란 이름을 걸고 시작하되 완성태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계간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도시계획사 건축사 등 비역사적 부문을 보조하기 위해 조선 후기부터 시작하여 일제시기·해방이후에 이르는 사료 탐사와 정리를 통해 다른 전공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제공 및 성과물에 대한 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연구에 있어 대외환경변화에 효율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한국사연구의 현황과 지향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한국학연구는 ‘학제간 융합’,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연구방법론의 틀’이 모색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학과들의 개별 분과적인 연구성과의 종합에 그치는 모습이 거듭 나타나고 있다. 한국학의 연구성과를 논할 때 핵심 분야는 단연 한국사 영역의 연구들이다. 인문학 가운데 한국사는 학문적 특성상 정치·경제·사회·사상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한국학·지역학 연구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실제 한국학·지역학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 한국사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인물·자료·주제에 따른 전문연구 외에 일반 주민으로서 지역학술운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해방 이후 진단학회를 비롯한 역사학회가 창립되어 역사연구자들의 결집 기회를 마련하였고, 1947년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남북으로 연구자가 나뉘어 활동하게 되었다. 한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사 전체를 망라하는 학회 외에도 지역별, 시대별, 분류사별 학회들도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각 대학에 사학과가 만들어지고 연구자들이 육성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밖에 서울시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 각종 관립·시립 연구소와 학과 중심의 학회, 역사문제연구소 등 연구기관도 창립되어 기관지의 발행과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 연구기관은 어느 학문분야 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연구자의 급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1970년대 역사학계의 입장과 상관없이 정권차원에서 대학의 교과과정에 국민윤리·교련과 함께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국학연구를 고취한 바 있었다. 많은 학회와 연구소가 조직되고 이에 따른 한국사연구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것은 역사적 각성이 나타났던 1980년대 이후의 시대적 상황과 긴밀히 관련된다.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한국사 연구자의 현황을 보면 1954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나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연구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최근 은퇴 정년기를 맞이하고 있고 학계의 세대교체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 연구자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당시 한국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1990년대에 들어와 민주화가 진행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대사에 대한 자료이용과 연구가 자유로워진 사실도 현대사 연구의 비중을 높여주었다.

한편 연구자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논문 편수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는 1년에 1,000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1년에 2,500~3,000여 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가 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 2010년~2022년 한국사연구회보 기준 논문/저서 통계<sup>15)</sup>

		총설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기타	총계
199호 (22년 7월 ~22년9월)	논문	1	10	156	55	236	172	84	45	759
	저서	5	0	13	2	17	41	5	12	95
198호 (22년 4월 ~22년6월)	논문	3	41	160	58	331	235	110	90	1,028
	저서	7	1	16	6	28	25	3	7	93
197호 (22년 1월 ~22년3월)	논문	0	22	120	54	249	209	106	52	812
	저서	2	4	8	5	30	21	10	6	86
196호 (21년 10월 ~21년12월)	논문	6	41	218	82	411	216	112	62	1,148
	저서	9	3	21	4	26	82	20	29	194
195호 (21년 7월 ~21년9월)	논문	6	15	176	50	251	167	106	34	805
	저서	8	3	19	3	29	41	10	12	125
196호 (21년 4월 ~21년6월)	논문	3	38	186	86	333	222	118	40	1,026
	저서	8	1	15	1	23	32	15	11	106
193호 (21년 1월 ~21년3월)	논문	2	11	116	48	186	174	104	29	670
	저서	7	0	9	4	23	37	15	4	99

	저서	논문
2022년 9월까지 (회보 197~199호)	274	2599
2021년 (회보 193~196호)	524	3649
2020년 (회보 189~192호)	619	3097
2019년 (회보 185~188호)	541	3341
2018년 (회보 181~184호)	534	3355
2017	494	3144

15)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무조건 통계에 잡히는 등 분류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본고에 담지 못했으나,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확인된다. 그밖에 대학개별연구소와 학과, 지자체 연구소, 문화원 등 개별 연구소 및 해외 한국학연구실태는 기록하지 못했다.

(회보 177~180호)		
2016 (회보 173~176호)	795	3388
2015 (회보 169~172호)	818	3558
2014 (회보 165~168호)	1010	3344
2013 (회보 161~164호)	1026	3209
2012 (회보 157~160호)	855	2490
2011 (회보 153~156호)	1532	3151
2010 (회보 149~152호)	1858	3428

이는 연구자의 급증 외에도 컴퓨터의 보급과 사료의 디지털화라는 현상과도 관련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주요 연대기와 사료가 디지털화됨으로써 단어 검색 등을 통한 원전 활용의 효율화로 논문 집필 작업이 용이해진 사실도 연구의 양을 격증시켰는데, 컴퓨터의 전자저널과 copy 기능의 활성화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연구성과를 게재할 수 있는 학술지들이 다수 간행되었다는 사실과 연구자들에 대한 평가가 계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도 크게 언급된다. 교수의 임용과 승진, 승봉에 학술지 등재를 전제로 한 계량적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쏠림현상처럼 거침없이 학술지 게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한 해에 출간되는 논문의 편수가 격증하는 현실은 기존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다양한 시각과 주제의 논문이 발표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연구 논문들을 읽고 정리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이 되어, ‘소화불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선행연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비슷한 논문들이 출간되기도 한다. 실제 필자가 경험한 심사과정에서 시대사를 규정한 모대학 신입교수선발에 임한 20여명에 가까운 지원자들의 연구성과에 유사한 제목의 논저들이 동시에 보였다. 학맥과 활동 지역을 달리한다하더라도 상호 연계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발표의 선후와 계승, 논쟁, 인용이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다. ‘양은 계산해도 질은 따지지 않는’ 정부의 계량주의적인 학문정책은 묵직한(?) 논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초를 다지고 몇 년을 기약하며 준비하는 학술논문보다 세부전공과 상관없이 대형 연구주제에 따라 배분되는 글들을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작성하거나 기획과제에 편승하여 이름을 내거는 논문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연구자는 입력(Input)된 것은 없는데도 출력(Output)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 기존 성과와 확실한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실적이 발표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국한된 자료를 가지고 쓴 가설적인 논문들이 정론으로 변하고 그 바탕 위에 또 다른 논문이 양산되는 운동법칙이 작용되었다.

치열하게 활성화되어야 할 소규모의 연구모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은 채 100점, 150점으

로 카운트되는 논문 수록을 위한 잡지 발간이 주목적이 되어버린 ‘학회활동’만(?)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의 자격만 획득하면 학회의 모든 재정운영은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편집자는 논문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많은 학회는 원고마감 연장의 메일을 매 분기 학회지 발간 시점마다 회원들에게 게시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심사가 엄격한 유구한 전통의 학술지에는 투고를 기피하는 기현상마저 생기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학문 후속세대에게 탓을 돌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학문을 왜곡시키는 데에는 우리 학문을 통제하는 한국연구재단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모든 학술잡지의 등재지화가 목전의 현실인 이때, 서로의 노력을 통해 보다 진중한 연구를 제대로 평가해 대접해주는 후원기관·학교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주기를 기원하게 된다.

한국사 내부의 또 다른 분과학의 개별성향은 심각하다. 현행 역사학의 분류체계는 공간과 시간의 두 축으로 짜여졌다. 먼저 공간을 축으로 해서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그리고 시간을 축으로 해서는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로 분류된다. 그다음 다시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엮여서 가령 한국사의 경우 한국고·중·근·현대사로 전공분야를 형성한다. 여기에 주제별 분류에 의해 정치사·사상사·경제사·사회사·문화사로 나뉜다. 이러한 분류법이 전공 영역의 경계를 가로질러서 역사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무엇을 위한 분류인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시대사별 사용 용어의 개념이나 시대이해를 위한 체계가 상이하여 연구자 상호간의 원활한 의견소통과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한국사의 연구발전을 위해 한국사 각 분야 및 시대 전공자 간의 긴밀한 교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사 논문에 사용되는 역사용어에 대한 반성적 검토 작업이 요청되는데, 자신이 전공하는 시대의 고유적 용어들이 너무나 남발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사 전공자들 사이에도 전공영역 간의 대화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전공하는 시대나 연구영역이 다른 사람들은 인접분야의 한국사논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연구의 내적 결함을 위한 학제간의 연구 지향도 중시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학계에서는 ‘쟁점’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 쟁점이 없다는 것은 토론이 부재하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발전이 없다는 결과로 나타난다. 최근 들어 한국학이나 국내 지역학의 발표장에서 토론자의 지적에 답하는 것 외에 지상을 통해 토론이 진행되고 동일 주제에 대한 진지한 반론과 재반론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경우는 드물다. 학술지 『한국사연구』에서 지면을 통한 신용하 교수와 고(故) 김용섭 교수 사이의 ‘독립협회’ 위상과 ‘경영형부농’의 논쟁은 한 사례이다.

관련하여 과거 한국사에 대해 맹목적으로 미화하거나 과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나, 그간의 이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 학계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면서도 주류학설에 배치되는 주장이 제기되면 토론을 거부하고 소위 ‘국뽕(?)’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고 불리하면 강단아카데미, 주류학설에 숨어버린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후학들이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연구의 수준과 방법론에 대한 제고, 연구주제와 내용에 대한 계승을 고려보다는 조야한(?) 개념을 가지고 독자를 자극하는 연구, 역사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저해하는 소재주의적인 단순 사례 연구에 안주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탓을 돌리려면 문제의 소재는 사회의 분위기에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국 연구자 당사자의 몫이다.

세계화·지구화된 현실공간의 확대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고립되지 않은 인간성을 기르기 위해서 역사는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의 역사학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줄 마지막 기회이다. 역사교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정체성은 나라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역사의 강의구성에서 범 인문학의 조류, 세계적인 역사학 연구의 흐름을 주목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주류학계의 입장만을 판박이처럼 나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서와 통사의 해석 설명 역시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며, 동일 사안에도 여러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수강생들은 스스로 이들 가운데 가장 논리적인 관점을 택해 보고, 그 논지를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역사인식과 시대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매 차수의 강의 주제가 지니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강의자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교육과정 목표는 역사적 사고기능에 중점을 두어 상세한 지식교육이 아닌 담론교육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의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위기는 사회환경 특히 적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대학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졸업생의 취업문제는 대학 생존의 관건이 되고 있다. 오늘날 전통적인 대학이념이 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도 거론되고, 대학이 다양한 요구에 모두 부응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도구주의에 매몰된 상황이 캠퍼스 곳곳에서 거센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도구과목이라도 열심히 가르쳐서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현실적이고 절박한 동기가 있고, 그것이 세계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외국어와 컴퓨터·코딩과목의 강화라는 교양과정의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치교육을 포기한 도구과목 중심의 교양교육은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을 저해할 것이며, 결국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국사에 대해 종전에는 필수로 부과하던 대학들이 대부분 선택으로 전환했고 영역별 선택 필수제도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대학에서의 한국사교육의 약화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인문교육을 약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국사교육이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한다면, 국사교육은 교양교육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민족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여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데는 한국사를 포함한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화’라는 화두가 그 어떤 단어보다 우선하는 현재 상황에서 결국 세계화 속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힘, ‘K문화’는 자국사와 자국문화의 뿌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문화의 시대에 우리의 살길은 한국사 및 문화역량 강화에 있음을 대학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설정에 반영되도록 강조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사태는 한국사 연구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도 관련되어 있다. 대학에서의 한국사교육이 쇠퇴하고, 학부제의 시행, 복수전공제, 자유전공제도 등으로 실용적인 학과에 밀려 역사학을 전공으로 택하는 학생들이 계속 적어지면서 대학에 자리 잡고 연구를 계속하는 일도 매우 어려워졌다. 그 결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사를 계속 연구하려는 학생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만 얽매 있다면 학문후속세대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한 안정적 생활기반의 제도적 보장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는 별도로 논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사 연구결과는 전문 사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 연구결과는 대중에게까지 환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연구 성과에 대한 대중화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전문역사학자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현재는 역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거친 집필자도 출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비전문가가 디지털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대중용 역사서를 급조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비전문가들의 역사학 관계 대중서·상업출판이 증가하고 있다.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으나 종종 네티즌들의 반응, 대중매체와 방송에서 벌어지는 사고를 목도하게 된다. 역사학계에 부과된 역사대중화의 문제는 ‘역사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의 개발이나 기술의 고민이 아니라 힘들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역할과 삶을 역사적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영역 주제의 연구에 대한 역사학계의 학적 발전과 이를 추동하는 역사학자·역사교육자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학교 교육과정개편에 대한 역사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역시 주목해야 한다. 역사교사는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유도하는 정체성 교육,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사연구와 역사교육, 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정체성 교육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지닐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는 연구의 결과 보급, 역사교육 방안 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역사연구자의 논의와 밀착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근대적 학문체계로서의 역사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90여 년 동안 한국사 연구자들은 각 시기마다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고민하고 그 시대의 과제, 학문적 혹은 현실사회에서의 실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 『한국사연구』에는 해방과 전쟁, 남북분단이라는 극도로 혼란된 공간에서도 학자의 본분과 학문의 본령을 지키고자 했던 선학들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다. 선학들이 봉착해야 했던 연구 환경과 그 지독한 척박함을 후속 세대인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학문세계는 진보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선배를 딛고 나아가는 젊은 연구자들이 많아야 우리 학문도 발전이 있다. 컴퓨터로 쉽게 살피는 시대가 아닌 청사진으로 복사하고 한자한자 자료를 읽고 번역하며 작업한 결과물인 선학들의 ‘대담한 가설’ ‘치열한 문제의식’을 오늘날의 학문수준으로 논하고 함부로 평가를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실용과 등치시켜 연구방법을 구태의연하다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분명 오늘날 한국사 연구자들의 힘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적이고 평면적이고 단편적이기 보다는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지향하고 체계적인 논문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문풍토를 조성하고 독자적인 한국사 방법론의 형성과 변화에 디딤돌이 되는 한국사연구회와 한국사학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공간과 자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길로 들어선 고려사 연구

문경호(공주대)

1. 머리말
2.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의 심화
3. 수증고고학과 역사학의 상호 보완
4. 맺음말

## 1. 머리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지 어느새 20여년이 지났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고려시대 역사연구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었다. 고려 건국과 경기·전라도 성립 1100주년 행사가 개최되었고, 고려시대 연구의 기초자료인 『고려사』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sup>1)</sup> ‘고려시대 문집류’, ‘고려 관련 중국사료’, ‘고려시대 금석문·문자자료’,<sup>2)</sup> ‘한국 중세 고고학 기초자료’<sup>3)</sup> 등 많은 자료들이 DB화 되었다.<sup>4)</sup>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8차례에 걸쳐 남북 역사학자들이 만월대 공동발굴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sup>5)</sup>

좀 더 세부적으로는 연구 분야에서도 몇 가지의 뚜렷한 변화가 포착된다. 기존 역사학의 주류였던 정치사와 경제사의 비중은 줄고, 사회사 또는 문화사 관련 연구가 증가했으며, 대외 관계 면에서는 전쟁사 중심의 연구보다 송·요·금·몽골과의 외교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북방민족 관계사 연구에서 거란어나 몽골어로 기록된 원사료를 분석하는 연구가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고고학의 발달이 중세사 연구에 끼친 영향도 간과하기 어렵다.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 도로 개설 등의 과정에서 고려시대 유적이 다수 출토되면서 문헌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고려시대 고고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잡으면서

---

1) 2021년 2월 17일에 보물 2021-6호로 지정되었다(<https://www.heritage.go.kr>). 한편, 『고려사』는 동아대 고려사연구사업단이 2009년에 역주 완역본을 간행하였다. 고려사 완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박종기, 2012, 『『국역 고려사』 완간과 학술적 의의』, 『석당논총』 54를 참조.

2) ‘고려시대 문집류’, ‘고려 관련 중국사료’, ‘고려시대 금석문·문자자료’ 등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사이트(<https://db.history.go.kr/KOREA>) 참조.

3) <http://smgogo.sookmyung.ac.kr>.

4) 홍영의, 2013, 『한국 중세 고고학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한국 중세 역사학의 고고학 자료 이용 활성화-』, 『한국중세사연구』 36.

5) <http://www.manwoldae.org>. 공동발굴조사단은 총8차례에 걸쳐 서부건축군 일대를 조사하여 금속활자 1점, 와전, 도자기 등 약 17,900여 점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1월 29일에는 잠시나마 개성 방문이 허용되어 110,549명이 다녀오기도 했다(통일부 북한자료포털-개성관광사업).



한국중세고고학회가 창설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2007년 태안선 출수를 시작으로 연이어 서남해 일대에서 고려 선박들이 출수되면서 해양사와 수중고고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사 연구는 연구의 공간이 한반도에서 동아시아로, ‘육지’에서 ‘바다’로 확장되고, 문헌 중심의 역사학이 고고학 자료를 활용하는 융합적 역사학으로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가 의미있는 변화이고, 각각의 연구 성과 또한 적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필자의 역량으로는 모든 분야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여몽 관계사 연구의 심화이고, 둘째는 수중 고고학의 발달에 따른 역사학과 고고학의 조우이다.

글은 크게 2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여몽 양국의 외교관계를 설명하는 틀과 시각을 분석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여몽 관계사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3~14세기 여몽 양국의 외교적 특징과 본질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일부 연구자들은 한자로 기록된 외교문서는 물론, 몽골어나 페르시아어로 기록된 사료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sup>7)</sup> 2장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성과와 의미

6) 여몽 외교와 교류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명수, 2019, 『몽골-고려 관계 연구』, 혜안.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개석, 2013,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이강한, 2013,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이명미, 2016,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장동익, 1994,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일조각.  
 장동익, 1997,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고명수, 2010, 『쿠빌라이 정부의 交通 通商 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 소위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의 성립조건 형성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보광, 2007, 『高麗·몽골(元) 관계 연구에서 『元高麗紀事』의 활용과 가치』, 『한국사학보』 29.  
 김장구, 2005, 「쿠빌라이 정권과 몽골제국의 발전」, 『동국사학』 41.  
 김장구, 2018, 「대몽골국 초기(1206~1259) 카라코룸으로 간 고려사신들」, 『이화사학연구』 57.  
 설배환, 2016, 『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설배환, 2020, 「중국에서 蒙元史 이해의 전통과 신경향 -“元朝史”에서 “제국사”로의 이행과 지체-」, 『中央아시아研究』 25-2.  
 이익주, 2009,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의 시각적 검토 -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27.  
 이익주, 2018, 「몽골(원)과의 외교」, 『한국의 대외 관계와 외교사』, 동북아역사재단.  
 최윤정, 2021, 「13세기(1219~1278) 몽골-고려 관계 재론 -소위 ‘六事’ 요구와 그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42.  
 최윤정, 2019, 「13~14세기 몽골과 고려의 부마들 -통혼의 정치적 의미와 고려왕권의 성격 재론-」, 『中央아시아研究』 24-2.
- 7) 몽골어를 활용한 여몽 관계 연구 또는 번역서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주목된다.  
 김장구, 2017, 「17세기 ‘몽문연대기’에 보이는 한국 관련 기록의 비판적 검토」, 『동국사학』 62.  
 박영록, 2018, 「『高麗史』 忠烈王 6년에 수록된 元朝 軍制 관련 공문에 대한 해석적 연구」, 『중국어문논총』 73.  
 박영록, 2014, 「『高麗史』에 수록된 蒙元公文의 用語와 翻譯에 대한 검토」, 『대동문화연구』 85.  
 라시드 앳 딘 지움, 김호동 역주, 2002, 『부족지』, 사계절출판사 ; 2003, 『칭기스칸기』, 사계절출판사 ; 2005, 『칸의 후예들』, 사계절출판사 ; 2018, 『일칸들의 역사』, 사계절출판사 ; 박원길 역,

를 살펴보려 한다.

3장에서는 수중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그것이 고려시대 해운과 청자, 목간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수중 고고학은 1976년에 신안선이 처음 출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완전히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자리를 굳혔다. 2000년대에만 해도 십이동파도선, 태안선, 마도선 등 8척이나 되는 고려 선박이 청자, 목간, 각종 생활용품 등과 함께 출수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sup>8)</sup> 수중 출수 유물은 단순히 유물로서의 가치만 갖는 것이 아니다. 선박과 함께 출수된 유물들은 당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당시의 사회·문화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수중 출수 유물을 선박, 목간, 도자기와 생활용품으로 나누어 각각의 연구 성과와 의미를 짚어볼 것이다.

본고는 고려사 전체의 연구 동향을 살피고 전망을 제시하기보다 2000년 이후 고려사 연구의 특징적인 분야를 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나마도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니 주제에서 벗어난 의미있는 연구성과는 다루지 못하였다. 양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시켜 보지만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2.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의 심화

### 1) 여몽 관계를 이해하는 분석틀의 변화

원말의 문인 권형(權衡)은 ‘지정 이래 원의 궁녀 중 태반이 고려 여성이니, 사방의 의복과 신발, 모자와 기물이 모두 고려의 것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했다.<sup>9)</sup> 유사한 시기에 활동한 내현(洒賢)도 고려 출신 여인들의 화려한 생활을 풍자하여 ‘이내 몸은 삼한의 여인이 될 수 없음이 한스럽구나!’라고 한탄했다.<sup>10)</sup> 이들 자료만 보면 고려에서 끌려간 궁녀들이 원의 궁전에서 화려한 삶을 살며 고려의 풍속을 유행시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자료가 기존의 궁녀에 대한 시각을 수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충렬왕 때의 공신 홍규(洪奎)는 딸이 궁녀로 끌려갈 상황이 되자 궁여지책으로 머리를 깎았다가 가혹한 형벌을 받고 해도(海島)로 귀양을 갔다.<sup>11)</sup> 하나뿐인 딸을 궁녀로 보내고, 그것이 병이 되어 세상을 떠난 수녕옹주 김씨(壽寧翁主 金氏, 1281~1335)의 사연은 딸을 빼앗긴 어머니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준다.<sup>12)</sup> 권형과 내현의 글은 고려에서 원으로 끌려간 여인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사에서 궁녀는 여전히 많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2017, 『몽골비사』, 몽골비사세계전파재단.

8) 본고 각주 61, 66, 67 참조.

9) 이명미, 2022, 『고려, 몽골에 가다』, 세창미디어, 37쪽, 권형의 『庚申外史』에서 재인용.

10) 이명미, 위의 책, 30쪽,洒賢의 ‘新鄉嫗’에서 재인용.

11) 『高麗史』 권106, 列傳19 諸臣 洪奎.

12)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 금속문·문자자료 ‘王愍妻金氏墓誌銘’

비단 공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른바 원 간섭기라고 불리는 13~14세기에 고려는 몽골로부터 많은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수탈을 당했다. 관제가 격하되고, 몽골의 일본원정에 군사(軍士)·군선(軍船)·병량(兵糧)을 조달해야 했으며, 감당키 어려운 공물을 보내야 했다. 이 시기 고려가 독자적인 국가였음을 말해주는 근거로 이곡(李穀)이 원 황제에게 보낸 글이 간혹 인용되기도 하지만<sup>13)</sup> 그것이 곧 고려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독립국’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자들이 1359년 고려가 공식적으로 몽골과 강화를 맺고 난 후 고려왕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규명하려 했던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sup>14)</sup>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 국내외의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은 대몽항쟁, 왕실 혼인, 원의 간섭과 고려의 반원정책, 경제수탈, 문화교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sup>15)</sup> 1990년대 이후에는 양국의 관계를 전통적인 책봉·조공 관계와 비교하여 이해하려는 시각이 두드러졌다.<sup>16)</sup> 이익주의 ‘세조구제론(世祖舊制論)’이나 모리히라의 ‘투하령론(投下領論)’ 등이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주장이다.

이익주의 세조구제론은 1260년 8월 원 세조가 원종에게 보낸 조서에 있는 ‘불개토풍(不改土風)’의 원칙에 따라 고려가 독자적인 왕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대 관계를 지속한 것이 여원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틀이라는 주장이다.<sup>17)</sup> 이익주는 여원 관계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의 특수성, 예컨대 ‘친조(親朝)’, ‘왕실의 혼인’, ‘6사’, ‘설역(設驛)’ 등이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책봉·조공 관계와 매우 유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8)</sup> 고려인들이 몽골과 고려의 관계를 기존 강대국과의 관계와 혼동한 것은 정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다.<sup>19)</sup> 몽골의 고려 간섭기구로 이해했던 정동행성의 경우도 실제로는 고려왕이 승상을 맡고 관리 임명권을 행사했으므로 원의 실제 영향력은 절

13) 『高麗史節要』 권25, 忠肅王 後4년 윤12월, “세조 황제께서 공주를 하가(下嫁)시키시고 인하여 조서를 하사하시어 권면하고 타이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의관과 국가 의식(典禮)은 선대의 풍속을 무너뜨리지 말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 풍속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으니, 지금 천하에 임금과 신하가 있고 민(民)과 사직이 있는 곳은 오직 삼한(三韓) 뿐입니다.”

14) 이명미, 2016,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해안.

15) 아래의 연구 성과가 대표적이다.

강재광, 2011,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의 對應』, 경인문화사.

김당택, 1998, 『元干涉下の 고려정치사』, 일조각.

윤용혁, 1991, 『고려대몽항쟁사연구』, 일지사.

윤용혁, 2000, 『고려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윤용혁, 2014, 『무인정권 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해안.

이개석, 2007, 「大蒙古國-高麗 關係 연구의 재검토」, 『사학연구』 88, 45~48쪽.

이강한, 2010, 「‘친원’과 ‘반원’을 넘어서」, 『역사와 현실』 78, 105~159쪽.

16) 이개석, 위의 논문, 46쪽. 이 글에서 저자는 장동익이 종래 大元-高麗 두 정치세력 사이의 관계로 보고 있던 麗元關係의 이해를 大蒙古國과 그 外藩들 사이에 맺어지는 關係라는 비교사적 지평에서 처음으로 검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17) 이익주, 1996, 「고려·원 관계의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36, 19~20쪽 ; 박종진, 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105~207쪽.

18) 이익주, 위의 논문, 28~31·36~38쪽.

19) 이익주, 2010, 「세계질서와 고려-몽골 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175~211쪽. 저자는 여몽 사이에서 책봉적인 요소(책봉, 인장의 수여, 연호와 반력)과 책봉·조공 이외의 요소(친조, 6사, 군대주둔)가 모두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대적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모리히라는 고려의 왕이 부마이자 고려국왕에 책봉되면서 고려 영토가 ‘카안 울루스의 투하령’으로 변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20)</sup> 고려는 본래 복속국이 아니었으나 1281년 충렬왕이 원 세조의 사위가 되면서 고려국왕은 ‘부마고려국왕’이 되었고, 그에 따라 고려의 영토는 부마에게 하사된 독자적인 ‘카안 울루스의 투하령’ 중 하나처럼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고려왕이 몽골로부터 부여받은 ‘부마’와 ‘고려국왕’ 중 부마가 고려왕의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고려에는 통치기관인 왕부(王府)가 설치되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sup>21)</sup> 그것은 정동행성을 형식적인 통치기구로 이해하고 고려의 자율성을 강조하려 했던 기존의 견해와는 다소 다른 것이었다.<sup>22)</sup>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페르시아어로 제작된 『集史』가 번역되고, 『元高麗紀事』, 『몽골비사』, 『元史』 등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원사』를 중국사가 아닌 몽골사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을 중국 왕조의 대원(大元)이 아니라 대몽골 울루스 중의 하나인 ‘카안 울루스’ 또는 ‘쿠빌라이 울루스’로 파악하려 한 김호동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23)</sup>

김호동은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서방 울루스 분립의 배경, 이중적인 여몽관계의 성립 배경, 정동행성 성격 변화의 계기, 세조 구제의 체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논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sup>24)</sup> 그 중 첫째는 몽골이 대원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중통과 같은 연호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중국적인 왕조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대원이 중국식의 국호가 아니라 ‘예케 몽골 울루스’의 한자식 명칭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몽골제국과 고려의 관계에 대해서는 1260년에 고려가 몽골에 내부했을 때는 몽골이 단일체로서의 대몽골 울루스였으나 쿠빌라이 시기에 대몽골 울루스가 분할되면서 고려는 여타 내속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왕국(카안 울루스의 속국왕)’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가 속국이지만 부마이자 고려국왕이 독자적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울루스’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쿠빌라이 사후 ‘예케 몽골 울루스’의 이상이 깨지면서 고려도 국왕 지배 아래의 속국보다는 부마 예하의 속령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군사기구인 정동행성이 1299년 내정 간섭기구로 변질된 것이나 그 뒤에 입성론이 제기된 점, 불개토폰을 내세운 세조구제가 대

20) 모리히라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익주는 회의적이다. 충숙왕과 충혜왕은 혼인 전에 이미 고려 왕의 책봉을 받고, 결혼 후에 부마의 지위를 얻었으며, 충목왕과 충정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지 않았으나 고려왕의 지위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려국왕의 지위만으로도 고려 인민과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익주, 위의 책, 184쪽).

21) 森平雅彦, 1998, 「駙馬高麗國王の成立 -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

22) 이개석, 2013, 『고려-대원관계연구』, 지식산업사, 29~30쪽.

23) 杉山正明은 이 시기를 대원 울루스, 김호동 ‘카안 울루스(쿠빌라이 울루스)’라고 지칭하고 있다(杉山正明, 1995, 「大元ウルスの三大王國 -カイシャンの三大王國とその前後-」, 『京都大學校文學部研究紀要』 34, 105쪽).

24) 金浩東, 2006, 「몽골帝國과 大元」, 『歷史學報』 192.

金浩東, 2013, 「몽골제국의 세계정복과 지배: 거시적 시론」, 『역사학보』 217.

金浩東, 2015, 「몽골제국의 ‘울루스 체제’의 형성」, 『東洋史學研究』 131.

金浩東, 2016, 「울루스인가 칸국인가: 몽골제국사 이해를 위한 새로운 접근」, 『中央아시아研究』 21-2 등 참조.

원 말까지 영향력을 가진 것도 몽골 제국의 통치자들이 단일제국의 이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실제로 그의 주장처럼 1259년에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났을 때 쿠빌라이는 카안이 아니었다. 고려가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 쿠빌라이와 신속 관계를 맺은 것은 1260년이었다. 당시 쿠빌라이는 칭기스칸 이래의 관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복속한 고려를 제국의 외연적 속국으로 간주하고, 독자성을 인정할 것일 뿐 완전한 정치독립체로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쿠빌라이가 권력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아릭 부케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왕들에게 울루스를 분할하여 위임 통치권을 주는 과정에서 고려 또한 그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국가 지위를 얻었다.

위의 주장들이 발표되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와 반론이 거듭되었다. 그것은 2013년에 발표된 이개석의 저서 『고려-대원 관계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개석은 ‘세조구제론’, ‘고려국왕부론(투하령론)’, ‘카안 울루스 내속국론’ 등과 같은 분석틀이 13~14세기의 양국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각각의 의미와 한계를 도출하였다. 먼저 이익주의 주장은 정동행성이 국가로서 고려와 병존하는 특별한 성격을 갖는 점을 포착하기는 하였으나 세조구제의 전제조건인 6사의 핵심적인 의무가 다른 점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호구의 조사와 다루가치 파견이 그것인데, 이개석은 그 대체기구가 부마고려국왕의 왕부라고 이해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개석은 모리히라의 부마고려국왕론을 이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틀이라고 평가하였다. 선행연구가 대개 양국의 혼인 관계에 주목하여 고려 왕실의 지위와 통치권 행사가 얼마나 독립적이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있었다면, 모리히라의 연구는 왕부를 통해 몽골의 통치권이 고려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처음으로 탐색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왕이 고려국왕과 부마 가운데 부마의 지위가 앞선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sup>25)</sup>

국왕과 부마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일치된 것이 몽골 제국 내에서도 특이한 현상이었다고 주장한 김호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개석 역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김호동의 주장 중 쿠빌라이와 고려 태자(후의 원종)가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고려의 선택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이개석은 고려-몽골의 관계를 크게 ① 1260년 원종 즉위부터 1269년 원종 폐위와 복위를 거쳐 삼별초가 진압되는 1273년까지, ② 충렬왕이 즉위하는 1275년부터 1278년 정동행성이 설치되기 전까지, ③ 1278년 정동행성이 설치된 시기부터 공민왕 대에 폐지될 때까지로 나누어 각 시기 여몽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살펴 봐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개석은 부마고려국왕의 왕부비체치[王府biciγci]가 고려 안의 몽골 권력 기관 중 일부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려의 비체치는 세조구제로 몽골이 고려의 배타적 통치를 허용한 새로운 관제이자 고려 왕부의 속관 가운데 하나였음을 연구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5) 森平雅彦, 1998, 「駙馬高麗國王の成立 -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 ;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10~111쪽(이익주, 2010, 「세계질서와 고려-몽골 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182쪽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여몽 관계를 이해하는 시각 또는 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자에 따라 투하령으로 보는 견해부터 형식적인 간섭에 불과했다는 시각까지 초점이 매우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려는 견해부터 시기를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살피는 견해까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주장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를 파악하는 시각(원칙 또는 틀)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른바 학계에서 ‘원 간섭기’라고 부르는 13세기 중후반부터 14세기 후반까지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이전 고려가 주변 강대국과 형성한 책봉관계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한국 학계에서 채택한 ‘간섭기’라는 말 속에는 그러한 복잡한 사연이 담겨 있다. 당시 고려인들은 여몽 관계가 송·요·금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13~14세기 양국 관계에서는 기존의 책봉관계와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확인된다. 특히, 친조(親朝), 통혼(通婚), 납질(納質), 설역(設驛) 등은 고려의 외교사에서 유래 없던 일이다. 그럼에도 원은 고려왕을 여전히 외국의 왕으로 대우하였다.<sup>26)</sup> 종전에는 그것을 쿠빌라이와 원종 사이에서 약속된 세조구제에서 찾으려 했으나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강대국의 선택에 따라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요소들에게 대한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 몽골의 대외정책과 고려인들의 몽골에 대한 인식, 시기에 따른 몽골제국의 세계관 변화, 이른바 세조구제의 실질적인 영향력, 몽골이 고려와 지속적으로 통혼한 이유, 고려인들의 몽골에 대한 인식 변화, 요·금·몽골·명과 고려 사이의 외교에서 확인되는 공통점과 차이점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쿠빌라이 이후에도 몽골 제국이 김호동의 주장처럼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통치관과 통치질서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원사』, 『고려사』 또는 『명사』에 투영된 외교관을 토대로 당시의 양국 관계를 파악하는 것 만크이나 『집사』<sup>27)</sup>를 중요하게 인정하는 연구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다.<sup>28)</sup> 그것이 비록 1차 사료라고 하더라도 몽골인 또는 몽골 치하의 외국인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자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지식과 인식을 넘어서 수 없고,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재해석될 때에 또다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오독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여몽 양국은 서로의 관계를 오해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외교의 방향을 몰아가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거나 협상해 나갔던 것일지도 모른다.

## 2) 여몽 외교와 국서 교환

전근대 외교사 연구에서 사신의 왕래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 유지 또는 단절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당시에는 사신의 파견이 곧 국서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사신 왕래 기사를 분석하면 어떤 외교적 사안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필

26) 이익주, 2010, 앞의 책, 210쪽.

27) 라시드 앳 딘 저, 김호동 역, 2005, 『집사』 1~3, 사계절.

28) 원대 고려 관련 기사에 관한 연구는 장동익, 1997, 『元代麗史資料集成』, 서울대학교출판부의 역할이 컸다.

수 있다. 원 간섭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사신의 왕래가 많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신은 단순히 국가 간의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초기의 사신 왕래는 각종 갈등의 유발점이었으나 점차 양국 관계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고려 국왕과 원의 유력한 정치인이 왕래하는 정치 집단 간의 교류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 사신 왕래와 국서 교환의 양상을 살피는 것은 여몽 관계의 형성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러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래에는 몽골 사신의 역할과 쿠빌라이 이후 몽골에서 외교와 관련된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sup>29)</sup> 충렬왕 이후 여몽 관계의 전개 과정에 따라 여몽항쟁기의 외교, 강화 체결 이후의 외교, 부마국이 된 이후의 외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시기별 사신의 역할과 의미, 여몽 간 사행 파견의 배경과 목적, 영접의례 등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sup>30)</sup> 이 과정에서 몽골의 사신이 단순히 카안의 명령문서를 전달하는 관인 또는 관직자가 아니라 조정 또는 그에 준하는 정치세력이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sup>31)</sup> 여몽 양국의 초기 외교가 갈등관계로 비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국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신 왕래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살펴 볼 부분은 고려왕의 친조와 관련된 양국의 외교적 교섭에 관한 것이다. 원 간섭기 이전에는 책봉·조공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국왕이 친조하는 일은 없었다. 거란 2차 침입 때 현종의 친조를 조건으로 거란군이 물러간 사례가 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친조는 사신 왕래의 일면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왕의 친조는 단순히 몽골의 칸을 만나 문안하고 친목을 다지는 수준을 넘어 외교적 사안을 협의하거나 결정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었다. 따라서 원 간섭기의 친조는 외교의 한 갈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국왕의 친조와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원종~충렬왕 시기의 친조를 집중 조명한 정동훈의 연구가 참고된다.<sup>32)</sup> 저자에 따르면 원종은 친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충렬왕은 직접 친조를 자청하기도 하는 등 현안의 문제 해결에 친조를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또한, 국왕

29) 船田善之, 2006, 「元代の命令文書の開讀使臣について」, 『東方學』 111 ; 梁英華, 2008, 『蒙元時期遣使高麗研究』, 北京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舒健, 2008, 『蒙元時期高麗來華使臣研究』, 南京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苗冬, 2010, 『元代使臣研究』, 南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30) 여몽 양국의 외교, 사신 교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논문이 참고된다.

윤은숙, 2012, 「여·몽 관계의 성격과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중국 학계의 ‘책봉과 조공’ 관계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5.

이명미, 2015, 「고려-몽골 간 使臣들의 활동 양상과 그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43.

이명미, 2015, 「元宗代 고려 측 對 몽골 정례적·의례적 사행 양상과 그 배경」, 『한국문화』 69.

정동훈, 201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98.

정동훈, 2017, 「고려 元宗·忠烈王代の 親朝외교」, 『한국사연구』 177.

정동훈, 2017, 「고려·원 관계 초기 원 使臣의 來往과 외교 관계의 변화」, 『인문학연구』 35.

정선용, 2002, 「趙沖의 大蒙交渉과 그 政治的 意味」, 『震檀學報』 93.

森平雅彦, 2009, 「13세기 전반에 있어서 麗蒙交渉의 한 斷面 -몽골 관인과의 왕복문서를 중심으로-」,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31) 윤은숙, 2017, 위의 논문, 212~213쪽.

32) 정동훈은 고려왕의 친조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눠 살폈는데, 제1기는 원 세조~고려 원종(1260~1274), 제2기는 원 세조~고려 충렬왕(1274~1294), 제3기는 원 성종~고려 충렬왕(1294~1307)에 해당한다(정동훈, 2017, 앞의 논문).



의 친조는 대개 상주자(上奏者)인 충렬왕과 배주자(陪奏者)인 원의 관리가 참여하여 통역관을 거쳐 대화하는 어전주문(御前奏聞)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충렬왕이 상주하면 세조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한림원의 비직자들이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원종과 충렬왕의 친조를 천자와 제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근(朝覲), 몽골이 정복 지역에 요구한 6사 중의 하나인 군장의 친조, 몽골 제국의 중요 인사들이 모여서 거행하는 쿠릴타이의 참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초기의 고려 국왕 친조는 육사 중의 하나인 군장 친조의 의미였으나 성종 테무르 재위 시기에는 쿠릴타이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충렬왕이 쿠빌라이를 찾아가 친조할 때의 장면은 골제국의 독특한 의사 결정 방식인 어전주문(御前奏聞)형식을 보이는데, 이것은 동아시아 전통국가에서 보이는 친조라기보다 몽골제국의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명미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여몽 관계에서의 친조는 외형적으로 중국 고전에 규정된 제후의 친근에 해당하지만 내용면에서는 몽골제국의 쿠릴타이에 참석하는 성격을 띠었다고 한다.<sup>33)</sup> 동아시아 전통왕조에서 나타나는 친조의 성격과 유목민족으로서의 몽골 전통인 쿠릴타이의 참석이라는 면모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연구자들 간에 다소 시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몽 양국의 교류는 강동성 전투 이듬해인 1219년(고종 6) 1월에 형제 맹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sup>34)</sup> 이후 요동 세력에 주둔한 몽골 세력은 사신을 보내 공물을 요구하거나 입공을 요구하였다. 같은 해 포리대완(蒲里岱完) 등 10여명이 입공을 재촉하는 조서를 가지고 고려에 왔는데, 모두 털옷과 털모자를 쓰고, 활과 화살을 맨 채로 정전에 들어와 왕과 신하들을 놀라게 했다.<sup>35)</sup> 몽골 이전에도 고려는 거란(요), 여진(금)과 사신 교류를 하였으나 그들은 몽골처럼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또한, 고려 왕실의 빈례(賓禮)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다. 몽골 사신이 털옷과 털모자를 쓰고, 활과 화살을 그대로 메고 조정으로 들어와 고려왕의 손에 국서 쥐어준 사건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1221년(고종 8)에는 저고여가 동여진인과 함께 고려에 들어와 많은 양의 공물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후 양국의 외교는 고종~충렬왕 대에 양국의 외교 관계가 안정될 때까지 많은 갈등을 겪었다. 그것은 이전의 빈례에 따라 사신을 주고받던 것과는 다른 형태였을 뿐 아니라 중앙 조정 외에 다른 정치세력들로부터 여사(餘使)가 자주 파견된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sup>36)</sup>

한편, 김윤정의 연구에 따르면 원에서 파견된 사신들은 다양한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원의 문서전달 체제 정비과정에서 직성사인(直省舍人)으로 정리되었으나 양국의 외교 사안에 따라 다양한 관직의 사신이 파견되는 현상은 몽골이 상도로 쫓겨 간 후까지도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여몽 양국의 사신을 둘러싼 갈등과 조율은 원의 체제 정비과정인 동시에 고려의 대응이라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33) 이명미, 2016, 「고려국왕의 몽골 入朝양상과 국왕권의 존재양태」, 『한국중세사연구』 46, 216쪽.

34) 이개석, 2013, 「여몽형제맹약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 사료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고려-대원 관계연구』, 지식산업사, 64~125쪽 ; 윤은숙, 2012, 「여·몽 관계의 성격과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동북아역사논총』 35 ; 고명수, 2015, 「몽골-고려 형제맹약 재검토」, 『歷史學報』 22 ; 이익주, 2016, 「1219년(高宗 6년) 고려-몽골 ‘兄弟盟約’ 再論」, 『東方學志』 175 등에 자세하다.

35) 『元高麗紀事』太祖 14년 9월 11일.

36) 김윤정, 2017, 「고려·원 관계 초기 원 使臣의 來往과 외교 관계의 변화」, 『인문학연구』 35.

저자는 또한 여원 관계의 정비 과정에서 빈례의 변화, 다원적 외교 창구의 존재, 사신을 통한 원 영향력의 강화 등이 나타난다는 점을 포착하였다. 그것은 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가 정비되는 가운데 13~14세기의 여원 외교는 표면적으로는 사대 관계 또는 책봉·조공 관계라는 외형적 틀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안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이해관계가 관철될 수 없는 외교의 상대성,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였다.

여몽 간의 외교관계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몽골에서 보내온 문서의 형식과 해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sup>37)</sup> 그 중에서도 『고려사』에 수록된 몽골 외교 문서 속 단어들의 해석을 시도한 박영록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다. 저자는 13~14세기 몽골과 북방 민족 사이에서 사용된 공용어[漢兒言語]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몽골에서 보내온 문서 속에 새로 등장하는 단어들의 용례를 살폈다. 예컨대 몽골 외교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准奏’의 경우 蒙元 공문에서 ‘准’은 크게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한다.<sup>38)</sup> 하나는 명령어로서 ‘준수하라’이며, 또 하나는 ‘비준한다’, ‘승인한다’는 판정의 서술이다. 몽골 국서에 등장하는 ‘准呈(보고 올린 내용을 승인함)’, ‘准擬([하급부서에서] 의논하여 결정한 내용을 승인함)’, ‘准奏(상주 내용을 비준함)’ 등은 후자처럼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不以是, 何人等”<sup>39)</sup>의 경우 통상적인 번역은 “부당하게”로 해석되는데, 그것은 “以是”에 대한 해석일 뿐 “何人等”은 생략된 것이라 한다. 따라서 그것은 “不以是何人等”으로 이어서 해석해야 하며, “不以” 자체에 “~를 막론하고(無論, 不管)”의 의미가 있으므로 ‘어떠한 사람임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0)</sup>

‘宣諭’·‘省諭’에 대한 해석도 흥미롭다. 전통적으로 ‘宣諭’와 ‘省諭’는 ‘잘 타이르다’, ‘계도하다’ 등으로 해석해 왔으나 몽골어에서는 ‘某某에게 알린다’, ‘某某에게 이하의 내용을 알리노라’ 또는 ‘포고하노니’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한다.<sup>41)</sup> 그러므로 ‘請照驗(驗)’의 경우도 ‘잘 조사해 보길 바란다.’라기보다는 ‘(이상과 같이 공문을 보내니) 살펴서 시행하기 바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sup>42)</sup> 저자가 제시한 해석 방법은 전통적인 한문의 해석과 유사하면서도 다소 다른 느낌으로 전달된다. 당시 고려인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국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류병재는 몽골어가 한자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본래의 발음과 다르게 표기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어대사전』에 수록된 내용 중 칭기즈칸은 칭기스칸, 테무친은 테무진, 쿠빌라이는 코빌라이, 쿠릴타이는 코릴타이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3)</sup> 쿠빌라이를 ‘중국 원나라의 황제’로 표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7) 鄭東勳, 2016, 『高麗時代 外交文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록, 2014, 「『高麗史』에 수록된 蒙元公文의 用語와 翻譯에 대한 검토」, 『大東文化研究』 85.

38) 박영록, 위의 논문, 426쪽.

39) 『高麗史』 권25, 원종 3년 7월.

40) 박영록, 앞의 논문, 429쪽.

41) 박영록, 위의 논문, 431~432쪽.

42) 박영록, 위의 논문, 436쪽.

43) 류병재, 2021, 「한국의 몽골사 연구 30년, 회고와 전망」, 『몽골학』 65, 116쪽.

이상 살펴본 것처럼 역사 연구, 특히 몽골 관련 역사 연구는 『원사』와 『고려사』를 기본으로 하는 데에서 벗어나 페르시아어로 기록된 『집사』를 참고하면서, 당시의 어휘를 살피는 형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이라고 생각된다. 역사학자들이 본래의 영역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면서 다른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범주를 넓혀 간다면 당시의 사실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3) 환관과 공녀의 징발

개경 환도 후인 1271년 8월 30일, 고려 태자 왕십은 상서우승 송분, 군기감 설공검, 호부 낭중 김서 등 관료 20명과 명문가의 자제 20명, 서리 100명을 거느리고 원으로 갔다. 왕십은 3년 동안 대도에서 숙위하다가 쿠빌라이의 딸과 혼인했으며, 부왕이 세상을 뜨자 고려왕에 임명되었다. 이후 고려 왕자는 왕이 되기 전에 원의 대도에 가서 일정 기간 숙위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자 고려에서는 하정사, 하성절사 등으로 불리는 정기사절을 비롯하여 진하, 사은, 주청 등 여러 가지 명목의 사신단이 대도에 갔다. 충선왕의 경우에는 즉위 후에도 계속 대도에 머물렀으므로 전지(傳旨)를 받드는 관리들이 수시로 대도에 드나들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문물 교류가 크게 증가하였다.

여몽 양국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수탈’이라는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sup>44)</sup>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인적 교류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증가하였다.<sup>45)</sup> 주로 연구 대상은 학자, 환관, 공녀(궁인)들이었다. 특히, 환관과 공녀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그것은 숫자적으로 그들의 수가 가장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환관과 공녀들에 대한 연구 성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의 조정에 고려인 출신 환관이 다수였음은 『원사』 「환자열전」에 남송 출신 환관 이방녕과 고려 출신 환관 박불화가 나란히 한 명씩 소개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46)</sup> 『고려사』와 『동국여지승람』에 원 조정의 환관으로 간 인물의 고향이나 외향이 승격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sup>47)</sup> 소수이기는 하지만 고려 출신 환관이 원 사신단의 일원으로 고려에 와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원에 고려 출신의 환자가 많았던 이유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피지배층의 대부

44) 張東翼, 1990, 「원에 진출한 고려인」, 『민족문화논총』 11 ; 金渭顯, 1994, 「麗元間 人的交流考」, 『關東史學』 5·6합 등이 초기 연구에 해당한다.

45) 이개석, 2010, 「元 宮廷의 高麗 출신 宦官과 麗元關係」, 『동양사학연구』 113 ; 이종서, 2005, 『제국속의 왕국 14세기 고려와 고려인』, 울산대학교출판부 ; 박경자, 2010, 「공녀 출신 고려 여인들의 삶」, 『역사와 담론』 55 ; 정구선, 2004, 『중세시대의 환관과 궁녀』, 국학자료원 ; 이명미, 2022, 『고려, 몽골에 가다』, 세창미디어 ; 喜蕾, 2002, 「元代高麗貢宦制度與高麗宦官勢力」, 『내몽고사회과학』 23-3, 38-42쪽 ; 喜蕾, 2003, 『高麗貢女制度研究』, 민족출판사(이개석, 2013, 앞의 책, 251쪽에서 재인용) ; 이익주, 2013,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 김인호, 2016, 「고려 후기 이체현의 중국 문인과의 교류와 만권당」, 『역사와 실학』 61.

46) 이개석, 앞의 책, 250쪽.

47) 태안 출신 이대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태안은 이대순이 환관으로 활약한 덕에 속현에서 군으로 승격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태안군 건치연혁).

분을 차지한 한인에 비해 고려인들이 몽골어를 빨리 배웠다던가, 한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제3의 언어인 고려어를 쓰는 사람들을 궁중에 채용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sup>48)</sup> 아마도 고려에서 공녀로 끌려온 공녀들이 궁궐에 다수 있었으므로 공녀와 환관의 의사소통 등에 유리했거나 한인을 차별하기 위하여, 또는 중국 역대 역사에서 중국인 환관의 폐해가 심했다는 것을 거울삼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려의 왕자와 관리, 관리들의 자제가 대도에 늘 숙위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요청에 따라 고려인 출신의 환관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 대도에 와 있던 고려인들이 궁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만큼 원에서도 그들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충렬왕이 ‘몽골어와 한어에 모두 능하여 본인과 공주를 가까이 보필하는 우승지 조인규에게 벼슬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 것’<sup>49)</sup>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진다. 통역이 외교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음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고려 출신 환관의 연구는 몽골 궁궐에서 환관이 가게 된 배경, 방신우와 이대순 등 고려 출신 환관 중 행적이 남아있는 인물들의 생애, 환관을 보낸 시기와 인원, 환관들의 내정 결정 참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관들은 몽골에서 황실 구성원의 심부름을 하거나 궁 밖의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사찰에 찾아가 대신 공양을 하거나 고려에 가서 환자와 동녀를 데려오는 일, 하도 준설과 같은 특별한 업무의 감독, 지방에 가서 실상을 조사하는 일 등의 일도 맡았다.<sup>50)</sup>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려에 사절로 파견되는 것이 이전의 환관과는 다른 점이다.

고려 출신 환관들이 몽골에 처음 파견된 시기는 쿠빌라이가 잠번(潛藩)에 있었던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sup>51)</sup> 고려 측의 기록에는 1289년에 안평공주(安平公主)가 대도에 갔을 때 데리고 갔던 방신우를 유성황후의 처소에 남겨두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다.<sup>52)</sup> 이것이 고려 출신 환관이 원의 황실에서 활동한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오랜 기록이다. 이후에는 충렬왕이 1300년에 몽골에 갔을 때 3명의 환자를 바쳤다는 내용이 있고, 1304년(충렬왕 30)에 안서왕 아난다가 고려에 사람을 보내 환자를 구했다는 구절이 있다. 이후에도 원은 사신을 보내 고려에 환관과 공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원의 궁중에는 적지 않은 수의 고려 환관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관들의 경우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 중에 선발되었다. 그러므로 요역을 피하거나 자식을 통해 부귀를 얻기 위해 일부러 엄환(嚴宦)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sup>53)</sup> 『지정조격』에 환자의 구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을 보면 당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실제로 원에 간 환관들 중에는 고위직에 올라 정책 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통 한족 왕조 시기의 환관 만큼 황제와 독대하며 폐행(嬖幸)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왕명의 출납 과정에서 카안의 신뢰를 얻었을 가능성은 컸다. 그것은 원에서 출세한 환관

48) 勞延萱, 1967, 「論元代的高麗奴隸與媵妾」, 『慶祝李濟先生七十歲論文集』 2(이개석, 앞의 책, 250쪽에서 재인용).

49) 이개석, 2010, 「元 宮廷의 高麗 출신 宦官과 麗元關係」, 『동양사학연구』 113, 143~170쪽.

50) 이개석, 위의 논문, 150~152쪽.

51) 『高麗史節要』 권23, 충렬왕.

52) 李齊賢, 『益齋集』 권7,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社堂碑 ; 이개석, 앞의 책, 256쪽.

53) 이개석, 위의 책, 258~273쪽.

들에게 고려 조정이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공녀의 경우에는 여몽전쟁 시기부터 몽골에 강제로 끌려간 것이 기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미가 소개한 고려 미인 김장희, 염승익의 딸, 홍문계의 딸 등의 사례가 그에 해당한다.<sup>54)</sup> 이명미의 글에는 신분에 따라 몽골 고위층의 급사가 되거나 처첩이 된 사례들이 여럿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그녀들의 가장 큰 고통은 당사자와 가족의 물리적 거리였을 것으로 보았다. 결혼한 후에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여성의 집에서 살았던 술서혼 풍속이 있었던 고려의 여성들과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으리라라는 것이다.<sup>55)</sup>

원이 고려에 공식적으로 공녀를 요구한 것은 1231년(고종 18)이었다. 이때 몽골은 살리타이를 통해 공문을 보내어 관료들의 자제 남자 1000명과 여자 1000명을 요구하였다.<sup>56)</sup> 이 시기는 두 나라가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시기이므로 고려는 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양국 관계가 안정되자 충렬왕은 1275년(충렬왕 원년) 10월 15일에 이르러 처녀를 징발하여 이듬해 신년하례사 편에 10명을 보냈다. 이것이 고려 공녀가 원에 간 공식적인 첫 기록이다. 이후에도 공녀 파견은 줄곧 이어져서 공민왕 대에 이르기까지 기록에 남은 것만 해도 40여 회나 된다. 당시 몽골에서는 “지정 이래 궁중의 급사와 사령은 태반이 고려 여인이었다.”라거나 “북인들은 여사(女使)는 반드시 고려 여자 아이를, 가동은 반드시 피부가 검은 하인[黑廝]를 얻으니”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몽골에서는 공녀를 중시하였다.<sup>57)</sup> 그렇다면 몽골과 고려에서 모두 공녀 선발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1335년 몽골의 어사대신이 올린 진언이나 이곡이 몽골 황제에게 올린 ‘고려에서 동녀를 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 등이 대표적이다.<sup>58)</sup>

몽골이 고려의 여인들을 공녀라는 명목으로 끌고 간 것은 유목민들의 풍속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혼을 통해 특정 부족들이 서로 평화 협정을 강화하는 것은 몽골 전통의 풍속이기 때문이다. 칭기스칸이 혼인동맹을 맺은 옹기라드, 이키레스, 옹구드, 오이라드 등은 대개 정복 사업에 협조하거나 귀부한 부족이다.<sup>59)</sup> 고려의 경우 처음에는 몽골에 적극 저항하였으나 원종이 태자시절 쿠빌라이에 귀부하면서 훗날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것이 원종의 청혼 요청때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몽골의 입장에서는 고려의 요청을 몽골이 반드시 수용할 이유는 없었다. 또한,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혼인을 요청할 때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혼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인지한 것 같지도 않다.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처음에는 몽골 황실의 딸이 고려에 시집오고, 공녀로 간 고려의 여인들이 카안의 총애를 받거나 고관들의 부인이 되면서 그것이 고위층 사이에서 상류층 문화로 인식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상류층에 편입된 고려 여인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게 되면서 그러한 인식은 더욱 확산되었을 것이다. 이후 고려에서 공녀로 간 여인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몽골 황실은 끝까지 저항한 한인 출신 여성보다는 고려 여인을 궁에 들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학자들의 교류에 관련된 기록은 이제현, 이곡, 이색 등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제현

54) 이명미, 앞의 책, 105~127쪽.

55) 이명미, 위의 책, 127쪽.

56)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12월.

57) 앞의 기사는 『경신외사』 뒤의 기사는 『초목자』에 있다(이명미, 앞의 책, 115~116쪽).

58) 『元史』 권38, 順帝本紀 3월 庚子 ; 『稼亭集』 권8, 代言官請罷取童女書.

59) 보르지기다이 바타르, 2009, 『팍스몽골리카와 고려』, 혜안, 72~79쪽.

관련 연구는 대도 만권당에서의 활동과 충선왕 대 정치적 활보, 귀국 후 충목왕, 공민왕 시기에 전개한 개혁 정치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이곡과 이색의 활동은 원에서 시행한 제과에 급제한 이후 원 조정의 관리로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성리학 발전에 기여한 내용에 관한 연구가 있다. 특히, 이곡은 정동행성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이듬해에 제과에서 한인·남인 제2갑 15명 중 8등으로 급제하여 원의 정7품 승사랑(承事郎) 한림국사원검열관(翰林國史院檢閱官)에 임명되었다. 이곡은 이전 고려 출신 제과 급제자들의 성적과 비교하면 매우 우수한 성적이었다. 또한 주로 지방의 관리로 임명된 이전 고려 출신 급제자들과 달리 중앙의 관직을 받았으므로 원의 학자들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곡의 아들 이색의 제과 급제 과정은 고려인들의 국자감 유학생들과 원에서의 관직 생활, 대도에 머물던 고려인들의 생활 모습 등을 보여준다. 이색에 대한 연구에는 그가 대도에서 만난 고려 학자, 승려 등에 관한 부분도 있다. 이색 관련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색이 혼인할 때 고려의 지체 높은 집안에서 서로 사위로 맞으려고 다뤘다는 것과 그가 만난 사람 중에 ‘답답한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대도로 떠난 박중강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이다. 아마도 당시 고려인들에게 대도는 ‘큰 세상’,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다.<sup>60)</sup>

### 3. 수증고고학과 역사학의 상호 보완

#### 1) 바다에서 찾아낸 고려시대 선박

한반도는 지형의 특성상 산이 많고, 큰 강이 동서를 가로지르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동서의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남북의 길이는 길다. 또한,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쌀과 보리는 주로 남쪽 지역에서 생산된다. 농경사회라는 특성상 소나 양을 길러 식량으로 삼는 일도 드물다. 그렇다면보니 수도와 지방을 잇는 길은 육로보다 수로와 해로가 중심이었다. 특히, 수도가 개경과 한양으로 정해진 후에는 남쪽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를 수도로 옮기는 일이 국가의 존망과 결부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중시되었다. 이른바 조운이라는 제도는 그러한 배경에서 생겨난 것이다.<sup>61)</sup>

남쪽의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생산된 물자들은 서해의 육로를 바라보면서 수도로 향했다. 이들이 지나야 하는 길목에는 몇 개의 험로가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구간이 명량(진도-해남 사이), 칠산(영광군 서쪽 바다), 안흥량(태안군 정죽면 일대), 손돌목(강화과 통천 사이)였다. 이들 험로에서는 배가 가라앉는 경우가 잦았으므로 나라에서는 조운선의 침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예컨대 호송제도의 마련, 고의 침몰이 의심되는 경우의 배상책임, 특수행정구역 성격을 띤 조창 설치를 통한 사공과 수수의 안정적 확보 등이 대표

60) 이명미, 앞의 책, 150~155쪽.

61) 조창 관련 연구로는 김다미, 2017, 「고려 무인정권기 조운제의 운용과 그변화상」, 명지대 석사 학위논문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서울대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문경호, 2011, 「고려시대의 조운제도와 조창」, 『지방사와 지방문화』 14 ; 윤용혁, 2013, 「고려의 뱃길과 섬-최근의 연구동향」, 『도서문화』 42 ; 정홍일, 2019, 「고려시대 조운과 전라도 지역 조창」,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50 ; 한정훈, 2019, 「고려시대 전라도 조운조창의 현황과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56 외 다수.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은 다음의 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000년대 이후 수중 문화재 발굴 성과<sup>62)</sup>

순 번	발굴 연도	유적명	출수품(시기)	비고
1	2002~ 2003	군산 비안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고려청자 등 2,939점 (12~13세기)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2	2003~ 2004	군산 십이동파도선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고려선박 1척, 고려청 자 등 8,122점 (11세기 말~12세기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3	2004~ 2005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청자향로 편 등 (13세기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4	2005	신안 안좌도선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고려시대 선박 1척, 고 려상감청자 등 4점 (14세기)	국립해양유물전시관
5	2006~ 2009	군산시 야미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고려청자 4,547점 (12세기)	국립해양유물전시관
6	2006	안산시 대부도선 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고려선체 편 (12~13세기)	국립해양유물전시관
7	2007~ 2008	태안 대섬 태안선 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고려선박 1척, 고려청 자 등 25,000여점 (12세기)	국립해양유물전시관
8	2008~ 2010	태안 마도해역 및 1호선 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고려선박 1척, 고려청 자 등 940점 (13세기, 1208년 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9	2009~ 2010	태안 마도 2호선 발굴(3차)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고려선박 1척, 고려청 자 등 974점 (13세기, 1203년 이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0	2010	태안 원안해역 발굴 (충남 태안군 원안해수욕장 인근)	고려청자 등 244점 (시기불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1	2011	태안 마도 3호선 발굴(4차)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고려선박 1척, 고려청 자 등 336점(13세기 전 반, 1231년 이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2	2011~ 2012	태안 마도해역 발굴(5차)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고려청자 등 667점 (시기불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	2010, 2012~ 2013	인천 영흥도선 발굴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섬업별 인근)	통일신라선박 1척, 고 려청자 등 723점 (시기불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62) 노경정, 2007, 「태안해역 고려 침몰선 발굴과 출수 목간」, 『목간과 문자』 19, 16~17쪽의 <표 1>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14	2012~ 2014	진도 명량대첩로해역 발굴(1~3차)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인근)	고려청자, 총통 등 589 점 (시기혼재)	국립해양문 화재연구소
15	2014	태안 마도해역 발굴(6차)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고려청자, 백자 등 289 점 (시기혼재)	국립해양문 화재연구소
16	2015~ 2016	태안 마도해역 발굴(7차)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조선선박 1척, 분청사 기, 목간 등 60점 (15세기 초)	국립해양문 화재연구소

위의 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조사된 수중유적은 대부분이 고려시대의 것이고, 통일신라와 조선시대 선박은 각각 1척씩이다. 이처럼 시기별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통일신라시대의 선박이 적은 것은 당시의 수도가 경주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흔히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6세기 무렵부터 한강을 이용하여 물자를 운송하거나 중국과 교류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백제가 서남해안을 장악하고, 고구려 군대가 한강 이북에서 주둔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연안항로와 한강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항성이 한강과 아산만의 중간쯤에 자리잡은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

통일 후에는 울산이나 경주 앞바다에서 서남해를 떠나 연안항로를 따라 북상한 뒤 요동반도, 산둥반도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교역로와 서남해 일대에서 징수한 조세를 경주까지 운송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세를 운송하려다가 폭풍을 만나 일본으로 떠내려간 김파형 일행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sup>63)</sup> 그러나 그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통일 후에도 식량은 각 주의 치소로 옮겨졌으며, 그 중 상당수는 주의 창에 저장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64)</sup>

조선시대의 침몰 선박이 고려시대보다 적은 이유는 도자기 생산지가 경기도 광주분원으로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도자기가 실리지 않은 선박은 갯벌에 깊이 박히지 않는다. 따라서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바닷 속에서 선체가 보존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조선시대에는 호송책임제도가 시행되면서 배가 침몰하면 관할 구역의 지방관이 침몰선의 물품들을 건져 올려야 했다. 침몰한 조운선에서의 곡식 수거율이 무려 50%이상이나 되었다는 통계도 있다.<sup>65)</sup>

그에 비하면 고려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조세로 징수한 곡식을 비롯하여 도자기, 음식 등 많은 것들이 바다를 통해 조달되었다. 특히, 성종 11년에는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이 장악한 포창에서 조세를 모았다가 사선을 빌려 개경으로 운송하고, 각각의 거리와 위험도에 따라 수경가를 지급하는 제도가 확립되면서 조세 운송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후 정종 대에 각 조창마다 초마선과 평저선이라 불리는 조운선이 배치되어 국가가 조세의 수집과 운송을 모두 담당하는 조운제도가 완성되었다. 특별히 고려시대에 침몰한 선박들이 많았던 것도 그와 연

63) 『日本後記』 권21, 弘仁 2년(811) 8월 甲戌.

64) 김창식, 2004,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제 연구』, 일조각, 145~154쪽.

65) 吉田光男, 1986, 「十九世紀忠清道の海難 - 漕運船の遭難一九〇事例を通じて -」, 『朝鮮學報』 121, 60~65쪽. 19세기에 충청 연안에서 일어난 조난사고 190건을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조난 이유로는 기상적 요인(바람, 안개, 눈 등)이 95%, 항해시기, 선박 구조, 과다 적재, 항해기술 미숙 등이었다고 한다. 계절적으로는 7·8월이 49건으로 가장 많고, 북서풍이 부는 음력 10~11월이 다음으로 많았다. 선원들의 생존률은 93.7%, 적재 곡물의 회수율은 50% 정도였다고 한다.

관시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고려시대에는 조세뿐 아니라 도자기를 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고려청자는 주로 전라남도의 강진과 전라북도의 부안에서 생산되었으므로 두 지역에서 개경까지 도자기를 운송하는 데에는 육로보다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했다. 길이 좋지 못한 육로를 이용하는 경우 도자기가 깨지거나 도둑맞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도자기와 쌀을 같이 싣게 되면 배의 무게가 크게 증가하므로 사공이 키[舵]를 조절하기 어렵고, 갑작스런 위험을 만날 경우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더구나 무게가 무거운 선박은 갯벌에 깊이 박히게 되므로 배에 실었던 물품들은 그대로 갯벌 속에서 진공상태로 남게 된다.

다만, 고려시대 중에서도 12-14세기 무렵에 침몰한 선박들이 특별히 더 많은 이유는 이 시기에 개경과 지방을 오가는 선박이 증가했음을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에 유난히 침몰 사고가 많았던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13세기 초·중반에는 몽골 침입을 피해 왕실과 관리들이 강도에 피난해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다가 침몰하는 선박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목간에 적힌 수취인 중에 무신들이 많았음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무신들의 수탈이 증가했다거나 무신들의 독촉에 쫓겨 선박들이 급히 운항하다가 침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선박이 연이어 출토됨에 따라 선체와 규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sup>66)</sup> 초기의 연구는 선박의 구조나 규모, 선체의 특징 등을 규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기별 변화 양상, 적재 화물의 성격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sup>67)</sup> 각 선박에 관한 연구 중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이후 서남해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선박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십이동파도선에는 만곡부중통재라 불리는 선체가 2단으로 남아 있었다.<sup>68)</sup> 만곡부중통재는 완도선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선박의 저판과 외판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된 ‘C’자형과 ‘L’자형의 중간 형태로 생긴 선재(船材)이다. 아마도 독목주(獨木舟)가 구조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판과 외판을 안전하게 접목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처음에는 3개~2개까지 이어붙이다가 완도선이 제작된 12세기 전반기에는 1개로 줄어들었고, 태안 마도 1호선이 제작되는 13세기 초에는 사라졌다.

12세기 중반기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안선은 선박의 구조나 제작방식 면에서 다른 선박과는 다소 다른 모양을 보인다. 얇은 판자를 이용한 점, 역클링커이음방식으로 외판

6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高麗靑磁寶物船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2권(본문·도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태안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태안마도 3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등.

67) 박유석, 2010, 『고려선의 구조와 조선 기술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준혁, 2010, 「고려시대 배의 변화와 그 의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경정, 2010, 「고려시대 선박의 구조 변천 연구 -수중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호, 2011, 「태안 마도 1호선을 통해 본 고려시대의 조운선」, 『한국중세사연구』 31 ; 노경정, 2012, 「마도해역에서 발굴된 고선박의 구조와 성격」, 『한국고고학전국대회』 36 ; 신종국, 2020, 『고려 침몰선의 성격과 출수유물연구』, 공주대학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68) 십이동파도선은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 무렵에 제작된 조운선으로 추정된다. 선박에는 도자기만 실려져 있었는데, 적재된 도자기들은 공물로 제작되어 개경으로 운송되다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을 조립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배의 모양을 통해 볼 때 다른 선박보다 선체의 무게가 가벼워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박과 함께 출수된 도자기는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도 많다. 다만, 그것이 판매용이었는지, 공납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태안선에서는 30대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출수되기도 했다. 아마도 배가 침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하지 못하고 화물과 함께 가라앉아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

태안 마도 1호선~태안 마도 3호선은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선재를 통나무에 가깝게 다듬어서 제작한 점, 클링커이음방식으로 외판을 조립한 점, 저판에 구레짝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을 2개 파서 돛을 뽑을 수 있도록 만든 점, 저판과 이물·고물이 모두 평평한 넓은 상자형의 선박이라는 점, 돛은 중앙에 1개만 있었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 아마도 이들 선박이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가장 전형적인 관선 또는 조운선이 아닐까 생각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선박들이 모두 소나무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일부 나무못이나 가룻목 등은 참나무를 사용하였으나 선박의 주선재는 소나무이다. 마도 1호선의 저판 일부는 상수리나무나 밤나무로 제작되었는데, 그것은 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려 배의 특징은 다른 선박에서도 대부분 나타난다. 14세기 무렵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좌도선은 규모나 제작 방식의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졌는데, 그것은 왜구의 침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작고 빠른 왜구의 선박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배의 선체를 키우고, 튼튼한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공민왕 때 원나라 배와 사공을 빌려 조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보면<sup>69)</sup> 아마도 크고 견고한 선박이 왜구의 침입을 피하는 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것은 선박의 형태가 점차 세장화(細長化)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마도 1호선의 저판은 5개인데, 14세기에 제작된 안좌선의 저판은 3개로 줄어들었다. 저판이 좁아지면 선박의 장폭비가 줄어들어 속도는 빨라진다.

서남해 해안에서 출수된 선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려시대의 선박은 대체로 길이가 12~15m 내외이며, 저판과 앞뒤가 모두 평평한 성냥갑 모양의 선박임을 알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소 변화가 생기는 것은 하지만 배를 제작하는 방식이나 돛을 설치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크게 변하지 않고 조선시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에 나타난 선박의 변화 요인이 자체적이었는지 인근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선박에 물건이 한꺼번에 실린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2) 목간 분석을 통해 알아낸 화물의 종류와 운송경로

고려시대 유물 중 당대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하는 것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당시 사람들이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물품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물도 마찬가지로이다. 자료의 부족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자료에 대한 갈망은 고려사 연구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물

69)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7년 7월 壬戌.

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고려시대 선박과 함께 출수된 목간이 그것이다. 목간에는 당시 선박에 적재하고 있었던 물품의 종류, 수량, 발송인, 수신인 등에 관한 정보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다. 그런 점에서 고려시대의 생활사 연구는 바닷 속에서 목간이 출수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선 출수 목간 연구는 발굴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글자를 판독하여 연구의 물꼬를 튼 임경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70)</sup> 임경희는 태안선과 마도 1~3호선에서 출수된 목간 속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인명, 지명, 적재물품, 수량은 물론이고 화물의 성격까지 상세히 밝혀냈다. 이후 역사학, 서지학,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가세하면서 목간을 둘러싼 비밀들이 하나씩 해소되었다. 연구성과를 토대로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목간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것은 태안선이었다. 고려 보물선이라는 별명이 붙은 태안선에는 고려 청자가 2만 3천점이나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자의 수보다도 더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34점이나 되는 목간이었다. 태안선에서 출수된 목간에는 출발지로 추정되는 ‘탐진(강진)’이라는 지명과 ‘최대경택(崔大卿宅)’, ‘류장명택(柳將命宅)’, ‘대정 인수(隊正 仁守)’ 등의 직급과 인명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개경에 사는 수취인들이다.

발송지가 청자 생산지인 탐진이었다는 점, 수신자는 개경의 최대경을 비롯한 관리들이었다는 점 때문에 연구자들은 태안선에서 출수된 도자기는 개인에게 보내지는 화물로 추정하고 있다. 개경에서 도자기를 받기로 한 최대경은 탐진 출신의 고관으로 도자기의 판매 또는 중간 매매를 담당하는 인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2만 점이 넘는 도자기가 개경의 고관에게 사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어떤 용도였을지, 그것을 담당한 최대경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그것이 사적으로 운송되는 물품이었다기보다 공물로 진상되는 물품이었으며, 그것을 중간에서 관리한 최대경, 유장명은 탐진 출신의 사심관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안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1131년(辛亥)은 조세 행정이 동요되던 시기였다.<sup>71)</sup> 중앙에서는 지방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무를 파견하고, 향교를 설립하는 등 통치체제의 이완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사심관은 중앙에 있으면서 외관이 담당하는 업무 중의 일부인 流品の 甄別, 賦役의 均平, 風俗의 表正 등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sup>72)</sup>

70) 임경희, 2009, 「태안 대섬 고려 목간의 분류와 내용」, 『高麗靑磁寶物船』,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2010, 「마도 1호선 목간의 분류와 주요내용」, 『태안마도 1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2010, 「마도 2호선 목간의 판독과 분류」, 『木簡과 文字』 6 ; 2011, 「마도 2호선 목간의 분류와 내용 고찰」, 『태안마도 2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2011, 「태안선 목간의 새로운 판독 -발굴보고서를 보완하며-」, 『해양문화재』 4 ; 2011, 「마도 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 『木簡과 文字』 8 ; 임경희·최연식, 2008, 「태안 청자운반선 출수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木簡과 文字』 창간호 ; 임경희·최연식, 2010, 「태안 마도 수중 출수 목간 판독과 내용」, 『木簡과 文字』 5 ; 김재홍, 2016, 「태안 침몰선 고려 목간의 문서양식과 운송체계」, 『한국중세사연구』 47 ; 손환일, 2008, 「高麗 木簡의 書體 -忠南 泰安 해저 출수 목간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44 ; 신은제, 2012, 「마도 1,2호선 출수(出水) 목간, 죽찰에 기재된 곡물의 성격과 지대수」, 『역사와 경계』 84 ; 노경정, 2017, 「태안 해역 고려 침몰선 발굴과 출수 목간」, 『목간과 문자』 19 ; 정현숙, 2017, 「태안해역 출수 고려 목간의 서체적 특징」, 『목간과 문자』 19.

71) 『磻溪隨錄』 권3, 田制後錄(上) 漕運.

72) 『高麗史』 권75, 志29, 選舉3, 事審官.

특히, 고려 중기에 이르러 외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사심관은 주로 사회경제적 수취체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sup>73)</sup>

최대경이라는 인물도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대경 외에 수취자로 기록된 류장명이나 대정 인수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지만, 류장명은 최대경과 같은 사심관, 대정 인수는 기인이나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향리 출신의 하급 장교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목간에 기록된 ‘탐진현재경대정인수호부사기일과(耽津縣在京隊正仁守戶付沙器一裹)’라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만약 대정 인수가 탐진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면 ‘재경(在京)’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목간의 뒷면에는 ‘차지재선장(次知載船長) 수결(手決)’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탐진현에서 청자를 싣는 책임을 맡은 향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차지’는 이두로 ‘일을 맡아보는 사람’, ‘담당자’라는 뜻이고, ‘재선’은 배에 실었다는 의미이며, ‘장’은 포구의 책임을 맡은 향리이다. 고려시대에는 향, 부곡, 포 등에도 향리가 있었는데 이들의 우두머리를 호장이라 하지 않고, ‘장’이라고 하였다.<sup>74)</sup>

탐진현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세 인물에게 나뉘어 발송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해명이 필요하지만, 예종 대에 이미 자기, 구리, 먹, 종이 등을 생산하는 소에 부여되는 별공이 많아 도망치는 장인들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75)</sup> 태안선에 실린 자기들은 강진의 대구소나 칠량소 등에서 생산되어 공물 또는 별공으로 납부되었을 것이다.

태안선 이후 마도 1~3호선에서도 목간이 연이어 출수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마도 1호선은 최충현의 집권기인 1208년에 전라도의 수령현(遂寧縣), 죽산현(竹山縣), 회진현(會津縣) 등에서 곡물과 도자기를 싣고 개경으로 향하다가 침몰한 선박이다. 선박을 포함하여 출수된 유물은 총 489점이다. 그 중 목간은 총 73점이다. 나무와 대나무로 제작된 목간에는 송춘(宋椿), 대삼(大三), 송지(宋持) 등 물품을 발송한 인물과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 윤기화(尹起華), 별장(別將) 권극평(權克平), 대장군(大將軍) 김순영(金純永) 등 개경에서 물건을 받을 수신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목간의 모양은 대개 평평한 막대 모양이며, 머리와 몸통 부분의 경계에 ‘><’형의 홈이 있다.<sup>76)</sup> 글자는 행서체(일부는 해서와 초서)로 쓰고, 수량을 표시하는 글자는 위조를 막기 위해 갖은자로 썼다.<sup>77)</sup>

목간에 적힌 글의 구조는 향리로 추정되는 발송인보다 받는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댁상’이라고 쓰고,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호부’라고 썼다. 이름 앞에는 관직을 썼는데, 태안선에도 확인된 것처럼 일부 목간에는 ‘재경(在京)’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다음의 두 목간을 살펴보자.

竹山縣在京校尉尹邦俊宅蟹醢壹缸入四斗(죽산현에서 개경에 있는 교위 윤방준 댁에 올림. 게 젓갈 한 항아리. 네 말을 담음)

73) 李純根, 1986, 「高麗時代事審官의 機能과 性格」,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213~218쪽 ; 洪承基, 1989, 「高麗後期事審官制度의 運用과 鄉吏의 中央進出」, 『東亞研究』 17.

74) 『高麗史』 권94, 列傳7 諸臣 崔士威.

75) 『高麗史』 권78, 志32, 食貨1, 田制貢賦.

76) 한정훈, 2017, 「태안해역 출수 木簡의 비교를 통한 해운활동 고찰」, 『목간과문자』 19.

77) 정현숙, 2017, 「태안해역 출수 고려 목간의 서체적 특징」, 『목간과문자』 19.

奉御同正宋壽梧宅上」竹□廿五柄次載缸戶長宋押 (봉어동정 송수오 댁에 올림. 죽□ 스물다섯 자루. 선적을 맡은 사람 호장 송. 수결)

丁卯十二月二十八日竹山縣在京檢校大將軍尹起華宅上 / 田出粟參石各入二十斗□□□ □□□□ (정묘년 12월 28일 죽산현에서 개경에 있는 검교대장군 윤기화 댁에 올림. 전출의 조세 섬. 각 스무 말을 담음 □□□ □□ □□)

-①은 죽산현에서 개경에 있는 교위 윤방준이라는 사람에게 게절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역시 ‘재경’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죽산에서 개경에 어떤 업무를 위해 올라가 있는 인물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는 재경이라는 말 대신 봉어동정이라는 직책의 송수오라는 인물에게 죽제품(부채로 추정) 25자루를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③은 역시 죽산현 출신으로 개경에 가 있는 검교대장군 윤기화에게 전출 조세 3섬을 바친다는 내용이다. 송수오와 윤기화 목간에서 재경이 빠지고 동정이 기록된 것은 아래의 규정에 단서가 있다.

기인은 1,000丁이상의 고을이면 足丁이라 하여 나이 40세 이하 30세 이상의 사람을 뽑아 올려 보내게 하며, 1,000丁이하의 고을이면 半足丁이라 하여 兵倉正이하 副兵倉正이상을 막론하고, 부강 정직한 사람을 뽑아 올려 보내게 하되 족정은 15년을 기한으로 하고 반정은 10년을 한정하여 입역케 하며, 반정이 7년에 이르고 족정이 10년이 되면 同正職을 허락해 주고 입역한 기한이 끝나면 관직을 더 준다.<sup>78)</sup>

위의 규정대로라면 송수오라는 인물은 본래 기인으로 선상되어 개경에 일정기간 머물다가 동정직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그에게 발송된 물건은 공납물품이거나 역의 대가로 받은 물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윤기화에게 보낸 전출 조세는 그의 수조지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교위 윤방준에게 보내진 게절은 그의 수조지에서 생산된 물품의 대체품이거나 역의 대가로 보낸 물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도 2호선은 13세기 초에 전라북도 고창군 지역인 무송현(戊松縣), 고창현(高敞縣), 장사현(長沙縣)과 정읍 지역인 고부현(高阜郡)에서 징수한 곡물, 청자 등의 물자를 싣고 개경으로 향하다가 침몰한 선박이다.<sup>79)</sup> 출수된 물품은 버릴 비릇한 각종 곡물류, 청자 매병, 통형 잔, 각종 동물의 뼈, 철제술 등이다. 그 중 목간은 총 47점인데,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은 23점, 대나무를 다듬어 만든 것은 24점이다. 수취인은 대경유(大卿庾), 이극서(李克僖), 기견룡(奇牽龍) 등이며, 발송인은 한삼(閑三), 과조(果祚), 김순(金順)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도 2호선의 목간에서 확인되는 흥미로운 점은 세 가지이다. 그 중 첫 번째는 화물 중에 백미, 중미 등의 미곡, 태와 두로 기록된 콩류, 참기름을 의미하는 진, 꿀을 의미하는 정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sup>80)</sup> 쌀을 도정 정도에 따라 조, 중미, 백미 등으로 구분하여 기

78) 『高麗史』 권75, 志29 選舉3 銓注其人.

79) 임경희, 2011, 「마도 2호선 목간의 분류와 내용 고찰」, 『태안마도 2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80) “重房都將校吳文富 / 宅上眞盛樽封(중방 도장교 오문부 댁에 올림. 참기름을 단지에 채움. 封)”, “重房都將校吳文富 / 宅上精蜜盛樽封(중방 도장교 오문부 댁에 올림. 좋은 꿀을 단지에 채움. 封)”

록한 것은 마도 1호선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농민들이 국가 또는 관리들에게 납부하는 전세는 용도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당시 참기름과 꿀을 담은 매병을 ‘준(樽)’이라고 썼다는 것이다. 매병의 용도에 대해서는 술병, 화병, 꿀단지, 장식품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마도 2호선에서 품질이 매우 우수한 매병이 출수되고, 그것에 각각 참기름과 꿀이 담겨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매병 자체가 예술품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 물품을 담아 사용하던 그릇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참기름이나 꿀 보다 매병이 훨씬 더 훌륭한 제품으로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참기름과 꿀도 매우 고가의 물품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값비싼 매병에 담아 보낸 것은 오문부가 활동했던 시기가 무신정권기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가 활동한 중방은 무신들의 합의기구로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1)</sup> 세 번째는 마도 2호선에 실린 물자를 발송한 인물들의 정체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목간에 기록된 인물들은 이름만 적혀 있을 뿐 향리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개경 관리들이 조세 징수를 위해 파견한 조세 징수인이거나 관리들이 받은 수조지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수취인들이 모두 조정의 관리였으므로 그들의 조세 운송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안의 안흥창 일대에서 출발하는 조운선에 물품을 실어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대경유(大卿庾) 즉 유씨 성을 가진 대경에게 보낸 물품은 백미, 태, 등 대개가 전출 곡물이다.<sup>82)</sup> 태안선과 마찬가지로 수취인 중에 대경 벼슬을 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그는 12세기 초에 조정에서 활동한 무송 출신의 관리 유자량(1150-1229)으로 추정된다. 『고려사』에 따르면 그가 벼슬에서 물러난 시기는 1213년이었던다. 따라서 마도 2호선 역시 그 무렵에 출항했다가 침몰한 선박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도 3호선은 1265~1268년 무렵 여수현(呂水縣) 일대에서 거둔 곡물, 전복, 홍합, 상어 등을 적재하고 강도로 향하던 선박이었다.<sup>83)</sup> 연도 추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 근거는 목간에 적힌 유승제(兪承制), 시랑(侍郎) 신윤희(辛允和), 사심(事審) 김영공(金令公) 등이다. 유승제는 승선직을 지낸 유천우(兪千遇, 1264-1268)로 추정된다. 시랑 신윤희는 1260년에 장군을 역임하였으며, 김영공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김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도 3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선체가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출수된 선박들은 저판의 일부 또는 저판과 외판의 일부만 남아있는 정도였으나 마도 3호선은 이물비우와 고물비우를 비롯하여 선체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마도 3호선이 온전히 출수된다면 고려시대 선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도 3호선의

81) 1170년 무신정변 이후 중방은 무신들의 합의기구이자 집단지도 체제를 이끄는 핵심기구였다. 그러나 1196년 최충현이 집권하고, 1209년에 교정도감이 설치되면서 이후에는 점차 기능이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문부가 중방에 있었던 시기는 교정도감이 설치되기 전후이다. 따라서 그가 중방 도장교로 있었던 시기에는 큰 권력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82) “大卿庾宅上古阜郡田出大壹石入拾伍斗(대경 유 댁에 올림. 고부군 전출 콩 한 섬. 열다섯 말을 담음)”, “大卿庾宅上古阜郡田出白米壹石入拾伍斗(대경 유 댁에 올림. 고부군 전출 백미 한 섬. 열다섯 말을 담음)”, “大卿庾宅上古阜郡田出太壹石入拾伍斗 / 次知 果祚(대경 유 댁에 올림. 고부군 전출 콩 한 섬. 열다섯 말을 담음/과조가 맡아서 함)”

8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태안마도 3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또 다른 특징은 다량의 목간이 출수되었다는 것이다. 목간의 수는 총 35점인데, 그중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은 25점, 대나무를 다듬어 만든 것이 20점이다. 그 중에는 ‘우삼번별초(右三番別抄)’, 전민(田民), 도관(都官), 중방우번(重房右番) 등 관리가 아니라 관청의 이름이 적힌 것도 있었다. 따라서 마도 3호선에 실린 물품들은 김준, 유천우, 신윤희 등의 관리와 삼별초, 중방 등 관청으로 전달될 물품들이 함께 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도 3호선 목간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房□主宅上生鮑醢 / ×□□雉三以畚出印(×방□님 댁에 올림. 전복 젓갈. □□□팽 세 마리. 답출로 바친 것임)”의 글씨가 쓰여진 목간이다. 이 목간은 당시 밭에서 생산된 곡식을 대신하여 팽을 보낸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 농민들이 전조를 대신하여 팽으로 납부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앞서 출수된 목간에 적힌 물품들이 전조와는 별도로 상납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처럼 전조를 대신하여 납부된 물품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남해 출수 목간에 대한 연구의 핵심은 발송인과 수취인의 관계, 적재 물품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화물의 성격이 개인 수조지에서 징수한 전세인지, 개인의 토지에서 수확한 지대인지, 아니면 지방에서 개경에 있는 관리들에게 보낸 선물인지 등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전세라면 왜 여러 지역의 다른 물품들과 함께 적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지대라면 개인의 소유지에서 생산된 것이 어떤 이유로 향리들의 책임 하에 개경까지 운송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만약 전조와 지대가 섞인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른 성격의 화물이 혼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해운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문헌연구와 새로 출수된 유물, 그리고 목간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연구들 통해 진전시킬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최근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시행하는 현상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목간에 쓰인 글귀에 대한 용례조사와 문헌자료와의 비교 검토, 중국과 일본의 연구 성과 등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된다면 지금까지 풀지 못한 의문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 3) 바다에서 건져낸 청자와 선상용품

바다에서 건져낸 고려시대의 유물은 다양하고 이채롭다. 그들의 대부분은 선박과 함께 출수되었으나 선박은 모두 훼손되고 유물만 남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수중출수 유물은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직접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상 생활 용품과 도자기이다. 지금까지의 도자기 연구는 대부분 고분이나 건물지, 도요지 등에서 출토된 동반 유물들을 통해 편년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청자를 두고 1백년 이상 편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서남해에서 목간과 함께 많은 양의 청자가 출수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먼저 고려청자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유물은 태안선에서 출수된 유물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안선 출수 도자기는 약 2만 3천점이나 출수되었다. 태안선 출토 도자기는 목간에 수록된 인명 등을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사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주문 제작한 청자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앞서 필자는 국가가 사심관이나 기인을 통해 징수하여 조정 또



는 관청에 납부하는 공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비록 ‘최대경’이라는 인물이 탐진 출신의 유력자라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탐진의 ‘대구소’, ‘칠량소’ 등지에서 청자를 독점하여 유통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도 1호선과 2호선에서 출수된 청자는 약 4백 83점(1호선 333점, 2호선 150점)이다. 태안선 출수 발우, 마도 1호선의 청자 주전자, 2호선에서 출수된 매병 2점 등을 제외하면 질적인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도자기 연구자들은 이들 물품이 공물이라기보다는 사적으로 거래된 사적인 물품이라고 본다. 청자 편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질적인 면을 고려하면 국가에 공납된 물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sup>84)</sup>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태안선이나 마도선에서 출수된 청자들의 기형이 비교적 단조롭고, 특히 마도선의 경우에는 질이 낮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수신처와 수신자로 지목된 인물들에게 배송되는 물품 중에 메주, 젓갈, 마른 상어, 누룩, 죽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물품들은 공납이나 조세보다 관리들의 일상생활 용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소량의 곡식들과 청자들도 그들에게 전달되는 사적인 물품으로 보고 있다.

마도선 출수 청자를 사적인 물품이라고 보는 견해 중의 또 하나는 청자와 함께 곡물을 받을 수취인들이 대개 개경에 거주하는 중하위층 관료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목간에 쓰인 수취인들의 관직은 대장군(종3품), 대경(정3품~종3품), 낭중(정5품) 등의 고관을 제외하면 별장(종7품), 건릉, 대정 등 하부 무반직이다. 또한, 검교직이나 동정직과 같은 산직자들도 여럿 있다. 이들에게 전달되는 물품들의 양이 곡식 몇 섬 정도로 적은 것을 보면 수조지에서 징수한 전세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품계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받았다면 목간에 적힌 별장만 해도 제11과에 해당하는 전(田) 45결, 시(柴) 12결을 지급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고려시대에 45결이나 되는 광활한 토지가 어느 한 지역에 농장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더구나 목간에 수록된 인물들처럼 무신 중하위의 관리들이라면 넓은 땅을 한꺼번에 받았을 가능성은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마도선에 적재된 청자와 각종 곡물들은 역시 관리들의 수조지에서 징수한 것이며, 백성들은 곡식과 함께 각종 물자들을 함께 보냈던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공물의 성격인지, 아니면 전조의 대체품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마도선 출토 도자기에서 주목되는 또 것 중의 또 하나는 상감 청자가 등장한 시기 또는 상감청자를 관리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시기를 1209년 무렵까지 올려볼 수 있게 된 점이다.<sup>85)</sup> 마도 2호선에서 출수된 중방의 도장교 오문부에게 보낸 상감청자가 그에 해당하는데, 연구자들은 그것을 토대로 13세기 초에는 고급 자기에 속했던 상감청자를 조정의 관리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보급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하고 있다. 최소한 13세기 초에는 상감청자 기술이 등장을 했으며, 이 시기는 도자사의 면에서 비색청자가 상감청자로 전환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태안 마도 1호선을 통해 본 고려시대 조운선」에서 마도 1호선은 조운선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필자의 의견은 적재된 물자가 어떤 물자이든 간에 선박은 조운선의

84) 유수일, 2022, 「태안 마도선(1·2호)의 성격과 출수청자의 소비재적 특징」, 『미술사와 문화유산』 10, 55~56쪽.

85) 유수일, 앞의 논문, 57~58쪽.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마도 1호선을 사선으로 파악한 연구자들은 주로 적재된 물자가 좌창이나 우창에 소속된 곡물이 아니고, 수령인이 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마도 1호선(선박)이 조운선인 경우 그 안에 실린 개인 물자들은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하는 관리들의 전세로도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고려사』에도 공사의 물자를 운송하다가 일부러 침몰시킨 사공과 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권수평의 사례처럼 관리들의 수조지 전세를 국가가 운송해 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운선에 사적인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된 논의는 선박과 물자를 분류하지 않고, 사적인 물자가 적재되면 사선, 공적인 물자가 적재되면 조운선이라는 구도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 요컨대 태안선의 도자기는 대부분 최대경을 통해 납부될 공납 물자이며, 그 선박 자체는 사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마도 1~3호선에 적재된 도자기와 곡물들은 개인에게 전달될 물품과 정부의 기관에 납부될 물품들이 섞여 있으며, 선박은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초마선 즉 조운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남해안에서 출수된 자료 중에 주목되는 또 하나의 자료는 당시 선원들이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생활용품들이다. 술, 시루, 숟가락, 젓가락, 청동제 밥그릇, 빗 등인데, 대부분의 유물에는 사용흔적이 남아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청동으로 제작한 숟가락과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이다. 뱃사람들이 숟가락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항해 중에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슴, 돼지, 노루 등을 비롯한 육지 동물과 각종 생선류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들의 뼈는 수량이 많은 편인데, 그것이 수도로 운송된 것인지, 뱃사람들의 식료품으로 실린 것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시루와 술이 있는 것을 보면 떡을 하거나 밥을 찌먹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투시칸에는 기와와 그을음 흔적이 있는 넓적한 돌들이 다수 출수된 것을 보면 불을 피우기 위해 기와나 돌을 깔고 그 위에서 음식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조운선이 안흥량이나 칠산 앞바다 등의 험지를 지날 때는 떡을 찌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마도선 외에도 태안 앞바다에서는 중국 자기들도 상당수 출수되었다. 마도 해협에서 출수된 중국의 도자기는 중국 상인들이 고려에 자주 왕래했다는 당시의 기록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송상들은 1012~1301년까지 289년 간 135회에 걸쳐 4,976명이나 고려에 왔다고 한다. 그들은 ‘宋商’, ‘宋商客’, ‘宋都綱’, ‘宋人’, ‘宋’, ‘宋商’, ‘宋人’, ‘宋都綱’, ‘綱首’, ‘宋商客’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출신지를 분석하면 복건성 천주 출신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는 태안 앞바다에서 출수된 도자기 중에 복건산 도자기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복건성 민청요에서 생산된 것이 가장 많고, 월요, 경덕진요, 용천요, 의흥요, 자주요 계열의 도자기도 있다.

이들 도자기는 대개 파편으로 출수될 뿐 완제품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이 선박의 침몰로 인한 것인지, 깨진 자기를 폐기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기록으로 남은 송상이 실제로 왕래했음을 이들 도자기들이 입증해 준다는 것이다. 북송과 남송 시기에 이들이 고려로 온 경로, 구체적 출항지와 목적지, 교역물품과 상인집단 등에 관련된 과제가 남은 셈이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여몽관계의 특징적인 연구 성과와 수중 출수 유물을 토대로 선채, 목간, 생활용품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몽 관계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양국 관계를 설명해 온 틀, 즉 ‘세조구제론’, ‘부마고려국왕론’, ‘카안 울루스 내속국론’ 등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각각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살폈다. 또한, 인적교류라는 면에서 환관, 공녀, 학자들이 몽골에 가게 된 배경과 대표 인물, 그리고 양국이 주고받은 외교문서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여몽 관계를 분석하는 틀의 경우 몽골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외교문서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미세하게 다른 것처럼 양국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더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몽골에서 고려인 출신의 환관과 공녀를 선호한 이유는 기존의 견해처럼 한족을 차별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혼인관계 형성으로 궁궐에 사는 고려인들이 증가한 것이 오히려 언어 소통에 편리한 고려인을 더 많이 채용하는 현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중 고고학의 발전 부분에서는 출수된 선채와 유물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고려 선박의 특징, 선박과 함께 출수된 목간 해석, 생활용품을 통해 본 선상생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연구자들 간에 이견을 보인 분야는 태안선과 마도선에 실린 물품의 성격이 전세인가, 지대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 물품의 용도를 사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본고에서는 단순히 사적으로 전달된 선물이라기보다 전시과로 받은 토지에서 거둬들인 전세이거나 전세를 대신하여 올려보낸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계첩, 생복, 생선 젓갈 등은 전객들이 전주에게 올려보낸 전세 외적인 부담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목간에 적힌 ‘재경(在京)’은 단순히 개경에 사는 관리가 아니라 출신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심관 또는 기인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태안선에 적재된 ‘최대경’, ‘재경 인수’ 등은 탐진 출신으로 개경에 가 있었던 인물이며, 그들의 지위는 사심관이나 기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적재된 물품이 전조이던 지대이던 간에 그것을 적제한 선박, 즉 마도 1~3호선은 고려시대 조운선(초마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소유의 조운선에 개인에게 전달되는 전세가 실린 것은 『고려사』에 수록된 것처럼 당시에 ‘공사의 물품을 조운할 때 고의로 패선하면 배상시킨다.’는 조항처럼 국가 선박으로 관리의 전세를 운송해 주는 관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 연구는 이제 자국 중심의 시각을 넘어 공간적으로나 방법론의 면에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고고학과 역사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융합적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사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에도 역사학은 계속 연구하고 가르칠 가치가 있는 학문인가? 사회 변화와 세계 여러 학계의 연구동향을 주시하면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경호, 「공간과 자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길로 들어선 고려사 연구」에 관한 토론문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문경호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여년 간의 한국사 연구가 걸어온 발자취를 짚는 오늘 학술회의의 고려시대사 관련 발표로서, 2022년 현재 고려사연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위해, 지난 십수년간의 연구성과를 관조한 발표로 이해됩니다. <역사학보>도 “회고와 전망”을 통해 과거의 연구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만 대개 1~2년의 연구성과를 되돌아볼 따름입니다. 그에 비해 훨씬 어려운 시도를 한 선생님의 수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20여년의 연구성과를 하나의 발표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선생님께서도 특기할 만한 일부 연구경향에 초점을 맞춰 (가)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의 심화 및 (나) 수중 고고학과 역사학의 상호 보완 등 두 가지를 골간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에 맞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발표에 대한 논평

#### 1) 고려-몽골 관계 기술에 대한 논평

고려-원제국 관계사는 20년 넘게 실로 부침 없이 꾸준히 연구돼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 분야에 걸쳐 그를 검토했는데, 토론자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합니다.

##### ① “여-몽 관계를 이해하는 분석틀의 변화”

선생님은 ‘세조구제론’, ‘고려국왕부론’, ‘카안 울루스 내속국론’ 등 그간 제시된 입장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연구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을 벌였던 입장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논쟁 자체는 2010년대초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그 시의성이 이전 같지 못한 상황입니다. 논쟁이 계속되지 못한 이유, 향후 논의 재개시 추가로 다루어져 할 논제 등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② “여-몽 외교와 국서교환”

선생님은 양국간 교섭의 형식, 양측간을 오간 외교문서, 양쪽이 서로에 대해 지녔던 관점, 그리고 용어의 재해석 문제 등 그간 연구에서 다루어져 온 주요 소재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위 ①이 ‘체제/범위’의 문제였다면, 여기서 환기하신 ‘교섭’은 ‘접촉’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실로 활발했으니, 그를 짚으신 것도 적절합니다. 다만 한편으로 또 다른 맥락의 연구에 대한 환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접촉”의 결과가 ‘고려의 내부에 끼친

영향'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전통 관습, 유제가 고려에 출현한 데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발표됐지만, 고려의 전통제도, 국정지향, 기존의 정책각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주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환관과 공녀의 징발”

이 문제가 과연 지난 20여년간 고려-원 관계사연구의 주요 논제였는지 의문스러운 바 있습니다. 몇몇 훌륭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에 주목하신 연유가 궁금합니다.

2) 수증고고학 기술에 대한 논평

지난 20여년간 수증고고학 분야에서 이론 눈부신 발굴성과 및 그것이 한국중세사연구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면, 그를 이번 글의 양대 화두 중 하나로 삼으신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 목간, 청자 별로 살펴보셨는데, 여쭙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바다에서 찾아낸 고려시대 선박”

선생님께서 ‘고려시대에서도 12-14세기 침몰한 선박들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 ‘개경-지방 간 왕래 선박이 늘었기 때문인지 당시 침몰 사고가 많았던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문제라 생각되지만, 굳이 ‘수탈 증가’ 등을 그 이유로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물류 증가 등이 좀 더 자연스러운 이유일 것입니다. 아울러 발굴된 선박들의 사양을 사례별로 검토해 주셨는데, 그에서 유추되는 배의 용도(전선, 운송선, 기타 등), 항속, 용량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목간 분석을 통해 알아낸 화물의 종류와 운송경로”

“고려시대 생활사연구는 목간출수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는 선생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견해 몇 가지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태안선 출수 목간에 적힌 ‘최대경택’의 최대경을 사심관으로 추정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자기들을 ‘공물’로 보셨는데, 공물을 개인의 사택으로 보냈을지 의문입니다. 마도 2호선에 실린 물자를 발송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향리로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서 개경 관리들이 파견한 조세 징수인, 수조지 관리자일 것이라 보셨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③ “바다에서 건져낸 청자와 선상용품”

태안선 및 마도선 출토 도자기의 품질이 낮다고 해서 그를 공납품, 조세물이 아닌 관리들의 일상생활용품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표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선생님처럼 관리들의 수조지에서 징수한 물품으로 보는 대신, 관리들이 구매한 상품이라 볼 여지가 전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마도 1호선 적재품에 대해서도 그 수령인이 개인

임을 근거로 1호선 자체를 ‘사선(私船)’으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를 국가 선박으로 운송된 관료의 전세로 보려 해도 이유는 필요할 것입니다.

## 2. 몇 가지 제언

오늘 발표에서는 대외관계사가 주로 다뤄지고, 고려시대 전반에 대해서는 “정치사·경제사의 연구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사·문화사 연구가 증가했다”는 정도의 진단만 담겼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중세사학계가 거둔 업적을 조명하는 작업은 향후의 고려사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므로, 몇 가지 개인적 제언을 드립니다.

### 1) 우선 지난 20년간의 고려사 연구가 밝힌 것과 못 밝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사상사, 법제사별로 등장한 ‘-론’, ‘-설’ 등의 거창한 학설들을 복기하는 대신, 오늘 시점의 고려시대사 이해가 2000년 시점의 그것에 비해 진전된 부분들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부분들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관료)의 삶, 상인의 삶, 향리의 삶, 종교인의 삶 등을 평전으로 기술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부터는 쓸 수 없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를 통해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지난 20여년간의 고려사연구 시기구분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제, 향촌지역사, 생활사(일상사) 연구 등은 2000년대에는 활발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전 같지 못했고, 가족제도(친족·혼인) 역시 비슷합니다. 반면 사회경제사는 2000년대에는 매우 적은 수의 연구만 발표되다가 오히려 2010년대 활성화됐으며, 의례사 연구(개인/국가/외교의례 등) 또한 2010년대에 들어와 연구자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입니다. 심성사연구는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전반 각기 집단적 형태로 추진되다가 2010년대 후반 개인연구로 이어졌고, 이른바 다원사회론은 파상적으로 제기되다 고려건국 1,100주년이었던 2017-18년 활성화됐지만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기반자료에 대한 재조명, 재편찬론 등이 2010년대 후반 제기됐다면, 개경 연구, 의식사 연구(계승 의식, 천하관), 의료사, 행정사 연구도 각기 다양한 시기에 나름의 부침을 보입니다. 그를 토대로 2000-2022년을 시기구분해 보면, 향후 어떤 연구를 강화하면 좋을지가 눈에 띄리라 기대합니다.

### 3) 고려 ‘전기/후기’ 연구 간의 “불균질”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분야별 연구사정리 방식으로 이어지는 각종 회고와 전망 등에서 의외로 강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고려사 연구의 시대별 편중성입니다. 고려 전·중기 연구가 아직 고려후기 연구를 물량으로 압도하는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고려-원제국 관계사 연구의 호조로 인해 그런 편중성이 해소된다는 느낌도 존재하나, 고려후기의 각종 제도를 아직도 “고려 전·중기 제도가 문란해진 결과”, 또는 “원형·전형으로서의 전·중기 문물이 왜곡·변형된 결과”로만 치부하는 일각의 인식을 보면, 편중성이 실제 해소되기보다는 그 외양이 희석되고 있을 따름이 아닌가 합니다. 백관제도(인사운용/권력관리 포함), 지방제도, 군제/군역제, 전례 등 (경

제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만연한 편중성을 해소하고자 소수의 연구자가 여러 영역에 파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한 학계의 솔직한 인정 및 극복 노력이 절실합니다.

#### 4) 인근 분야와의 협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고고학과 역사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서로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융합적 연구로 나아가는 중”이라 보셨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인접분야 학문과의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에서 그 협력의 사례를 수중 고고학 쪽에서만 찾으신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난 20여년간 한반도 내륙에서 진행된 중요 발굴작업들 및 성과도 짚어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분과학문 간 경계의 와해 또는 점점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한다면, 미술사학과와의 공조 성과, 국문학회, 과학사학회(역법)와의 협조 성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AI시대 역사학의 가치”도 거론하신 만큼 인문정보학과와의 협력 성과도 짚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와 세계 여러 학계의 연구동향을 주시하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외국학회와의 교류 강화 차원에서 한국중세사학회 등 국내 고려시대 전문 학회들이 여러 세계 중세학회(영국 IMC, International Medieval Congress/ 미국 ICMS, 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eval Studies)들과의 교류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1세기 고대사 연구의 성과와 방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역량의 축적-

한영화(성균관대)

1. 2000년대 이후 고대사 연구의 특징
2.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자료학'의 대두
3. 고대사 연구의 위기와 기회 사이

### 1. 2000년대 이후 고대사 연구의 특징

2000년대 이래로 한국사 연구의 양적 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된 바가 있다. 한국사 연구 논문의 폭발적 증가의 이유로는 첫번째 연구자와 학술지의 증가, 두번째 컴퓨터기기·디지털매체의 발달과 연구자료의 DB화,<sup>1)</sup> 세번째 계량적인 연구평가제도 및 한국연구재단 등 각급 기관의 대형 연구프로젝트,<sup>2)</sup> 네번째 정치·외교적 요인에 따른 한국사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거론되었다.<sup>3)</sup>

한국 고대사도 예외는 아니다. 고대사와 관련된 일반 연구 논문은 최근 10년간 한 해에 500편 전후한 편수가 생산되었다.<sup>4)</sup> <한국사연구회보>를 중심으로 집계한 1991년의 일반 논문 편수가 92편, 1996년 136편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양적 증가이다.<sup>5)</sup>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 논문의 양적 증가의 이유는 전체적인 한국사 연구 증가의 이유와 크게 다

- 1) 연구자료의 DB화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가공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해제, 목록 각종 색인정보 등을 확충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하였다(김영미, 2005, 「총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원구원 편, 『한국사 연구 50년』, 해안, 35쪽).
- 2)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자의 양적인 실적이 전임교원과 연구원의 임용과 승진, 재임용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었고, 특히 인문학 프로젝트 사업은 양적 지표가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응모하려는 연구자는 일정한 수의 연구논문이 있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사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쳤다(임경석, 2020, 「백화제방의 화원, 복류하는 이질성」, 『역사학보』 247, 4~5쪽).
- 3) 여호규, 2021, 「한국사 연구의 신경향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역사학보』 251, 4쪽 ; 여호규는 『역사학보』에 게재된 총설을 기반으로 양적 증가의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임경석, 2020, 앞의 논문, 3~5쪽 ; 정연식, 2017, 「양적 성장의 벽과 질적 전환의 길」, 『역사학보』 235, 14~15쪽 ; 노명호, 2012, 「한국사 연구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 『역사학보』 215, 11~12쪽 ; 신호철, 2008, 「한국사학계의 당면과제와 향후 전망」, 『역사학보』 199, 4~5쪽).
- 4) 정동준이 <한국사연구회보>를 중심으로 집계한 편수는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서평 및 번역 논문, 고고학 논문 중 역사적 해석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였음에도 2011-2012년 900편, 2013-2014년 1095, 2015-2016년 1233편, 2017-2018년은 1400편이다(정동준, 2019, 「한국고대사 연구의 양적 증가와 새로운 동향」, 『역사학보』 243, 21쪽) 여호규가 <한국사연구회보>를 중심으로 집계한 2019-2020년의 일반 논문 수는 1,223편이다(여호규, 2021, 앞의 논문, 9쪽).
- 5) 김영미, 2005, 앞의 논문, 35쪽.



르지 않다.<sup>6)</sup> 다만 한국 고대사에서의 문헌 자료의 수는 한정되어있으나, 지방 거점에 포진하고 있는 국립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그리고 자자체의 활동을 통한 고고학의 발굴 성과는<sup>7)</sup> 고대사 관련 논문의 증가와도 연동될 수 있다. 고대사 논저 중 고고와 미술, 건축분야의 물질자료와 관련된 연구 비율과 문헌 및 문자자료를 통한 연구의 비율이 2:3이라거나,<sup>8)</sup> 최근 학술대회 발표자의 인적 구성이 문헌 연구자와 고고학적 물질자료 연구자가 1:1 비율로 참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sup>9)</sup> 이미 고고학적 성과가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일정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고대사학계에서는 중국에서의 동북공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행, ‘유사역사학’의 선동 등의 이유로 역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과 관심도 연구 증가의 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2002년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한 후, 2005년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개편, 설립되면서 고구려사 및 관련 연구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연구성과가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비 기반이 마련되었다.<sup>10)</sup>

대체로 연구의 경향은 1970년대 고대국가 형성문제가 제기되면서 고대사회의 발전과정과 관련된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1980년대는 단군 및 고조선사와 관련된 논의와 가야, 고구려사 연구로 확장되었고 발해사 자체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고대사의 지평을 넓혀간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는 제의 및 건국 신화, 여성사와 관련된 문제, 농업생산 및 교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주제가 모색되었고,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나 문화적 이해, 삼국의 천도 및 도성제, 불교사상사 연구의 심화, 촌락문서 등 토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사본 『화랑세기』를 둘러싼 진위논쟁 등도 부각되었다.<sup>11)</sup> 1990년대 이래로는 거대담론보다는 일상생활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이 성행하여, 생활사나 사회사에 대한 시도가 다양한 주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sup>12)</sup> 이는 2000년대 이래로도 이어지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정치사, 대외관계사, 문화사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높다. 문화사의 경우는 사상, 미술, 종교, 유물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사와 대외관계사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이는 학위 논문의 경향성과도 일치한다. 학위 논문은 일

6) 고대사학계 내의 분화나 전문학술지의 증가에 따라 많은 수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한국고대사 관련 학술지가 시대나 국가별로 세분화되어 출간됨으로써 고대사의 연구주제가 다양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김두진, 2007, 「한국 역사학의 연구성과와 과제」, 역사학회 엮음, 『한국 역사학의 성과와 과제』, 44쪽).

7) 현재 일년에 적게는 1,500건, 많을 경우는 2,000건씩의 발굴조사가 진행된다(권오영, 2021, 「한국 고대사 연구의 미래를 위하여」, 『역사와 현실』 122, 7쪽).

8) 박성현, 2021, 「고대사학에서 고대학으로」, 『역사학보』 251, 37쪽.

9) 권오영, 2021, 앞의 논문, 6쪽.

10) 문창로, 2005, 「고대사연구 60년의 동향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40, 375쪽. 문창로는 기존 신라사, 백제사, 가야사 분야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고구려사 연구를 보완하고 한국 고대사의 각 국가별 연구주제를 심화시켜 체계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11) 문창로, 위의 논문, 352쪽.

12) 이를 시기적으로 1945-1960년까지는 ‘실증적 연구의 정착’, 1960-1980년까지 ‘내재적 발전의 추구’, 1980-1995년까지 ‘구조적 인식의 모색’으로 시기에 따른 특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영하, 1996, 「古代史研究 半世紀의 궤적과 논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光復 50周年 國學의 成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7~63쪽).

13) 정동준, 2019, 앞의 논문, 25쪽 ; 박성현, 2021, 앞의 논문, 37~38쪽.

반 연구 논문의 토대이자, 확장이기 때문에 학위 논문의 경향은 고대사 연구 경향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래 2021년까지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검토한 결과, 그 특징을 본다면 역시 정치와 대외관계 등 전통적인 주제가 강세를 보였다.<sup>14)</sup> 다만 정치사나 대외관계사에서 제도사나 군사 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주제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목간과 같은 출토자료, 유민이나 이주, 도성 등을 단독 주제로 하는 학위 논문들이 제출되었고, 지역학 관련 콘텐츠 활용과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한 학위 논문도 제출되어 학제적 연구를 통한 역사 방법론의 확대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사학계의 주제 선정과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sup>15)</sup>

2000년대 이래로 발표된 일반 연구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분산적이기 때문에, 본 발표문은 연구의 집적물인 박사학위 논문이나 저서를 통해 몇 가지 특징과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특히 2000년대 이래로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경향 중 주목되는 주제로서 ‘자료’에 대한 새롭고, 다른 이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기반으로 하는 확장된 주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이해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사나 도성의 재구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2.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자료학’의 대두

역사학의 기초는 사료이다. 고대사 연구에서 사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거나 출토되지 않는 한, 기존의 자료와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三國史記』, 『三國遺事』이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문헌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전문은 그 수가 많지 않다. 2000년대 이래로 주목되는 연구는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대한 사료 비판과 전거론, 판본 연구이다. 『三國史記』를 전문으로 다룬 단행본은 이강래의 『삼국사기 전거론』(민족사, 1996), 『삼국사기 형성론』(신서원, 2007), 『삼국사기 인식론』(일지사, 2011)과 강중훈의 『삼국사기 사료비판론』(여유당, 2011), 전덕재의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주류성, 2018), 『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주류성, 2021) 등이다. 이들 단행본은 그간의 축적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三國史記』의 전거, 사료적 가치의 복구와 활용에 대한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삼국사기』가 이전의 다양한 기록을 토대로 고려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늘상 엄준한 사료 비판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 형성론』에 대한 서평으로, 조인성은 중국에서 송대부터 『資治通鑑』에

14) 한영화, 2022, 「2000년대 이후 한국고대사 석·박사학위 논문의 현황과 대학원 교육의 방향」, 『사람』 82, 10~11쪽. 한영화의 석·박사학위 논문 집계는 <한국사연구회보>, <d Collection>. <Riss>,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검색한 것으로, 문헌사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고고학이나, 고고미술 혹은 불교미술, 역사교육과 관련된 학위 논문은 제외하였다.

15) 한영화, 위의 논문, 14~15쪽.

대한 해석과 보충이 출현함으로써 ‘통감학’이라는 분야가 성립하였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삼국사기학’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은<sup>16)</sup> 결국 그간 우리가 자료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또다른 시작점을 언급한 것이라 생각된다. 『三國遺事』에 대해서도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했던 하정용의 『『삼국유사』 사료비판: 『삼국유사』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연구』(민족사, 2005)가 출판되었고, 『三國遺事』 파본본이 公刊되었다.(『파본본 삼국유사 교감』, 연세대학교 박물관, 2016)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사료적 재검토나 판본에 대한 연구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한국 고대사의 기초이지만 여러 논쟁이 점철된 자료들로, 원전에 대한 이해와 신라 혹은 고려 당대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여러 변수를 통해 자료 자체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축적된 성과물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동북아역사재단 주도의 『사기』-『수서』 외국전의 역주 작업(동북아역사재단, 2009-2010), 수정본 『발해고』에 대한 교감으로서 김종복의 『정본 발해고』(책과함께, 2018)의 출판, 한원연구회의 『譯註 翰苑』(동북아역사재단, 2018)의 출간에 이은 『翰苑 蕃夷部の 세계』(학연문화사, 2022)의 출판 등은 기존 축적된 연구성과를 반영한 역주 작업과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었다.

금석문의 경우 새롭게 자료가 출토되거나, 기존의 자료를 새롭게 판독하고 재조명하는 연구 활동이 진행되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것은 <충주고구려비>이다. <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로, 기존의 판독문과 더불어, 3차원 스캐닝과 반사율변환영상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사학, 고고학, 국문학, 한문학, 서예학, 문자학, 보존과학 및 디지털 전문가들의 공동 판독 과정을 거쳐 공동판독문이 제시되었다.<sup>17)</sup> 기술의 발전과 학제간 교류·협업이 자료에 대한 재판독과 재검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전자의 경우 새롭게 출토된 자료로 주목되는 것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출토·발견되는 목간과 중국에서의 묘지명을 들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출토자료는 그 수가 많지 않음에도 단독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목간의 경우 윤선태의 「신라 통일기 왕실의 촌락지배: 신라 고문서와 목간의 분석을 중심으로」(서울대, 2000)를 신호탄으로 하여, 이용현, 이경섭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용현의 「한국고대목간연구」(고려대, 2002)는 신라와 백제 목간의 각 출토지의 정황과 유형, 분류, 성격을 정리하였고 있다. 목간의 현황을 통해 문자의 유입과 소화,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확대를 가늠할 수 있으며, 문자의 확산은 중앙과 지방의 관리를 중심으로 행정, 주술과 같은 종교, 사회생활의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18)</sup> 이경섭의 「신라 중고기 목간의 연구」(동국대, 2009)는 신라 월성해자 출토 목간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적어도 신라 마립간기 후반에는 국가 차원에서 문서의 사용이 본격화되었고, 목간의 사용은 4-5세기를 경과하면서 확대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9)</sup>

목간과 관련한 연구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함안 성산산성에서의 목간 출토와 이

16) 조인성, 2008, 「『삼국사기』의 사학사적 연구 -이강래, 2007 『삼국사기 형성론』, 신서원-, 『한국고대사연구』 49, 385쪽.

17) 고광의 외, 2021,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660쪽.

18) 이용현, 2002, 「韓國古代木簡研究」,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81쪽 ; 2006, 『한국목간 기초연구』, 신서원.

19)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391쪽.

에 대한 연구였다. 한반도에서의 목간 출토는 1931년 평안남도 대동군 彩簾塚에서 발견된 이래로 1975년 경주 안압지에서 수십 점이 발견되었지만, 함안 성산산성에서 1991년부터 총 17차에 걸쳐 발굴이 실시되면서 260여 점의 목간이 출토되었고<sup>20)</sup> 목간 연구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고대목간』(2004)을 출간하면서 함안 성산산성을 비롯한 12곳에서의 출토 목간을 소개하고 근접 사진과 함께 적외선 사진까지 게재하였다. 그리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목간사전』(2011)에는 450여 점 정도가 보고되었다. 학계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2007년 한국목간학회가 설립되면서<sup>21)</sup> “목간 자료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여<sup>22)</sup> ‘목간학’의 정립에 일조하고자 학술지 『목간과 문자』를 창간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sup>23)</sup> 목간과 같은 출토자료는 당대의 1차 자료이기 때문에 언어, 문자, 서체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도 이루어졌고, 더욱이 간독과 같은 출토자료는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에서 모두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 교류 혹은 보편성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받으며, 자국사 연구 영역을 뛰어넘어 그 영역을 확대하여 ‘자료학’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24)</sup>

또 다른 출토자료는 묘지명이다. 중국 낙양지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상당량의 고대 한인 관련 석각 자료가 출토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출토되고 있다. 중국에서 출토된 고구려·백제 유민의 묘지명 집성은 1917년 羅振玉의 『芒洛冢墓遺文』에 실린 泉男生, 高慈, 扶餘隆의墓誌를 비롯하여, 1937년 『唐代海東蕃閩誌存』의 천남산, 천현성, 천비, 고진 묘지명이 그 시작을 알렸다. 한국에 재증 금석문을 소개한 것은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992)에서 고구려와 백제 유민의 묘지 10점을 소개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1995), 고구려연구재단의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2005), 광승훈 외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2015) 등이 간행되어 중국에서 발견된 고구려, 백제, 신라 관련 인물의 묘지뿐만 아니라 비나 탑명, 불상명문 등이 수록되었다.<sup>25)</sup>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유민 연구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몇 가지 특징이 지적되었다.<sup>26)</sup> 첫 번째는 기왕의 금석문 자료 현황을 정리하고 유민에 대한 연구 동향 검토를 통해 기존의 자료를 종합하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내 고구려·백제 유민의 거주 현황

20)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300점이 넘는 목간이 출토되었다. 그 중 목서 목간은 모두 255점이다(최장미,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목간과 문자』 18, 192쪽).

21) 김경호는 한국에서의 출토자료 연구의 저변 확대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국외의 연구동향 흡수는 2000년을 전후한 시점이며, 그 확대는 2007년 한국목간학회의 창립과 학술대회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개최로 파악하였다(김경호, 2008, 「21世紀 東아시아 出土資料 研究 現況과 ‘資料學’의 可能性 -古代 東아시아史의 理解를 中心으로-」, 『사립』 31, 28~29쪽).

22) 한국목간학회 창립 발기인 일동, 2008, 「韓國木簡學會 창립취지문」, 『목간과 문자』 창간호, 11~12쪽

23) 『역사학보』에 실린 고대사 파트의 회고와 전망을 살펴보면, 그 목차는 각 분야마다의 특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지만, 점차 각 연도의 특징을 표면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8년부터 목차상으로 ‘새로운 문자자료’, ‘신자료’, ‘신출토자료’ 등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2007년 목간학회의 창립과 2008년 『목간과 문자』 학회지의 창간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24) 김경호, 위의 논문, 3쪽.

25) 광승훈 외 역주,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5쪽 ; 이 책은 고구려, 백제 유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한 신라인, 발해인을 포함하여 279점의 금석문을 나라별로 분류하였다.

26) 윤용구, 2014, 「중국 출토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75, 77~79쪽. 자세한 연구성과는 해당 논문 참고.

을 계층별, 지역별로 살펴면서 정체성이나 자의식의 변화상을 살피는 연구, 세 번째는 2002년 본격화된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고구려 유민이 당으로 귀속되어 唐人化되었다라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河隴와 서역으로 사민된 고구려 주민에 대한 연구였다. 유민사는 ‘이주’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것으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기존에 거주하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디아스포라’를 다룸으로써<sup>27)</sup> 고대 경계인의 정착, 정체성, 사회적 위상, 정치적 활동 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애초에 유민사나 이주사에서도 부여릉과 흑치상지 등 당에서 활동했던 소수의 개인 묘지명에 대한 연구가 주류였다면, 점차 묘지명의 존재가 더 많이 알려지면서 유민들의 생활상이나, 그들의 정체성 문제로 확장되어 갔다. 당에서의 고구려 유민의 출자 인식과 위상을 다룬 김수진의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서울대, 2017)라든지, 발해 유민의 고려 내투와 사회적 지위를 다룬 이효형의 「발해유민사 연구: 고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부산대, 2004)와 같은 박사학위 논문은 이러한 연구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미세하게, 경계를 넘어 재구성하기

제도란 법이나 관습에 의해 세워진 모든 사회적 규약의 체계로 정의된다. 그간 학계에서 제도의 의미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흔히 정치제도, 경제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혼인제도, 신분제도 등으로 막연하게 지칭되는 제도는 사회 전반에 대한 공통의 약속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그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왕권이나 정치사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방식이었다. 일련의 제도사가 법이나 관습에 기반을 둔 규약이라는 점은 중요한 지점이다. 그런 면에서 삼국과 남북국시기의 ‘율령’ 연구와 예제 연구는 제도사적 측면에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율령’과 관련해서는 일찍부터 율령의 계통성으로서의 母法의 문제, 율령 조항의 복원, 율령의 성립 문제, 수찬 과정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율령을 전론으로 한 연구는 홍승우의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서울대, 2011)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삼국의 율령 반포에 대해 중앙의 법제를 전 영역내에 적용하여 국가로서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효율적인 직접 지배를 추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율령의 형식을 개별 법조문인 敎를 모아 법전화하는 형태로 이해하였다. 이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영화의 『한국 고대의 형률 연구』(성균관대, 2012)가 제출되었는데, 관습법과 율령의 연속성과 실질적 운영으로서의 형률을 주로 다루었다. 또한 한준수는 율령을 전론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신라중대 율령정치사 연구』(서경문화사, 2012)를 출간하면서 ‘율령정치사’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한준수는 율령정치에 대해 신라 중대의 唐制 수용과 체제 정비로 파악하여, 율령에 의한 국가 운영을 피력함으로써, 고대사 연구에서의 율령이 제도사적 관점에서 국가체제 정립과 발전

27) 정동준은 ‘이주’에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최근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많은 해외이주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난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정동준, 2019, 앞의 논문, 27쪽).

에 밀착되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sup>28)</sup> 한편 율령은 중국, 한반도, 일본에 이르는 동아시아 역사를 구성하는 공통 지표로서 운운되기에, 중국이나 일본의 법제사 연구의 진전에 따라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비교, 검토가 행해져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2015년 한국고대사학회와 중국고중세사학회가 연합으로 <동아시아의 고대 율령>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고, 율령과 관련한 관심은 2017년 신라사학회와 동국역사문화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한국 고대 법제의 발전단계>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율령의 계통성과 법전의 형식, 단계 설정, 실질적인 운영의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다른 한편, 정치제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관료제 혹은 행정제도를 종합하고 구체화시켜주는 성과가 제출되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박수정의 「삼국사기 직관지 연구」(고려대, 2017)와 정덕기의 「신라 상·중대 중앙행정제도 연구」(연세대, 2019), 단행본으로 하일식의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혜안, 2006), 김희만의 『신라의 왕권과 관료제』(경인문화사, 2019)를 들 수 있다. 그간 행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특히 박수정, 정덕기의 박사학위 논문은 『삼국사기』 직관지의 분석을 전론으로 다루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 志로 편성된 항목은 대체로 율령, 특히 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와 같은 세밀한 분석들은 법으로서의 율령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사지에 대한 분석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산출되었다. 삼국의 국가 제사를 주제로 하는 학위 논문은 일찍부터 제출되었지만, 2000년대 이래로 채미하의 「신라 종묘제와 왕권의 추이」(경희대, 2001), 박승범의 「삼국의 국가제의 연구」(단국대, 2002), 조우연의 「4-5세기 고구려 국가제사와 불교신앙 연구」(인하대, 2010), 강진원의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서울대, 2015), 최일례의 「고구려 시조묘 제사의 정치성 연구」(전남대, 2015), 이장웅의 「백제 사비기 국가제사와 불교사원」(고려대, 2016), 김경화의 「백제의 국가제사」(인하대, 2016) 등이 국가별로 세분화되어 제출되었다. 그리고 단행본으로도 박사학위 연장선상인 나희라의 『신라의 국가제사』(지식산업사, 2005), 채미하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혜안, 2008), 강진원의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서경문화사, 2021) 그리고 채미하의 『한국 고대 국가제의와 정치』(혜안, 2018)가 출간되어 국가제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증명하였다. 특히 나희라와 채미하의 연구는 『삼국사기』 제사지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당·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공시성과 고려·조선의 연결성까지를 염두에 둔 통시성을 갖춘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 제사는 중국의 예제로 五禮 중 길례에 속한다. 사실상 사회 운영의 두 가지 축으로서 법과 예제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서, 국가 제사에 관한 여러 연구는 율령 혹은 법체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국가 운영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예제 연구에 기반이 되어, 예제를 단일 주제로 하는 연구 성과가 산출되기 시작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대표적으로 최희준의 「신라 외빈 영접의례 연구」(고려대, 2018), 박초롱의 「신라 국가예제 연구」(이화여

28) ‘율령정치’라는 표현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율령에 의한 국가운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준수는 신라 하대를 ‘율령질서의 이완’이라 하여 ‘당제에 기반했던 신라 지배체제의 이완’으로 설명하여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과정으로 파악하였다(한준수, 2015, 「신라하대 軍鎮세력의 대두와 율령질서의 이완」, 『한국고대사탐구』 20, 115쪽) 즉 중대의 ‘율령정치’를 소위 ‘전제왕권’의 또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율령정치’가 한국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대, 2022)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실제로 예제를 실현할 수 있는 관사의 문제부터 운용, 특징까지 검토한 것이었다. 특히 채미하의 『신라의 오례와 왕권』(해안, 2015)은 그간 발표해 온 논문을 종합한 단행본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五禮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라 국가 예제의 운용에 따른 왕권의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도의 문제는 정해진 규정과 실질적인 운용의 문제를 항시 내포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규정과 운용의 괴리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회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삼국, 남북국의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중국의 제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시켜 적용했는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사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비교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2000년 이래 연구성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도성 관련 연구이다. 특히 궁궐, 주거지 등이 배치되는 공간 구조는 『삼국사기』 屋舍의 내용을 토대로 신분과 계층에 따라 집의 규모, 장식, 재료 사용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종의 법령에 의한 구현으로 파악되었다.<sup>29)</sup> 더욱이 왕경 유적의 발굴 등 고고학 성과와 연동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김희선의 「6-8세기 동아시아 도성제와 고구려 장안성」(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기경량의 「高句麗 王都 研究」(서울대, 2017), 이동주의 「신라 통일기 왕경의 구조와 운영」(경북대, 2018), 권순홍의 「고구려 도성 연구」(성균관대, 2019), 김재범의 「백제 사비시기 익산 경영 연구」(건국대, 2022) 등이 제출되었고, 단행본으로는 양정석의 『한국 고대 정전의 계보와 도성제』(서경문화사, 2008), 전덕재의 『신라 왕경의 역사』(새문사, 2009), 김희선의 『동아시아 도성제와 고구려 장안성: 6-8세기 도성의 가로구획 방식을 중심으로』(지식산업사, 2010), 박순발의 『백제의 도성』(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이도학의 『백제 도성 연구』(서경문화사, 2018) 등이 출간되었다.

도성사의 초기 연구는 왕성의 위치 비정을 둘러싼 논쟁이었다면, 점차 초기 왕성에서 대도성으로의 전환, 가로구획의 조영원리, 평균적인 거주 단위와 도성 전체의 공간 구성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30)</sup> 더 나아가 도성의 개념과 구조, 경관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백제 도성과 관련해서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그리고 웅진 도성과 사비도성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기반으로, 신라 왕경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왕경유적, 월성 및 동궁과 월지, 황룡사 일대의 발굴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 구조와 경관의 변천에 지속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리 정보와 고고학 자료를 집성하면서<sup>31)</sup>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도시 생태학으로도 확장되고 있다.<sup>32)</sup>

29) 李相海, 1995, 「『三國史記』 屋舍條의 再考察」, 『건축역사연구』 4-2, 45쪽. 양정석은 『삼국사기』 육사의 내용이 당 문종 시기 영선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율령이 전제된 것으로 이해하였다(양정석, 2007, 「營繕令을 통해 본 『三國史記』 屋舍條」, 『한국사학보』 28, 13쪽).

30) 여호규, 2007, 「도성과 도시」, 한국고대사학회 편,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636쪽.

31) 박성현, 2021, 앞의 논문, 43쪽.

32) 안소현, 2020, 「식물유체로 본 신라 도성의 도시생태계 복원 시론」,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문』 44 ; 권순홍, 2020, 「한국 고대 도시의 오물 처리와 근교 농업 -도시의 생태환경사 연구 시론-」, 『생태환경과 역사』 6 ; 최준식, 2020, 「문헌기록을 통해 본 신라 왕경의 자연경관」,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4 ; 이현숙, 2018, 「동아시아 고대 법령으로 본 권력과 숲 -인공 식재를 중심으로-」, 『생태환경과 역사』 4 ; 서민수, 2018, 「신라 중고기 왕경의 숲 개관과 경관 변화」, 『한국문화

도성사는 권력과 자연적 생태, 문화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학의 전유물이 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리학, 고고학, 생태학, 건축학 등의 융합적 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학계에서도 이러한 추세로 연구의 방향이 잡히고 있다. 이는 도성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빈번해진 기후 이상과 전염병의 문제와 같은 주제는 이미 고대사의 학위 논문으로도 등장한 바 있다. 신정훈의 「8세기 통일신라의 정치적 추이와 천재지변의 성격」(중앙대, 2003)과 이기봉의 「통일신라시대 재이와 정치·사회 변동」(충남대, 2016)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대사에서의 의학, 질병 연구는 이현숙의 박사학위 논문인 「신라의학사연구」(이화여대, 2002)를 통해 의학의 발전을 왕권과 관련해서 설명한 이래로, 더욱더 관심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sup>33)</sup> 결국 고대사에서도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 4. 고대사 연구의 위기와 기회 사이

2000년 이래로 한국고대사 연구는 양적으로 비약적 성과를 이루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분야로 연구가 확대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간 고대사학계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유사역사학’의 확산 등 대내·외로 위기적 요소가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대사 연구는 학계 외적인 요소로만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제기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 양적 증가가 연구 성과의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이 지적된 것이다. 사료에 대한 실증과 분석을 결여할 채, 단순한 異說의 경쟁으로만 논문을 양산하면서 역사학의 본령이 훼손되고 있음은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즉 논문의 내용과 수준이 기존과 다른 자료 해석이나 독창적인 역사상 구현에 미치지 못함을 우려한 것이었다.<sup>34)</sup> 더욱이 목간을 제외하면 새로운 문자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문헌사’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sup>35)</sup> 고대사 연구에서는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미 1990년대를 거치면서 연구자의 증가와 지속적인 박사학위 논문의 배출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신진 연구자들이 소재의 빈곤으로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작업은 지난해졌고,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개척과 기초적인 연구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다.<sup>36)</sup> 2000년 이래로의 연구 성과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기초 자료에 대한 재검토,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연구 영역과 새로운 방법론 개

』 81.

33) 이정빈, 2021, 「고구려-수 전쟁과 전염병」, 『한국고대사연구』 102.

34) 윤선태, 2013, 「한국 고대사학과 신출토 문자자료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사학보』 219, 5쪽.

윤선태는 고대사의 사료가 매우 적다는 현실을 논문 양산의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사료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료에 대한 실증적인 작업을 통해 논문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5) 권오영, 2021, 앞의 논문, 9쪽.

36) 김기홍, 1995, 「한국고대사 연구 50년(1945-1995)」, 『한국학보』 21-2, 21쪽.



발을 이미 시작했거나, 주제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차 강조해야 할 방향성은 있다.

먼저 문헌 및 고고학 자료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검토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삼국사기학’이나, ‘목간학’, ‘자료학’ 등의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다.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론이다. 하나는 비교사적 접근법이다. 공시성을 갖는 각 사회에 대한 연구가 상호 통합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학문들의 학제간 연구이다. 특히 출토자료에 대해서는 고고학, 국문학, 서지학, 미술학, 생물학 그리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야 의미있는 ‘학’으로서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비교사적 접근법이나 학제간 연구는 고대사의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방법론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었다. 사실상 고대사 연구는 이제 일국사점 관점에서의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동아시아사, 더 나아가서는 동부 유라시아사 등으로 전환할 것을<sup>37)</sup>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대사의 출발이 되는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이다.<sup>38)</sup> 고대국가, 왕권, 왕실, 귀족, ‘고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규정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검토로 연구 대상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할 것인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시기의 활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시적 시각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사회과학 이론 등을 수용하여 용어나 개념을 엄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론적 체계를 갖춰<sup>39)</sup> 연구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도성사와 기후사, 생태환경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 역사콘텐츠의 활용 등의 연구들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빅데이터 기법을 접목한 박사학위 논문인 서호준의 「빅데이터와 한국 고대사 연구」(대구가톨릭대, 2021)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해방 이후 한국고대사의 연구 경향을 검토하였고, 임동민의 「백제 한성기 해양 네트워크 연구」(고려대, 2022)는 해양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가시화하고 다원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분석’<sup>40)</sup>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또한 공주대와 원광대에서는 문화자원의 활용과 관련한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되기도 하였는데,<sup>41)</sup> 이는 또다른 측면에서 지역사 혹은 지역학과도 연관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중심의 다양성, 다변화로서의 지역학에 대한 주목이다. 역사학계에서도 거시적 안목의 사회변동의 강조에서 개인의 삶이나 지역 공동체의 존재 형태 등 구체적인 인간 생활모습을 중시하는 경향과 맞물려 지역사의 필요성이<sup>42)</sup>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학문 분과들의 세분화와 고착화 추세에 종속되는 측면이라든가 각 분과들에 고유한 방법과 이론들을 빌어와서 이를 적용하는 데 노출되는 문제점 등<sup>43)</sup> 지역학의 정립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

37) 권오영, 2021, 앞의 논문, 18쪽.

38) 이경섭, 2017, 앞의 논문, 46쪽.

39) 여호규, 2021, 앞의 논문, 29쪽.

40)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참여자의 관계성과 중심성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방법론이다(임동민, 2022, 『백제 한성기 해양 네트워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쪽).

41) 장충희, 2020, 『공주와 부여의 백제역사문화자원 가치 제고를 통한 활용방안 연구』, 공주대 박사학위 논문 ; 양기승, 2020, 『백제 무왕설화의 지역문화 콘텐츠화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 논문.

42) 신호철, 2008, 앞의 논문, 8쪽.

43) 오영교, 2019,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173쪽.

직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역사학에서 지역사의 부각은 그동안 중앙에 대한 집중도에서 벗어나 중심의 다원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고대사 연구에서는 중앙의 사건이나 인물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제도적 측면에서만 다뤄진 경향이 있었다. 고대사에서 지역사 연구는 각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sup>44)</sup>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중앙과의 관계로서의 지역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우선으로 규명한다면 확장된 영역으로서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000년 이래의 고대사 연구는 이전까지 국가, 민족, 시대구분 등의 거대 담론에<sup>45)</sup> 집중되어 있었다면,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인접학문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고대인들의 삶에 밀착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인간의 삶에 천착하려는 연구자들의 시도는 결국 그 사회를 더 넓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된다.<sup>46)</sup>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21세기 들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그동안의 역사학계는 새로운 시각이나 시도에 대해 조금은 인색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역사학 자체가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탐구와 해석이기에 생태적인 보수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대를 읽는 다른 시선에는 그다지 관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너그럽고 진지한 자세가 기반이 된 관용의 분위기는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저서

- 역사학회 엮음, 2007, 『한국 역사학의 성과와 과제』, 일조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2005, 『한국사 연구 50년』, 혜안.  
 한국고대사학회, 2007,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6, 『光復 50周年 國學의 成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 논문

- 권오영, 2021, 「한국 고대사 연구의 미래를 위하여」, 『역사와 현실』 122.

44) 권오영은 고고학 자료 출현은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하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임을 강조한다(권오영, 2021, 앞의 논문, 9쪽).

45) 차하순은 20세기 후반기 한국사의 특성을 식민사학의 극복과 민족주의 사관의 강세, 유럽역사학의 편향적 수입을 지적한 바 있었다(차하순, 2007, 「한국 역사학의 유산과 21세기의 과제」, 역사학회 엮음, 『한국 역사학의 성과와 과제』, 일조각, 18~29쪽).

46) 미시사는 작은 사례를 창으로 삼아 넓은 바깥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고, 틈새 사이로 드러나는 작은 것로부터 그것을 둘러싼 더 넓고 심층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미시사의 특징이라는 지적을(곽차섭, 2017, 『다시,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32~35쪽)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 김경호, 2008, 「21世紀 東아시아 出土資料 研究 現況과 ‘資料學’의 可能性 -古代 東아시아史의 理解를 中心으로-, 『사림』 31.
- 김기흥, 1995, 「한국고대사 연구 50년(1945-1995)」, 『한국학보』 21-2.
- 김영심, 2009, 「한국 고대사연구 100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연구방향의 모색」, 『역사학보』 203.
- 김창석, 2015, 「자료 공유의 경험과 연구 영역의 확장」, 『역사학보』 227.
- 노명호, 2012, 「한국사 연구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 『역사학보』 215.
- 박성현, 2021, 「고대사학에서 고대학으로」, 『역사학보』 251.
- 문창로, 2005, 「고대사연구 60년의 동향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40.
- 신호철, 2008, 「한국사학계의 당면과제와 향후 전망」, 『역사학보』 199.
- 양정석, 2007, 「營繕令을 통해 본 『三國史記』 屋舍條」, 『한국사학보』 28.
- 여호규, 2011, 「2009-2010년 한국고대사 연구동향: 잇따른 신자료 출현과 새로운 한국고대사상의 모색」, 『역사학보』 211.
- 여호규, 2021, 「한국사 연구의 신경향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역사학보』 251.
- 윤선태, 2013, 「한국 고대사학과 신출토 문자자료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사학보』 211.
- 윤용구, 2014, 「중국 출토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75.
- 이경섭, 2017, 「기로에 선 한국고대사 연구와 전망」, 『역사학보』 235.
- 이영호, 2003, 「고대」, 『역사학보』 179.
- 임경석, 2020, 「백화제방의 화원, 복류하는 이질성」, 『역사학보』 247.
- 전덕재, 2001, 「고대」, 『역사학보』 171.
- 전호태, 2005, 「밖으로부터 시작된 위기와 기회, 2004년의 한국고대사연구」, 『역사학보』 187.
- 정동준, 2019, 「한국고대사 연구의 양적 증가와 새로운 동향」, 『역사학보』 243.
- 정연식, 2017, 「양적 성장의 벽과 질적 전환의 길」, 『역사학보』 235.
- 조인성, 2007, 「고대사 연구의 성과」, 『역사학보』 195.
- 최장미,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목간과 문자』 18.
- 한영화, 2022, 「2000년대 이후 한국고대사 석·박사학위 논문의 현황과 대학원 교육의 방향」, 『사림』 82.

# 한영화, 「21세기 고대사 연구의 성과와 방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역량의 축적-」에 관한 토론문

윤성호(한성대)

한국고대사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한된 연구 소재에 있음을 발표자는 지적하였다. 소재의 빈속 속에서도 사료와 금석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거시적 혹은 미시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여러 차례 달여서 더 이상 약효가 나오지 않는 탕약기의 약재처럼 최근의 연구들은 양적인 증가 속에서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과거 1990년대까지 한정된 석유가 30년 이내에 고갈되어 인류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채굴 기술의 발달과 대체연료의 개발로 그러한 위기감은 낮아진 상태이다. 즉, 발표자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다양한 학제간의 연구라는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쉽지 않은 주제를 치밀하게 분석한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발표자의 견해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 다만 몇 가지에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1. 자료학의 대두와 고대사연구의 발전 가능성

한국고대사 연구의 근간이 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당대의 1차 사료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편찬된 사서라는 점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표자는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정사와 기타 사서류에 대한 역주와 분석도 자료 이용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새로운 자료의 출현이 기대되는 부분은 금석문과 목간 등 문자자료일 것이다. 발표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기법의 적용과 학제간 연구의 진행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자료학의 성립과 발전은 고무적이지만, 이를 이용한 연구는 거시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미시적인 연구를 추가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자료학의 성립을 바탕으로 기왕에 섰던 거대담론의 재검토 방향이나 고대사 연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2. 고고자료를 통한 고대사 연구의 보완

경계를 넘어서 제도와 율령제의 연구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도성제와 관련된 연구는 학제간 융합이 진행되고 있다. 사료의 한계에 비해 지속적으로 자료가 증가하는 분야가 고고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역사지리학, 생태학, 건축학을 포함하여 역사학과 연계한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역사고고학의 연구의 근간이 되는 편년안이 역사학의 연구에 기반을 한 경우가 있으며, 상호 논리를 보완하며 순환논리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다. 즉, 고고학 연구의 한계로 고대사와의 접목이 쉽지 않다. 게다가 역사학 연구자는 명확한 편년안 없이 본인의 논지를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발표자는 지역학 연구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거대담론에 집중된 연구가 미시적으로 인간의 삶을 심층적으로 천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각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고 하였다.

고고자료를 포함한 고대사 분야의 지역학은 사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구술자료 등의 아카이빙이 가능한 근현대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는 고고학 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대사연구 적용에 있어서 주의점이나,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린다.

### 3.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발표자는 보수적인 역사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시대를 읽는 새로운 시선에 대한 관대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하다고 생각된다. 발표자의 견해가 집약된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전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향후 한국고대사 연구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를 통해 본 국가와 향촌공동체의 생존방식

최주희(덕성여대)

1. 머리말
2. 소농과 향촌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
3.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의 재편: 장기지속의 딜레마
4. 맺음말

## 1. 머리말

돌이켜보면 2000년 대학원 석사과정 첫 학기에 읽은 세미나 자료가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강만길, 창작과비평사, 2000)였다. 현재 학계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여러 선배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닮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지나왔던 시간의 궤적 자체가 한국 사학사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음을 체감한다.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총설에서 편자인 강만길은 8~90년대 조선후기사 연구의 특징을 ①시대정신의 변화, ②구조와 변동, ③이론과 실증의 영역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①시대정신에 있어서는 8~90년대 사회과학 이론으로 무장한 실천적 의지가 강한 소장학자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민중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면서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②구조와 변동에 있어서는 한국사의 해체나 와해, 변동을 밝히기 앞서 ‘중세사회’의 기본구조나 조선후기의 正體性を 규명하려는 연구가 축적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상부구조나 국가지배정책의 입장에서 조선후기 역사상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③신진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이론적 접근 뿐 아니라 사실관계의 규명이라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해 이론적으로 정밀해지고 事實도 풍부하게 확인되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자료의 발굴과 전산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역사연구는 사료 편찬작업과 다르지 않기에, 역사연구가 자칫 소재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sup>1)</sup>

한편 이 무렵 ‘21세기 역사학’이라는 타이틀로 2000년대 한국사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입론들도 발표되었다. 한국사연구에 기반이 되어 온 내재적 발전론을 성찰하고, 아래로부터의 전체사를 지향하는 역사학의 실천 방향을 제안하는 논의들이 발표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역사연구회에서 펴낸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에서 김인걸은 21세기 한국사학의 과제를, 우리 역사학의 전통인 실천성을 견지하며 ‘열린 민족주의’와 ‘열린 과학적

---

1) 강만길, 2000, 「총설」,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역사학'의 전망에서 '전통문화의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sup>2)</sup>

그러나 2000년의 회고와 전망과는 달리, 지난 20년간의 조선사 연구는 일관된 방향성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다양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적 층위를 형성하며 전개되어 왔다. 이 중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적 방법론의 외피를 유지한 채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거나<sup>3)</sup> 이를 전면 부정하는 논쟁이 제기됐다.<sup>4)</sup> 둘째, 생활사·미시사·문화사 등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연구방법론이 도입되고, 관찬사료 외에 일기, 고문서, 고전소설 등으로 연구대상이 확대되었다. 셋째 일국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사·민중사·여성사로 연구시각이 다변화되었다. 넷째, 관찬자료의 DB화와 민간기록물 수집량 확대로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공공역사학 분야의 수요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을 거치며 2000년대 조선사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연구주제는 과편화, 분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현 시점에서 21세의 시대정신에 입각해 왕조국가의 구조와 변동을 재검토하고, 실증에 입각한 이론의 재정립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앞서 첫 번째 범주의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내재적 발전론이 비판적으로 계승되던 8~90년대는 산업화를 통한 가시적 경제성장과 민주화 운동을 통한 정치체제의 질적 변동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 대규모 실업과 고용 불안, 빈부격차 등의 구조적 모순을 감내하고 새로운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추으면서 자본주의가 진정 '사탄의 맷돌(Satanic mill)'<sup>5)</sup>임을 체감해왔다. 자본주의는 애초에 대다수 농민, 노동자들에게 자비롭지 않았음에도, 90년대까지 한국사 연구는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을 역사 속에서 입증해내는 것이 민족국가 건설의 시대적 과제로 인식했고,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도달해야 할 그 무엇으로 대상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시대정신은 자본주의가 야기한 구조적 모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국제사회의 위상이 변화한 지금, 타율성·정체성론으로 대변되는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해 6~70년대 촉발된 내재적 발전론을 5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이어가는 것은 후속세대에게는 어쩌면 철 지난 담론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를 세계사적 발전 과정 속에 객관적으로 위치 지우면서도 발전 동력의 내적 특수성을 규명해 나가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위해 현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담론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6)</sup>

2) 김인걸, 2000, 「현대 한국사학의 과제」,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역사비평사.

3) 2000년대 이후 내재적 발전론의 비판적 논쟁들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이현창, 2007, 「한국사 파악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문제점」, 『한국사 시민강좌』 40 ; 김정인, 2010, 「내재적 발전과 민족주의」, 『역사와 현실』 77 ; 이영호, 2011,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체적과 전망」, 『韓國史研究』 152 ; 권내현, 2015, 「내재적 발전론과 조선후기사 인식」, 『역사비평』 111 ; 최중석, 2016, 「내재적 발전론 ‘이후’에 대한 몇 가지 고민」, 『역사와 현실』 100 ; 염정섭, 2019, 「1960~70년대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와 내재적 발전론, 근세사회론」, 『韓國史研究』 184).

4)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소농사회론과 제정, 시장의 문제를 거론하며 상술하도록 하겠다.

5) 칼 폴라니(홍기빈 역), 2009, 『거대한 전환-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길, 163~164쪽. 사탄의 맷돌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서사시 Milton(1804)의 序詩로 나오는 ‘And Did Those Feet in Acient Times’에 나오는 표현이다. 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영국에 온 적이 있다는 전설을 언급하면서 산업혁명으로 혼란에 빠진 19세기 초 영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근대성의 또다른 요소인 민족주의, 관료제와 같은 개념은 내재적 발전론의 틀에서 논의를 확장

이 점에서 2000년대 본격적으로 제기된 소농사회론과 일련의 재정사 연구는 내재적 발전론의 비판적 키워드로 활용되면서도 조선왕조의 역사성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중세사회의 기본구조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논의가 ‘소농’과 ‘재정’이라는 키워드로 발표되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밀도 있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조선시대사 연구분야 중 연구의 양적 성과가 두드러진 ‘재정사’ 분야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구 동향을 개관하고자 한다.<sup>7)</sup>

주지다시피 財政은 하나의 사회집단이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수취)-관리-소비(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의미한다. 오늘날 재정학에서는 전체 국민경제(가계·기업·국가·지방공공단체 등 개별경제의 총합) 중 국가를 주체로 하는 개별경제 단위로서 公共經濟(Public economy)를 구성하는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을 公經濟와 私經濟로 나눌 때, 재정은 공경제의 영역으로서, 개인의 욕망 실현이나 이익창출이 아닌, 집단의 공동 목표 실현이나 장기지속을 위해 행하는 재원의 분배와 소비 등의 활동을 일컫는다. 사경제가 시장을 매개로 분업과 교환행위를 하는 경제주체들에 의해 유지된다고 한다면, 공경제는 수평적 관계(horizontal relation)로 연결되는 사경제의 개별단위를 수직적(vertical relation)으로 위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공경제의 주체인 국가가 사경제의 개별단위인 개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재화·자금·용역을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sup>8)</sup> 재정의 이러한 속성은 조선왕조의 재정구조와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재정이라는 공경제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닌 구성원의 복지에 있으며, 작동원리는 시장

---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내에도 소개된 Ramon Pacheco Pardo는 지금의 한국사회의 발전 원동력을 Ethnic nationalism 대신 Civic nationalism에서 찾고 있어(Ramon Pacheco Pardo, *Shrimp to Whale*(London: Hurst, 2022), 한국사학계가 민족주의 역사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서구 학계의 오랜 비판이 전복되고 있다. Odd Arne Westad 역시 하버드대학교의 에드윈 O. 라이샤워 강연에서 제국과 붙어 있던 한반도가 결코 제국에 편입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오랜 기간 중국의 봉신국으로 자처하며 국내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대신, 국방과 외교 문제를 제국에 의존하는 복합주권complex sovereignty을 행한 점, 제국과 문화, 정치적 연대를 이어가면서도 고도로 문명화된 유교국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유지해 제국과 다른 복합적 특수성compound singularity을 만들어낸 점을 들었다(오드 아르네 베스타(옥창준 옮김), 2022, 『제국과 의로운 민족Empire and Righteous Nation』, 너머북스, 198~199쪽).

7) 90년대까지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는 부세제도의 변동과 민중의 저항이라는 관점 하에 연구되어 오다가 2000년대 이후 국가의 수입-지출구조 전반을 다루는 재정사 연구성과들이 폭넓게 축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3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8) 金大濬, 1973, 『財政學-理論과 政策』(개정판), 日新社, 18~19쪽. 공경제의 주체인 국가가 시장경제의 주체인 가계,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재원을 소비하며, 둘째, 가계나 기업에 공공재 및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조세를 징수한다. 셋째, 사경제 영역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후진국일 경우 정부 재정이 민간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재정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갖지 못하며, 다섯째, 공경제는 국가의 존속이 영구성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공경제의 특성은 전근대 왕조국가의 재정운영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징들이며, 다만 재정이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립된다고 할 때의 시장은 적어도 조선왕조에서는 자급자족의 농촌경제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겠다.



경제의 수평적 교환이 아닌, 수직적 위계에 따른 징수와 배분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조선 시대 향촌의 하부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재화의 出捐과 배분을 통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를 실현하고 있었기에 공경제의 주체를 국가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을 듯하다. 또한 재원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수직적 위계관계 속에서 징수와 배분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호혜, 재분배의 원리가 관철됐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조선시대 국가재정에 속했던 왕실재정은 왕실 각 전궁과 궁방의 사적 재산을 국가행정 영역에서 관리함으로써 공경제로 인식할 수 있으나, 왕실의 私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 이를 공경제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공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재정원리가 조선후기 국가와 향촌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최근 20여년 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는 재정 운영의 기초 단위인 ‘농민’의 성격 문제를 소농사회론과 향촌공동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재정 운영의 최고 단위인 ‘국가’ 운영 실태를 수입과 지출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소농과 향촌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

2000년대 초 내재적 발전론의 대안 이론으로서 ‘小農社會論’이 제기됐으며 단성호적의 전산화에 따른 ‘戶’의 성격 논쟁이 야기됐다. 소농과 호는 모두 조선왕조의 재생산 기반이 되는 기초 단위이다. 다만 호는 국가에서 부세와 역역의 수취단위로서 농민을 파악하는 방식인데 반해, 소농은 가족형태와 토지경작 규모에 따른 농민의 존재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하나의 소농 가족이 단일 호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소농 가족에 속한 노비, 고공 등의 예속인까지 포함한 호가 하나의 호로 기재될 수도 있고, 혈연으로 연계된 두 소농가족이 한 호로 편제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호의 성격은 재정사 연구 흐름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서를 중심으로 소농의 성격과 조선후기 향촌공동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90년대 말 미야지마 히로시는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재고하기 위해 유교적 근대국가 성립의 사회경제적 특질로서 소농사회론을 제안했으며, 이영훈 역시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고 동아시아의 보편적 경제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소농사회론을 제기했다.

소농사회는 향촌의 수많은 자연호들로서 1결(=연 생산량 400~600두) 미만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직계가족 위주의 가내 노동력을 농업과 수공업에 투입해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층이 지배적인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농사회론은 미야지마 히로시와 이영훈에 의해 제기되었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전근대 동아시아국가들[중국 송대~명대, 조선 후기, 일본 에도시대] 사이에 주자학의 성립과 그 수용에 적합한 사회구조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를 ‘小農社會’로 규정했다.<sup>9)</sup> 이 시기 동아시아 삼국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농업 기술의 변혁이란 두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리거나 간에 소농

9) 宮嶋博史, 1999,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형성」, 『인문과학연구』 5, 155쪽.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농업경영을 행하는, 소농이 지배적인 사회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소농사회의 특질이 근대 이후에 계승된 것으로 보았다. 보다 중요한 특징은 소농사회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정치 지배층은 직영지를 경영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영역 지배권도 상실해갔다는 것이다. 이로써 성리학의 통치 이념인 一君萬民體制로 민중의 균질화가 진행되어 갔다고도 했다.<sup>10)</sup>

소농사회론은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 있는 이론 틀이기는 하지만, 토지에 긴박된 소농이 국가재생산의 기본단위로 역할한 것은 그들이 전객이었던, 전호였던, 작인이었던 간에 17세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듯하다.<sup>11)</sup> 유교적 근대국가의 핵심 주체인 사대부의 경제구조만을 살펴보더라도 이들이 정치 지배층으로서 직영지를 경영하지 않았거나, 특정 지역에 영역지배권을 상실했다는 설명은 15~16세기부터 형성된 사족지배체제의 성격을 곡해할 여지가 있다.

이미 조선전기부터 성리학적 통치질서 하에 집권적 관료제가 구축되면서 사대부들이 토지와 인민을 직접 지배하는 직영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18과에 속하는 왕실구성원과 관료들 일부에게 科田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이 수조지 백성들을 인신 지배하는 통치권까지 양여한 것은 아니었다. 미야지마 히로시의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17세기 소농사회의 성립은 성리학적 이념을 장착한 지배 엘리트로서의 사족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도 얻지 못한 채 영세소농과 비슷한 처지로 전락하는 단계에서 구축되는 사회라는 말이 된다. 이러한 논리적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사대부 스스로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도덕교화를 명분으로 향촌자치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고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향권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 점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한편 이영훈 역시 소농사회의 성립을 17세기 후반으로 설정하고 20세기 전반까지 약 3세기간 변영과 안정, 위기와 파국, 회복과 성취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평가하였다.<sup>12)</sup> 그는 전라도 고부군 용동궁 양안에서 ‘경영형 부농’을 검출한 김용섭의 논지를 전면 비판하면서 17~20세기 초까지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상층농은 줄어들고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하층농이 증가하여 결국 소농이 농가의 표준적 형태로 정착된다고 설명했다.<sup>13)</sup> 특히 18세기 변영과 안정을 거쳤던 소농사회가 19세기 위기와 파국으로 치닫다가, 식민지기 ‘제도의 이노베이션’을 거치며 다시 안정기를 되찾았고 해방 후 이들이 경제발전의 기초 단위가 되었다는 장기지속의 흐름을 제시했다.<sup>14)</sup> 19세기 토지생산량의 U자곡 곡선에 따라 19세기 말~20세기 전반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들이 자기자본의 상당 비중을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면서, 해방 이후 계층구조의 재편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영훈 역시 미야지마 히로시의 소농사회론과 유사하게 ‘소농’의 존재를 17세기 이후에 형성된 역사적 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미야지마 히로시가 17세기 소농사회의 성립을

10) 宮嶋博史, 앞의 논문, 155~156쪽.

11) 이러한 비판은 이미 권내현에 의해 제기되었다(권내현, 앞의 논문, 427~431쪽 참조).

12) 비교사적 관점에서 中村哲은 동아시아 삼국의 소농사회는 19세기 들어 중국의 정제, 일본의 발전, 조선의 후퇴·위기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中村哲, 2007, 「동북아시아 경제의 근세와 근대」, 『근대 동아시아경제의 역사적 구조』, 일조각, 31쪽).

13) 이영훈, 2002, 「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 『역사와 현실』 45 ; 「6장 소농사회」, 『한국경제사-한국인의 역사적 전개』, 일조각.

14) 이현창은 이에 대해 안병직과 이영훈이 ‘식민지화 이전 소농사회의 발전→식민지근대화→해방 후 경제발전’이라는 역사상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이현창, 2007, 앞의 논문, 12쪽).

집약적 농업경영이 시작되는 점에서 찾은 것과 달리, 이영훈은 부계 친족 중심의 소규모 가족구조가 형성되는 점에 보다 주목했다. 그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방계친족들이 호의 구성원에서 배제되었으며, 1660년대부터는 광범위한 예속인구가 소멸하면서 부계 친족 중심의 직계가족이 호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소농의 기본단위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호적대장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노비인구를 포함한 소규모 가족농의 형태는 19세기 무렵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며,<sup>15)</sup> 주호에 경제적으로 의지해 생활하던 挾戶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소농의 평균적 형태를 직계가족으로 한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18세기 소농사회의 변형과 안정이 목도되는 시기조차도 농민층이 직계가족 단위의 영세농으로 하향평준화의 길만을 걸었다고 보기 어렵다. 새롭게 발굴되는 고문서자료들에서 문중 단위의 가계경영이 소농 이상의 규모로 파악되는 사례들이 많은 점을 볼 때 조선후기 농민층의 시기별 분화양상을 다소 평면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19세기 지대량과 지방장시 수, 환종의 감소를 소농사회의 위기로 진단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17세기 후반 이미 대기근과 흉작, 낮은 수준의 교환시장 하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소농사회를 성립시켰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소농사회가 성립되었다고 설명되는 17세기 후반 역시 심각한 환경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이후 한 세기 동안 안정된 향촌사회를 구축했다가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을 경기순환의 사이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파국의 상황으로 서술함으로써 19세기의 현상적 위기를 과대평가했다.

일례로 지대량의 감소는 작인들에게 종자와 세 부담을 맡기는 대신 지대 수취율을 낮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作人이 향촌 내 族人·契人들로 구성됨에 따라 지대 수취에 온정주의가 통용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16)</sup> 지역 간 수확량을 비교해보더라도 19세기 토지 생산성이 18세기에 못지않게 나타나는 사례들이 확인되며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답의 경우 민유지가 아닌 족계답이나 서원답으로 파악됐다.<sup>17)</sup> 한편 재분배의 해체기로 평가되는 1840년 이후로도 社倉 설치와 진휼곡 마련의 사례들이 검출되고 있다.<sup>18)</sup>

그가 제시한 19세기 계량 데이터들이 소농가족에게 직접적인 위기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다수의 소농층은 분해되어 향촌을 떠났어야 한다. 그러나 소농들은 오히려 자신의 터전에서 족적 결합을 공고히 해 상호부조와 부세대응을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족계답 운영과 같은 생존전략을 고도화해갔다. 식민지기 제도의 이노베이션이 있기 전 소농가족은 위기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9)</sup>

요컨대, 소농사회론은 17세기 이후 조선왕조의 경제단위가 영세 소농으로 하향평준화되는

15) 송양섭, 2004, 「19세기 유학호의 구조와 성격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7.

16) 19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추수량 감소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주희, 2022, 「19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재정운영」, 『국제퇴계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참조).

17) 배향섭, 2012, 「19세기를 바라보는 시각」, 『역사비평』 101, 228~234쪽 참조.

18) 송양섭, 2021, 「19세기 社倉·社還制 운영과 향촌민의 진휼참여 -순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97.

19) 안병직은 이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식민지기 전체 경제의 약 40% 비중까지 크게 신장했으나 자본주의가 전통 소농경제를 유기적으로 포섭하고 하나의 통합적 경제체제로 흡수하지 못했으며 방대한 농촌인구를 흡수할 능력이나 전망을 상대적으로 결여하였다고 평가했다(안병직, 『맛질의 農民들-韓國近世村落生活史』, 일조각, 5쪽).

중장기적 변동을 실증한 점에서 높은 이론적 완성도를 보이지만, 3세기에 걸친 소농의 존재 양상을 다소 평면적으로 서술한 측면이 있다. 또한 19세기 위기 요인과 일제시기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를 각각 과대 평가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소농이 19세기 위기 파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향촌에서 파편화된 소농으로서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촌락을 형성해 부계친족 간의 족적 결합력을 높이고 이로써 상호부조와 부세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조선후기 契와 같은 공동체 조직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있었으며, 90년대부터 洞契, 洞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sup>20)</sup>

16세기 주자증손여씨향약이 조선에 도입되어 퇴계·율곡에 의해 4조목[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으로 대표되는 조선적 향약으로 정착된 후, 사족들의 친목계, 족계에서도 점차 향약을 표방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농민들의 향도계를 흡수해 上下合契의 새로운 동계·동약을 결성하는 부류도 있었다.<sup>21)</sup> 대표적인 사례로 백불암 최흥원이 창설한 부인동 동약을 들 수 있다. 1738년(영조 14) 백불암 최흥원이 향약을 시행하고 洞畵를 팔아 주자 사창을 본받은 진휼 창고를 운영하는 한편 公田을 마련 해두고 여기에서 소출을 先公庫에 비축해 두었다가 동민에게 부과되는 부역을 마련하는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농사지를 토지가 없는 동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흉년에 구휼하는 恤貧庫도 운영했다.<sup>22)</sup>

물론 이러한 동계·동약의 운영이 평화롭게 전개된 것만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부인동 사례에서도 洞畵와 洞財의 분할, 선공고와 홀빈고에서의 균역가 부담, 부인동의 分洞 등 여러 분쟁과 소송이 야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관권으로 대표되는 대구부와 경상감영은 어디까지나 구성원 간 합의를 유도하고, 동약을 보증하는 태도를 취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약은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정해졌으며, 규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는 구성원들 간 상호 견제와 감독 속에 행사되었다.<sup>23)</sup> 양반사족이 주도하는 동계·동약의 기저에는 하층민의 통제와 위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교화를 명분으로, 救恤과 防役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였기에 19세기 하층민들의 자체적인 下契 운영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존속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영훈은 조선후기 계 조직을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예천 대저리의 박씨가에서 4대에 걸쳐 작성된 『일기』 자료를 분석해 대저리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의 특성을 검토했다. 그에 따르면 대저리 마을민이 중층적으로 속했던 송계, 동계, 천방계, 학계, 종계, 면계, 향계는 양반사족의 결사체로서 사실상 양반들의 상호부조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하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지배기구로서 기능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저리는 다수의 연망을 통해 결사체로서의 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sup>24)</sup> 조선후기에 등장한 다종의 계를 공동체

20) 이해준, 1990, 「조선후기 동계·동약과 향촌공동체조직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 정진영, 1998, 「18·19세기 동계·동약 실시와 그 한계 -대구 부인동동약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향촌사회』, 한길사.

21) 정진영, 2013, 「조선시대 향촌 제 組織과 향약의 ‘契約’적 성격」, 『古文書研究』 42.

22) 정진영, 1998, 앞의 책 참조.

23) 정진영, 2013, 앞의 논문, 72쪽.

24) 이영훈, 2001, 「18·19세기 대저리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맛질의 農民들-韓國近世村落生活史』

조직이 아닌 복수의 임의적 결사체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마을공동체이자 자치조직으로서 유지돼온 다양한 계조직들이 규명되었다.

이용기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친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서리 동계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어서리 동계는 마을의 부세 부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838년 창설됐으며 마을 主山의 柴草와 가경전 5~10두락의 그다지 크지 않은 동 재산을 바탕으로 결성됐다. 동계를 운영하기 위해 同案과 洞契收支簿가 작성되었으며, 講信會를 열어 마을의 대소·상하 동계원이 모두 참여해 동중의 사안을 의논, 결정하는 구조를 띠었다. 동민들 다수가 동계 운영의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어서리의 공동체적 결속이 강화됐으며, 이에 어서리 동계는 신분지배적 동계의 성격에서 벗어나 생활공동체적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되어갔다고 평가했다.<sup>25)</sup>

나주 둔덕리의 초동 동계를 분석한 정승진 역시, 근대전화기에 들어서 사족 중심의 위계적 문화가 해체되고 동리 민간의 평등적 자율단체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특히 동계답 추수기 상에 執租로 대변되는, 지주-작인 간 호혜적 지대수취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던 점이 강조됐다.<sup>26)</sup> 주지하다시피 집조는 정률제인 打租나 정액제인 定租·賭租와 달리 지주가 추수한 달 전에 경작지를 간평해 작인과 협의를 거쳐 지대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주-작인 간 온정주의적 교섭이 가능한 수취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에는 17~18세기 경주 외동읍 방어리에서 武夫들이 운영한 射契와 사족들이 운영한 洞契가 합계되는 과정을 통해, 목적이 다른 두 계가 기근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된 후에도 여전히 과거 응시와 상호부조라는 호혜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사례가 소개됐으며,<sup>27)</sup> 마을의 비보림 조성을 위한 식목계를 창설해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사례도 소개됐다.<sup>28)</sup>

친족 결속과 선조봉양을 위해 창설된 족계 재정운영 사례도 검토됐다. 김하임은 1741~1927년 간 남평문씨 『족계용하기』를 DB화해 족계의 재정 추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남평 문씨 문중은 선조 봉양을 위한 조상제사와 선산 수호를 위해 족계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一門의 화합을 추구했다고 한다. 족계의 재원은 처음에는 계원들의 회비로 운영됐지만, 이후 전답의 방매와 매득, 계금의 대부로 이자 수익을 꾀했으며, 제사·회의·부조·접빈객에 재원이 지출됐다. 이중 선조 봉양을 위한 제수 비용이 가장 컸으며, 족계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재정의 40% 이상을 재투자하는 특징을 보였다. 족계 재정을 1741년~1927년까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174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수입·지출이 1850년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1800년대 최말부터 1927년까지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sup>29)</sup>

이처럼 조선후기 계 조직은 운영 주체가 몇몇 지배사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상하 동민이나 족인들 전체가 동회·계회와 같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규약에 의거해 권리와 의

』, 일조각.

25) 이용기, 2007,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6) 정승진, 2006, 「나주 초동 동계의 장기지속과 변화, 1601~2001」, 『대동문화연구』 54.

27) 정수환, 2020, 「조선후기 경주 방어리 사계와 동계의 호혜와 협동가치」, 『한국학』 43-4.

28) 정수환, 2021, 「18세기 경주 갯뒤마을 동계의 말림갯을 위한 호혜와 협동」, 『역사학보』 252.

29) 김하임, 2014, 「조선후기 족계의 재정운영 -남평 문씨 『족계용하기(族契用下記)』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91.

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계 조직은 19세기를 거치면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마을 자치조직으로 전환돼 20세기까지 면면히 유지됐다. 조선후기 소농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을공동체의 호혜적 전통 속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해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세기까지 이들 소농의 경제활동은 토지경작과 가내 수공업 생산으로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친족·지인 간 선물을 교환하거나<sup>30)</sup> 장사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한편,<sup>31)</sup> 봄 기근을 간신히 견딜만한 자금 마련을 위해 관아 창고나 동계에서 환곡을 대여받는 생활 패턴을 유지해갔다. 이들의 생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다른 아닌 기근이었다.<sup>32)</sup>

재지사족들의 이른바 향권 경쟁이라는 행위 역시 군사력을 동원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지역 상인과 결탁해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로 발현되지 않았다. 그것은 향약과 계 조직, 중앙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양반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항상적으로 유지하려는 점잖고 세련된 사회활동에 다름아니었다. 따라서 지배사족의 생존전략 역시 시장교환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호연망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호혜와 재분배 행위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살림살이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소농의 생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향촌에서든 중앙에서든 지배엘리트들의 고민은 성장보다는 안정과 지속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00년대 이후 국가재정에 주목한 연구성과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의 재편: 장기지속의 딜레마

2000년대 이후 호적대장의 전산화를 계기로 호의 성격 논쟁이 촉발됐으며, 총서류 발굴과 계량화 작업을 계기로 국가재정의 운영원리를 밝히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또한 왕실재정, 군사재정과 같은 단위 재정들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국가재정의 성격을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호적대장의 전산화를 통한 연구성과를 개관하기로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호적대장을 기초로 한 신분사 연구는 시카다 히로시의 대구부 호적 연구 이후로 꾸준히 진행됐다. 호의 구성원을 직역에 따라 양반호·평민호·노비호로 구분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기별 추이를 검토해 조선후기 신분제가 해체되거나 혹은 동요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 이어져 온 것이다.

30) 사족들의 상호연망을 통한 선물경제의 실상은 이성임을 통해 처음 밝혀졌으며, 이후 19세기까지 선물경제의 패턴이 온존하고 있었던 사례들이 발표되었다(이성임, 2005, 「16세기 양반사회의 “膳物經濟”」, 『한국사연구』 130 ; 김현숙, 2015, 「조선 여성의 선물 교환 실태와 연망(緣網) -19세기 중반 호서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5).

31) 향촌의 경제활동 공간인 장시 역시 애초에 성립 당시 지주들의 잉여생산물 교환장소라기 보다 기근 구제를 위한 물화의 교역장소로 기획됐다는 연구가 발표됐다(김태현, 2015, 「조선후기 場稅 수취의 확산과 정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정진영은 대구 옷골 최홍원의 가게경영 사례를 분석해 최홍원이 중소지주로서의 경제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흉년으로 인한 계절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을 ‘부자들의 빈곤’으로 평가했다(정진영, 2017, 「부자들의 빈곤」, 『대구사학』 129).

2000년대 이후로는 이러한 방법론을 계승하면서 기존의 신분변동론을 재고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성우는 단성호적 내 양반 직역을 ‘원유호’로 재분류해 조선후기 진주지방 양반호의 비중이 5% 내외에 불과했음을 밝혀냈다. 이로써 적어도 조선후기 단성현의 신분구조는 기존에 알려진 역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동시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계서제적 피라미드형 구조였음을 입증했다.<sup>33)</sup> 한편 단성호적 DB를 통해 유학호 뿐 아니라 여성주호와 장애인, 승려, 장인과 같은 다양한 직역자층의 존재양상이 밝혀졌다.<sup>34)</sup> 특히 노비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사노에게 군역이 부과되는 양상과<sup>35)</sup>, 姓과 본관을 기재해 양인화하는 사례<sup>36)</sup>, 심지어 유학 직역을 획득해 양반화되는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변동 양상이 밝혀졌다.<sup>37)</sup> 특히 2003년에는 단성호적 전산화를 계기로 공동연구 성과가 단행본으로 간행됐다.<sup>38)</sup>

단행본에 수록된 논문들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15세기 초에서 19세기 후반까지 호적에 등재된 호는 혈연과 노비제를 매개로 한 ‘편제호’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는 이영훈이 호적 상의 주호를 담세능력을 가진, 富實한 자연가호로 규정하고 주호에 경제적으로 예속된 협호가 주호와 대칭관계를 형성한다는 논지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제기됐다.<sup>39)</sup> 즉, 호적 상의 주호는 경제능력을 갖춘 자연가호가 아닌, 오늘날의 호주와 같은 家長을 의미하며, 호는 몇 개의 자연가가 국역 부담을 위해 인위적으로 편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영훈은 이에 대해 주호-협호가 대칭관계에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는 한편, 주호-협호 관계 자체가 편제호적 관계라는 점으로 이를 반박했다.<sup>40)</sup> 그럼에도 호적대장 상의 주호가 호를 대표하는 개인이며, 호의 구성원들이 혈연과 노비 혹은 여타 예속인으로 구성된 편제호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현존하는 단성호적을 살펴보면 호적대장 본문의 수치가 총계에 해당하는 都已上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건태와 손병규는 군현에서 호적을 작성할 당시 중앙정부가 배정한 호구수와 직역자수를 도이상조에 먼저 기재한 뒤, 호적 본문을 이에 맞춰나중에 작성했기 때문으로 보았다.<sup>41)</sup>

33) 김성우는 단성호적에서 19세기 진주목의 유학호 중 지배양반에 해당하는 원유호의 비중을 5.7%로 재검출했다(김성우, 2003, 「조선후기의 신분제 -해체국면 혹은 변화과정?-, 『역사와 현실』 48, 19쪽 참조).

34) 김경란, 2003, 『朝鮮後期 『丹城縣戶籍大帳』의 女性把握實態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심재우, 2006, 「단성현 호적대장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존재양태」, 『조선시대사학보』 36 ; 장경준, 2006,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 김동영, 2022, 「18~19세기 대구 지역의 匠人 직역 파악과 변화 양상 -扇子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1.

35) 손병규, 2002, 「18세기 지방의 私奴軍役 파악과 운영」, 『한국사학보』 13.

36) 김경란, 2008, 「조선후기 단성지역의 사회상: 조선후기 무성층의 유성화 과정」, 『대동문화연구』 62.

37) 권내현, 2014,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 교보문고 ;

38) 호적대장연구팀, 2003,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9) 2002년 단성현 호적대장의 전산화를 계기로 조선후기 호적대장 내 호의 성격과 편제방식을 검토한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이때 이영훈이 제시한 주호-협호론에 대해 김건태의 비판이 있었고 이후 이영훈의 재비판이 있었다(김건태, 2002, 「朝鮮後期 戶의 構造와 戶政運營 -丹城戶籍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0 ; 정진영, 2001, 「18세기 호적대장 ‘호’와 그 경제적 기반 -1714년 대구 조암방 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9 ; 이영훈, 2004, 「朝鮮時代의 主戶-挾戶關係 再論」, 『古文書研究』 25).

40) 이영훈, 2004, 앞의 논문 참조.

41) 김건태, 2002, 앞의 논문, 241~244쪽 ; 손병규, 2003, 「호적대장 직역란의 군역 기재와 ‘도이상

셋째, 17세기 후반에는 호의 편제 분 아니라 면리 편제도 함께 진행되어 18세기에는 리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사족 거주지 중 노비호 비율이 높은 곳과 민촌으로서 군역호의 숫자가 많은 곳이 大里로 편제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sup>42)</sup> 이를 통해 국가의 부세 수취에 상응하는 편제호와 면리편제가 17~18세기에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9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에 나타난 유학호의 증가 양상에 대해서도 재정사적 설명이 시도되었다. 송양섭은 19세기 호적 상에 호충은 늘어나는 데 비해 구충이 줄어드는 배경을 부세의 共同納에서 찾는 한편, 유학호 내 소수의 노비가 줄곧 포함되어 있었던 이유를 양반에게도 洞布, 戶布를 부담시키려는 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sup>43)</sup>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영아문, 군현들 사이에 부세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호정을 어떻게 관리했고, 이것이 호적대장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sup>44)</sup>

요컨대, 2000년대 이후 호적연구는 재정사적 시각에서 호적작성의 배경과 직역자층의 변동양상을 검토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중앙정부는 戶口增을 守令七事로 포함시켜 농민의 생활안정과 부세자원의 증대를 독려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편제호를 통한 총액제적 부세운영의 원칙을 관철시켜 부역 자원의 濫徵을 경계하는 수준에서 호를 파악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토지 파악에 있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의 庚子量田에 대한 종합적 연구성과가 2008년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로 간행되었다.<sup>45)</sup> 경자양전은 16세기 지주제의 발달과 양란 이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추진한 세제변통[대동법·영정법]의 재정적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1715년 12월부터 1719년 가을에 걸쳐 집권노론과 남인 사이에서 시행론과 보류론의 찬반논쟁이 전개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토지소유권을 재확인하려는 지주층의 압목적 동의로 양전이 착수되었다. 양전 시행의 결과 표면적으로는 8도의 전결이 139만 5,333결로 파악됐고, 이중 실제 양전이 시행된 삼남의 결수는 갑술양전의 89만 5,489결에 비해 7만 6,482결이 늘어나게 됐다. 시기결에 있어서도 삼남지방의 결총은 67만 2,521결에 달해 갑술양전 때보다 13만 1,661결이 늘어난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토지 실결이 늘어난 만큼 수취과정 상 민폐가 잇따르자 영조대 삼남의 출세 실결은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sup>46)</sup> 주지하다시피 경자양전 이후 전국단위 양전은 조선왕조에서 시행되지 못했다. 양난 이후 전세 수취가 4~6두로 하향 평준화되고 현물공납에 대한 백성들의 피로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부세자원인 토지의 실질적인 파악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환기되고 있었음에도 경자양전의 시행과정에서 경외의 반발을 체감한 중앙정부는 토지의 직접 지배 방식을 포기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부세자원을 총액 단위로 파악해, 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재정방침을 선회하였다.

영조 36년(1760) 법제화된 비충제는 이러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조치였다. 경작

(都已上)의 통계』,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2) 박현순, 2003, 「18세기 단성현의 면리 편제」, 『단성호적대장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3) 송양섭, 2004, 「19세기 유학호의 구조와 성격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7.

44) 이유진, 2021,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45)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08,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해안.

46) 송찬섭, 2008, 「숙종대 재정추이와 경자양전」,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해안(이 논문은 송찬섭, 「숙종대 재정추이와 경자양전」, 『역사와 현실』 36을 재수록한 것이다.).



지를 일일이 답험해 수세액을 조정하는 방식 대신, 각도에서 몇해 간의 풍흉을 참작해 알아서 올리는 수조안을 근거로 중앙에서 결세를 부과하는 수취제도가 공식화된 것이다. 다만 비충제가 처음 시행되던 때가 경자양전이 시행되는 시기였던 만큼, 비충제의 시행은 국가의 직접적인 토지지배에 대한 민의 반발이 야기되는 시점에서 시행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sup>47)</sup>

여기에 공물과 군역의 물납화가 16세기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조선전기 조용조에 기초한 현물재정의 원칙이 개선되는 가운데,<sup>48)</sup> 18세기 중엽부터는 전세 뿐아니라 각종 부세자원을 총액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에 군문의 군액을 감수 정액화한 『양역실총』(1748)과 전국 단위 호구수를 집계한 『호구총수』(1789), 각도 군현의 부세자원을 경상납질과 본영·본관봉용질로 나누어 총집한 『부역실총』(1794), 그리고 중앙관서와 군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곡의 총액을 정리한 『곡부합록』(1776)과 『곡총편고』(18세기 후반) 등, 국가에서 수취할 수 있는 부세자원과 보유고를 총액으로 파악하는 총서류가 간행되었다.<sup>49)</sup>

현물재정이 각사자판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던 조선전기에는 전세 이외에 부세의 총량으로 데이터로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조선후기 부세의 금납화가 진전되면서 현물, 동전화폐를 기초로 부세수입을 총액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총서류를 간행하는 한편, 재정물류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나갔다. 우선 전세·대동세의 稅目を 변경해주는 작전·작목제를 시행하는 한편<sup>50)</sup> 서남해안의 사선임운을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경상도의 경우 관선조운제를 회복하는 등 재정물류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했다.<sup>51)</sup>

손병규는 18세기 중엽 이후 원액주의의 재정원리가 성립된 가운데 중앙정부의 집권적 재정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개별 아문에서도 별도의 재원을 징수, 관리, 배분하는 분권적 재정 운영이 병행되어간 것으로 보았다.<sup>52)</sup> 특히 조선왕조의 국가재정이 근대재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사회는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와 지방행정제도를 갖추고 있었고, 국가재원의 징수와 배분을 집권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근대재정과 차이점으로는 각종 국가기관과 왕실의 분산적인 재정부문이 병

47) 전세비충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이철성, 2004, 『17·18세기 전정운영론과 전세제도 연구』, 선인 ; 임성수, 2017, 「조선후기 호조의 田稅 부과와 給災 운영 변화」, 『한국문화』 78).

48) 조선전기 조용조 세법에 기초한 현물재정의 성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소순규, 2017, 「고려 말 조선조 재정구조의 연속성과 공납제 운영」, 『역사비평』 120 ; 이민우, 「조선 초기 조용조에 대한 이해와 부세제도의 개혁방향」, 『史林』 79). 이민우는 특히 조용조 세법이 세종 말년에 이르러서야 정착됐다고 보고, 당시의 부세제 개혁방향이 ①양입위출의 재정이념과 ②균질한 농민의 이상과 국가의 직접 행정, ③현물주의 재정원칙 수립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49) 손병규 외, 2013, 『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 18-19세기 재정자료의 기초적 분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50) 문광균, 2015, 「17~18세기 경상도 북부지역 전세 조달방식의 변화와 作錢制의 실시」, 『조선시대사학회』 72 ; 유현재, 2016, 「18세기 願納의 증가와 동전의 재정 활용」, 『한국문화』 76 ; 임성수, 2017, 「17세기 호조의 포목 확보책과 전세작목 시행」, 『민족문화연구』 74.

51) 문광균, 2014, 「17~18세기 경상도 세곡운송체계의 변화와 三漕倉의 설치」, 『대동문화연구』 86 ; 2017, 「19세기 후반 경상도 조운제도의 변화와 기선(汽船) 도입」, 『대구사학』 129.

52) 손병규, 2007, 「조선시대 국가경제의 운영원리 -국가재분배의 관점에서-」, 『조선시대사학보』 42 ; 2011, 「총론-조선후기 비충제적 재정체계의 형성과 의미」, 『역사와 현실』 81.

존하는 점을 들었다.<sup>53)</sup>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으로 관리되면서도 왕실 구성원의 私財로 분류됐던 왕실재정에 관한 연구를 주목해볼 수 있다. 조영준은 조선후기 왕실재정을 供上(=정부재정)과 내탕(=사재정)으로 구분하고 이중 내탕을 관리하는 宮房의 실체를 분석했다. 또한 궁방의 회계장부를 분석해 19세기 후반 왕실의 內入 증대로 지출이 늘고, 시전의 외상 누적이 심각해지면서 왕실재정이 궁핍화되었다고 진단했다.<sup>54)</sup> 왕실재정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宮府一體로 표현되는 왕실-국가간의 관계에서 조선 왕조는 왕실재정을 공적 영역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19세기 재정위기를 논하는 중요한 근거로 왕실재정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실제 왕실공상은 정례에 의거해 진배되어 함부로 늘릴 수 없었다. 영조대 왕실공상가로 책정된 예산액은 왕대비에서 봉보부인에 이르기까지 최대 78,285석 정도였으나 왕실구성원에 따라 이것이 모두 집행되지는 않았다. 순조 8년(1808) 실제 집행된 왕실공상가는 74,028석 수준이었다. 공상액은 선혜청의 공물가 총액의 1/3을 차지했으나, 공상가에는 왕실 각 전궁 소속 궁인에게 지급하는 선반, 땀감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다.<sup>55)</sup> 궁방의 주요 수입원인 궁방전의 규모도 18~19세기에 걸쳐 28,000결~32,000결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경자양전(1720) 당시 파악한 139만결 결충 대비 2%에 불과한 규모이다.<sup>56)</sup> 요컨대, 국가재정에 속하는 왕실공상은 선혜청과 공물아문을 통해 관리, 통제되고 있었으며, 내탕에 속하는 궁방전의 경우 2% 정도로 유지됐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위기에 빠뜨릴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궁방이 시전에 전가한 외상 역시 국가재정과 무관한 지출 영역이었다.

한편 조선후기 병조와 여타 군문에서도 둔전 소출과 군포 수입을 별도 관리했는데, 중앙 정부는 이러한 군사재정을 재정운영에 적극 활용했다. 예컨대 장용영의 경우 내·외영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관청의 불필요한 재원을 모으고 평안도에 둔전·환곡을 조성해 재원을 늘려나갔다. 그러나 정조 사후 장용영이 폐지되자 해당 재원을 타아문에 옮겨 주었다.<sup>57)</sup> 금위영의 경우 18세기 후반부터 1866년 이전까지 정번과 감번을 통해 군사적 기능을 줄여나갔는데, 이렇게 확보한 정번전을 호조의 加入에 보태주었다.<sup>58)</sup> 조선후기 군사재정은 개별 분산적으로 운영되기는 했지만, 중앙재정의 큰 틀 속에서 호조·선혜청 등의 중앙재정과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중앙정부는 어느정도의 집권적 재정운영을 실현하고 있었다.

송양섭 역시 18세기 호조·선혜청 등 재정아문을 중심으로 통일적인 재정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할거적 재정지배의 폐단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을 꾀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sup>59)</sup> 그는 『부역실총』에 기재된 중앙재무기관, 중앙의 군·아문, 왕실기관, 지방기관 별 재원규모를 미가로 환산해, 총 1,651,998석(잡비 포함 1,783,339석)으로 산출했으며, 이중 4할은 중앙 재무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부역실총』의 다양한 재원 파악 방식(경사상납질·본관

53) 손병규, 2007, 앞의 논문, 276쪽.

54) 조영준, 2008,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55) 최주희, 2012, 「18세기 중반 定例類에 나타난 王室供上の 범위와 성격」, 『장서각』 27.

56) 조영준, 앞의 논문, 233~234쪽 참조.

57) 박 범, 2016, 「장용영 내영의 향색제도 역할과 재정확보 과정」, 『역사와 현실』 102.

58) 유현재, 2016, 「조선후기 금위영의 재정운영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 102.

59) 송양섭, 2008, 「『부역실총』에 나타난 재원파악 방식과 재정정책」, 『역사와 현실』 70, 50쪽.

봉용질·영읍진봉용질 등) 재정의 중앙집권화라는 당시의 정책 기조를 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효과적인 수취 방안에 합의점을 끌어낸 것으로 평가했다.<sup>60)</sup>

최주희 역시 대동법의 시행관서인 선혜청의 운영양상을 분석하면서 조선후기 중앙재정구조의 변화상을 집권적 재정운영의 실현으로 보았다.<sup>61)</sup> 그는 대동법의 확대 시행과 선혜청의 재정 관서화를 통해 조선후기 재정구조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 것으로 정리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대동법의 시행으로 화폐납을 늘려 현물재정의 번거로움을 개선해 간 점, 둘째, 선혜청의 운영으로 각사자판의 원리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호조·선혜청(군역·상평·진휼청) 중심의 재정운영체계를 형성한 점, 셋째, 탁지정례의 간행과 회계법의 확대 시행으로 왕실과 중앙관서의 지출관리체계를 강화한 점, 넷째, 위의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국부일체’와 ‘손상익하’의 재정이념을 실현해 간 점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조선왕조가 백성들의 과세부담을 줄여주고 세수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선택한 경로가 결국 중앙의 세입구조를 경직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현물공납제 하에서는 각사자판의 원리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중앙정부는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大同事目 내에 대동세 이외에 추가징수를 엄단하고, 불시의 경비는 지방 군현에 비축한 餘米에서 지출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당해 결정된 대동세입으로 중앙과 지방의 경비를 지출해야 했다. 공물가가 시중가보다 높았던 초기에는 왕실부양과 각사행정에 필요한 물자조달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대동법이 전국에 시행된 18세기 이후로는 市價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부담이 커져 도산하는 공인들이 나타났다.<sup>62)</sup> 이처럼 한정된 세입으로 중앙경비를 해소해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대동세입이 줄어드는 해에는 공인들에게 공물가를 일정 비율로 줄여 지급하는 한편[分數裁減]<sup>63)</sup> 19세기에는 시전상인에게 외상을 지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시장에 전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sup>64)</sup> 중앙정부는 대동법 시행 이후 국가재분배 체제를 활성화하고, 도성민을 중심으로 국역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서울시장을 활성화했지만,<sup>65)</sup> 공물가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과외별역의 부담을 공인에게 전가하고,<sup>66)</sup> 시전에 외상을 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19세기 서울시장을 이끌어간 상인들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다.<sup>67)</sup>

물론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조 24년(1748)부터 몇해간 정부는 왕실과 정부관서의 경비항목을 삭감하고 『탁지정례』, 『선혜청정례』와 같은 지출례를 간행해 지출을 통제하고자 했다.<sup>68)</sup> 또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 조선후기 정부각사에 속한 하급원역과

60) 송양섭, 2008, 「총론-조선후기 재정사 연구와 『부역실총』」, 『역사와 현실』 70, 18쪽.

61) 최주희, 2014,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62) 18세기 공물주인이 도산할 수밖에 없었던 각종 폐단은 공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비변사 편, 조영준·최주희 역, 2019, 『공폐: 조선후기 공물제도 운영의 병폐』, 아카넷).

63) 최주희, 2014, 앞의 논문 3장 참조.

64) 조영준, 2008, 「19세기 왕실재정의 위기상황과 전가실태」, 『경제사학』 44 ; 2016, 『조선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 소명출판.

65) 고동환, 2013,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지식산업사.

66) 최주희, 2015, 「대동법 시행 이후 중간비용의 처리양상과 과외별역의 문제」, 『대동문화연구』 92.

67) 이현창, 2010, 「조선왕조의 경제통합체제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68) 최주희, 2011, 「18세기 중반 『度支定例』類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 정치적 의도」, 『역사와 현실』

서리의 수도 법전의 원액대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sup>69)</sup> 그러나 경상비에 해당하는 왕실 및 정부관서의 경비물자는 정례를 통해 지출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정부관서에 속한 하급원역의 급료와 각종 국역에 동원되는 역인들의 고립가 역시 호조와 선혜청에서 분담해야 했기 때문에 대동세 수입만으로 중앙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한편 군역에 있어서는 영조 26년(1750) 감필급대로 양역변통론이 일단락되면서 병조를 비롯한 군·아문의 군포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군역청에서 이를 급대하는 과정에서 군문 재정에 대한 대규모 감축조치가 병행됐다.<sup>70)</sup> 군역법의 시행으로 백성의 군포 부담은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급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은여결 색출과 결전 징수, 지방의 잡역가 마련을 위한 부담이 지방군현에 전가되었다.<sup>71)</sup>

이처럼 대동·군역법 시행 이후 중앙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환곡을 증설해 모곡 수익을 올리고<sup>72)</sup> 移劃, 加入의 방식으로 타 아문으로부터 재원을 자주 끌어다 썼다.<sup>73)</sup> 19세기 중앙의 전세·대동세의 수입이 줄면서 이같은 재원 확보방식은 더 심화되었다. 이에 유교적 민본주의에 입각해 양입위출을 표방했던 정부는 19세기 이후 정치적 수사가 아닌 생존전략으로서 긴축재정의 장기화를 모색해야 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최근 20여년 간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동향을 개관해보았다. 2000년대 이후 조선시대사 연구 흐름은 다양한 경로로 전개되었으며 재정사 분야에서는 호적대장 및 재정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로써 조선후기 국가와 향촌공동체 조직의 운영 원리가 다각도로 조명되었다. 개별 연구들에서 밝히고자 하는 논점들은 달랐지만 이들 연구에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요약하자면, 성장, 발전보다는 분배와 호혜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앞으로 필자를 비롯한 후속 연구자들의 논의를 기대해 본다.

81 ; 2014, 「영조대 중반 군역법 시행논의와 『宣惠廳定例』의 간행」, 『한국사연구』 164.

69) 최주희, 「17~18세기 중반 중앙정부의各司員役 감축 노력과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94.

70) 송양섭, 2012, 「군역법 시행과 군역청의 재정운영 -급대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중심으로-」,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71) 정연식, 1989, 「군역법 시행 이후의 지방재정의 변화」, 『진단학보』 67 ; 임성수, 2021, 「18~19세기 은여결(隱餘結)의 파악과 지방재정운영」, 『동방학지』 181.

72) 문용식, 2001,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73) 임성수, 2013,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호조의 수입 구조 변화와 그 영향」, 『역사와 현실』 90.



## 최주희, 「조선후기 재정사연구를 통해 본 국가와 향촌공동체의 생존방식」에 관한 토론문

이민우(안동대)

발표자 선생님께서 2000년대 이후 재정사 연구의 동향과 성과를 요령있게 정리해주신 덕분에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정사 연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서술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설혹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서 약간 다르게 이해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학술대회가 지난 20여 년을 포함하는 더 긴 시간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작은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선생님께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보다 오히려 쓰지 않으신 내용에 주목하여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발표문은 지난 20년 간의 조선사 연구를 조망하기 위해 재정사라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이 단순히 모든 분야와 주제를 망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발표자가 재정사 분야의 전문가라는 실용적인 이유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사 연구가 지난 20년 간 조선사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발표문은 재정사 연구의 동향을 크게 ‘농민’의 성격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농사회론(및 향촌공동체론)과 재정 운영의 최고 단위로서 ‘국가’ 운영 실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에 대한 서술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재정사 연구에서 ‘농민’과 ‘국가’ 혹은 ‘소농사회’와 ‘국가재정’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연구 영역 혹은 연구 대상은 현재의 재정사 연구에서 서로 어떠한 연관으로 파악되는지, 선생님께서는 이를 어떠한 관계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첫번째 질문과 관계되는 것이기도 한데, 발표문에서는 소농사회론과 국가재정 연구가 2000년대 초 이후에 내재적 발전론의 대안 이론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재적 발전론을 한국사 연구 전반을 관통하는 일종의 ‘관점’과 ‘태도’에 가깝다고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발표문에서와 같이 ‘경제사’에 한정한다고 하면 내재적 발전론의

핵심은 생산양식 혹은 사회구성체라는 문제설정, 더 구체적으로는 봉건제 사회구성체로서 조선의 사회 성격과 이행을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농사회론이 내재적 발전론의 ‘대안’이라고 하는 주장은 소농사회론이 내재적 발전론과 같은 문제설정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제시된 ‘대안’인지, 아니면 기존의 문제설정을 폐기한다는 의미에서 ‘대안’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농사회론이 조선을 봉건제 혹은 봉건사회로 이해하는 내재적 발전론의 관점을 비판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농사회론’은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관계라는 의미의 생산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관점과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생산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사회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농사회론의 대표론자로 제시한 미야지마 히로시와 이영훈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카무라 사토루는 ‘국가적 농노제’라는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유물론의 문제설정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농’ 혹은 ‘소농사회’라는 개념을 전면에서 등장시키는 미야지마와 이영훈의 논의는 위에서 제시한 질문에 비춰보면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농사회론’이 내재적 발전론의 대안이라면, 이것은 어떠한 방향과 관점에서 봉건사회론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2) 국가재정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 발전론은 식민지기에 제시된 국가적 봉건제론을 사적 봉건제론으로 대체하는 가운데 ‘집권적 봉건제’라는 모호한 규정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국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다는 심각한 난점을 드러냅니다. 국가의 핵심은 전근대와 근대를 막론하고 재정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국가재정에 대한 연구는 결국 조선사에서 국가론을 정립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가재정 연구와 내재적 발전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가재정 연구는 국가적 봉건제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것일까요, 혹은 국가와 농민의 관계를 포함하여 사회에 대한 또다른 이해를 전망하는 것일까요? 국가재정 연구가 어떠한 방향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조선 후기에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영훈의 주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공동체가 부재한다는 이영훈의 주장이 조선 후기 향촌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혈연 혹은 지리적 경계를 갖는 (자연)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가 제시하는 여러 ‘공동체’들이 호혜성에 기반하는가와 무관하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영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없다는 이영훈의 주장이 나름의 사회 구성에 대한 판단과 결부된다고 이해한다면, 발표자 선생님께서 조선 후기 향촌의 사회적 관계를 ‘공동체’로 간주하시는 데에 특별한 맥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근대사 연구의 주요 분석개념에 대한 재고

## -근대성, 식민지성, 공공성-

김윤희(한남대)

1. 머리말
2. 근대성의 외부와 내부
3. 식민지성 그리고 공공성의 위상
4. 맺음말

### 1. 머리말

1990년대 푸코의 규율권력 개념을 통해 식민지근대성 연구가 등장한 이래 식민권력의 근대성에 대한 탐색은 공공성, 일상사, 문화사, 도시사 등으로 확대하여 민족주의 역사서술의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식민지근대성 연구에는 식민지성이 모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식민지성에 대한 다양한 탐색이 시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계체제적 관점 또는 동아시아적 관점을 통한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3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분석개념의 상호참조가 이뤄지면서 식민지근대성 연구는 사회학, 국문학, 역사학 등의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다양한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식민지성, 근대성, 공공성 등의 용어는 익숙한 것이 되었지만, 분석개념에 대한 탐색의 진전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그간 진행된 식민지근대성 연구에서 제기된 근대성, 식민지성, 공공성이란 분석개념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모색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sup>74)</sup> 이를 위해 식민지근대성 연구의 시작에서 도입한 푸코의 관점, 비판에 직면한 이후 대안적 시도에서 도입했던 세계체제의 관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근대성 연구가 푸코의 규율 권력에 주목했다면 이 글에서는 그의 통치성 개념에 주목한다. 지배와 통치의 분리(아감벤-절합)는 식민지성에 대한 탐색에, 근대 통치성은 근대성에 대한 탐색에서 활용한다. 식민지근대성이 세계체제적 관점을 통해 식민지성을 탐색하고자 했다면, 이 글에서는 브로델과 월러스틴의 자본주의 이해에 주목하여 근대성에 대한 대안적 탐색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74) 분석개념은 대상이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절차, 평가기준 등을 위한 만들어진 개념어이다.



\* 이 글은 근대성, 식민지성, 공공성에 관한 연구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평가했던 글과 몇몇 사례 연구를 검토하여 작성된 만큼 관련 연구의 다양한 지평을 모두 시야에 넣지 못했다. 또한, 분석개념을 둘러싼 관계망에 대한 설명이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다. 이글의 부족함을 먼저 밝혀둔다.

## 2. 근대성의 내부와 외부

‘근대성’은 1990년대 식민지 규율 권력에 대한 연구가 제출된 이후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근대사연구의 주요한 분석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가치지향의 ‘자주적 근대화’가 성찰적 비판의 ‘식민지 근대성’으로 대체되면서 ‘근대’ 또는 ‘근대성’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문제, 근대와 전근대의 관계 설정 문제가 제기되었다.

### 1)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연구는 대부분 산업 생산방식에서 발견되는 자본과 노동관계를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그와 다른 한국적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었다. 식민지반봉건론, 사회성격론, 식민지자본주의론, 한국경제성장사론(식민지근대화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민지半봉건론과 사회성격론은 광범한 소작농의 존재, 농업생산의 경제외적 강제 등을 봉건적 요소로 규정하고 그것을 식민 지배와 연결시켰다. 식민지는 전자에서 봉건적 요소를 존속시키는 원인이었고, 후자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도출될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이었다.

식민지 자본주의론과 한국 경제성장사론은 ‘자본’에 의한 생산의 지배, 일물일권의 배타적 소유권의 확립을 자본주의가 지배적 생산양식이 되는 시점으로 상정하고, 이것의 시작을 식민지배로 보았다. 전자의 ‘이식’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맹아를 좌절 또는 변질시켰고, 식민지배 이후 한국 자본주의 ‘천민성’의 원인이었다. 후자의 ‘종속적’ 자본주의는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자본주의 수용성이 높은 문화적 토대 위에서 발전했고, 식민지배 이후에는 ‘종속성’을 탈피하여 선진국 자본주의를 배태했다.

수탈론과 개발론으로 명명되는 양자는 일본경제와 조선(또는 조선인)경제의 관계설정 문제에 집중하여 생산, 산업구조, 정책 등을 둘러싼 논쟁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 또는 민족의 경계 안에 구속된 ‘경제’란 관념을 확대 재생산했고, 한 국가 내의 ‘지배적 생산양식’이란 사회구성체적 관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강화했다. 분석개념의 동형성에 기초한 양자의 논쟁은 수탈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인해 대립하는 한쪽을 강조하는 순환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론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탐색은 근대성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뒤로 밀려났다. 식민지근대성 연구는 수탈과 개발이란 이분법적 대립을 타개하기 위해 식민권력의 근대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지만, 식민권력에 의해 구축된 근대성이란 설정은 식민지배가 이식한 자본주의란 설정과 달라 보이

지 않는다. 물론 식민지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수탈성과 식민지근대성이 주목하는 ‘보편성’과 ‘합리성’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근대성’에서 자본주의는 분석의 대상이기보다는 ‘근대성’이란 분석개념의 배후에 자리한 일종의 플롯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 위에 노동자다운 신체와 생활태도, 도시사(개발, 공간성, 장소성), 사회와 공공성(공적영역, 공론장) 등을 탐색한다. 이것들은 이미 ‘근대성’ 연구에서도 언급하는, 그람시의 관점에서는 부르주아의 헤게모니, 푸코의 관점에서는 지식-권력, 등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헤게모니, 지식-권력은 자본주의에 기초하여 행사되는 ‘권력’으로 그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기보다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를 묻는 것이다.

‘근대성’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규율권력 연구는 식민권력의 소재(의지)보다 행사 방식을 -지배자의 정책이 아니라 권력이 개인, 사회, 공동체에 개입하는 방식을- 문제 삼고자 했다.<sup>75)</sup> 그러나 억압적인 규율권력의 관철과 식민지배의 내면화라는 설정은 ‘저항’이 들어설 공간을 제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에 ‘지배의 균열’과 일상생활의 ‘혼종성’을 통해 ‘저항’이 들어설 여지를 열어놓으려고 시도했다.<sup>76)</sup>

이 연구에 대한 민족주의 입장의 비판은 식민지배 또는 식민지성의 형해화, 저항의 공간과 의미의 축소에 대한 우려였다. ‘근대성’과 ‘식민지성’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의는 ‘근대성’보다 ‘식민지성’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요소-개인과 사회, 개인이 공동체와 관계 맺은 양식으로서의 ‘주체’ 등-를 전제로 그것의 부재, 결핍, 변형의 원인을 ‘식민지성’으로 간주하는 연구에서 자본주의는 더 이상 탐색의 대상이 아니다.

‘근대성’의 개념설정이란 관점에서 보자면 그간의 연구들은 2가지에 대한 사유를 멈추고 있었다. 하나는 근대 경제와 자본주의의 관계이다. ‘지배적 생산양식’의 규정성을 전제로 한 사회구성체적 관점에서 경제는 일국적 단위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동일시되거나 대표된다. 식민지자본주의론과 한국경제성장사론에서 자본주의는 근대 경제와 구분되지 않고, 자본주의에 대한 탐색이 곧 근대 경제에 대한 탐색으로 대체된다. 자본주의의 외부가 존재하지 않기에 자본주의는 자기부정(계급혁명)을 통해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근대성’에 대한 연구에서 자본주의는 근대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행위로 간주된다. 근대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외부는 그래서 지배적이지 않은 또는 지배에 포섭되지 않은, 예를 들어, 전통적인 생산과 교환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배적 생산양식에 대한 저항, 균열, 민중의 자기보존성 등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배에 의해 밀려나면서도 끊임없이 생산되는 저항성은 오히려 자본의 확장성과 역동성의 토대이다. 들뢰즈-가타리가 언급한 자본의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는 비자본화의 영역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포섭하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브로델이나 윌러스틴이 언급한 ‘자본주의는 모든 생산과 교환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본화를 위해 비자본화의 영역이 끊임없이 생산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포섭되지 않은 것-패퇴했으나 굴복하지 않은 것에서 저항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실패를 예정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집착-신념이 아닐까?

근대 경제에서 자본주의 외부를 상상한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

75) 김진균·정근식, 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76) 공제욱·정근식, 2006,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브로델의 자본주의 개념은 근대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외부를 사유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브로델은 근대 경제를 물질생활, 교환경제, 자본주의라는 영역으로 구분한다. “자본주의가 교환경제에 적대적이고, 물질생활을 희생한다.”라고 하여 자본주의를 독특한 경제활동으로 규정한다. “물질생활은 인류가 이전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자신의 삶 아주 깊은 곳에 결합해 온 것”으로서 생물학적 조건, 지형적 결정, 심성적 틀 등 인간 삶의 구조이다. 교환경제는 일상적인 시장의 교환으로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교환경제 상층에서 발달한 것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독점을 지향하는 ‘밤손님’과 같은 것이다.<sup>77)</sup> 자본주의가 봉건제 내부에서 배태된 생산양식이 아니라 국가의 경계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관점은 소위 자본주의를 세계체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연구관점이다.<sup>78)</sup>

폴라니는 자본주의는 원격지 무역의 형태가 국가의 내부에 자리함으로써 등장했고, 자본주의 시장은 일종의 권력 작용을 통해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화했다고 본다. 월러스틴은 분업에 기초한 네트워크, 도달할 수 없는 독점지향의 근대 세계체제라는 게젤사프트가 국가, 민족 등 수많은 게마인샤프트를 창출했다고 본다.<sup>79)</sup>

이들은 생산방식 중심의 자본주의 이해에서 벗어나 분업에 기초한 네트워크, 시장을 통한 상품화에 주목하여, 이러한 방식의 코드화(규칙화)와 (재)영토화(제도화)를 탐색한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벗어나, 가라타니 고진이 말하는 생산과 교환에서 시공간적 격차를 통해 이윤을 얻는 방식이란 정의에 더 가까워져 있다.<sup>80)</sup> 고진의 정의만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이윤획득 방식이지만, 그러한 방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과 규칙이 되고, 그 규칙을 지지하는 담론이 생산·유통되고, 국가의 법률이 되고, 사회의 운영원리가 되는 것은 특정 시공간으로서의 ‘근대’이다. 자본주의를 돈 버는 방식으로만 사유할 수 없는 이유이다.

불가역적인 것이 된 자본주의는 자본전략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탐색은 자본주의와 경제활동의 관계, 시장의 질서와 그 효과들, 자본주의 제도화로서 법질서, 담론, 문화의 배치와 그 효과가 탐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대한 분석은 경제결정론으로 환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 힘, 방향,

77) 각 영역 구분의 모호성, 해석의 다양성, 자본주의가 발생하는 핵(경제적 수도)을 중심으로 주변을 구분하는 유럽중심주의 등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산업자본을 모델로 하고 일국적 관점의 사회구성체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본주의의 다양성, 자본전략의 변화,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의 관계성을 탐색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페르낭 브로델 지음, 김홍식 옮김, 2012,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갈라파고스).

78) 자본주의를 세계체제적 관점에서 보는 대표적인 연구자는 칼 폴라니, 페르낭 브로델,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오반니 아리기 등이다. 백승욱은 세계체제론이 아닌 세계체제로 지칭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 논의의 상호 비판점에 대해서는 백승욱의 연구(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그린비)를 참조.

79)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성백용 옮김, 1994,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창작과비평사.

80) 가타타니 고진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자본’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미 자본주의를 모두 분석했다고 평가했다. ‘자본’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경제학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가타타니 고진 지음, 김경원 옮김, 1995,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도서출판 이산). 고진이 정의한 시공간적 격차를 활용한 이윤추구란 관점을 생산노동에 대입해 볼 때, 노동의 잉여가치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노동과 노동력의 시간적 격차에서 발생한다.

속도를 가진 것들의 연결관계(절합, articulation)에 대해 끊임없이 다르게 말하는 것이다.

권력을 사물의 배치 관계로 보았던 푸코는 특정 시대의 지층(단절의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들의 배치 관계를 탐색하고, 그 기원의 모습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낫설게 함으로써 비판의 사유가 열린다고 주장한다.<sup>81)</sup> 푸코의 권력개념은 그의 고고학과 계보학적 탐색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탐색은 새로운 분석개념을 통해 다르게 말하기, 현재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의 관계이다. 근대 국가에 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독립주권’과 ‘주권재민’ 문제에 집중해 왔다. 조공체제와 식민지라는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독립’은 국가관에 대한 탐색에서 기본 전제가 되었고, ‘주권재민’은 정체와 참정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국가’ 수립의 전제였다. 이는 모두 주권의 소재 문제를 통해 ‘국가’를 탐색하는 것으로 주권자 또는 국가 권력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권력의 속성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근대화’는 주권자의 문제에 집중하여 왕과 민권, 일본지배자와 조선인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했고, 주권자의 지배와 통치를 동일시했다. ‘근대성’은 그람시의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식민권력의 헤게모니로 대체하여 식민자와 식민지인을 대립 관계로 설정했고, 지배(통치와 구분되지 않음)의 근대성을 헤게모니의 보편성과 합리성으로 간주했다. 푸코의 규율권력을 통해 탐색 대상을 권력의 소재에서 작동방식으로 전환시켰지만, 근대 권력에 대한 관점은 푸코보다 그람시에 의존하고 있었다. 규율권력 개념은 식민권력의 억압성을 강조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권력의 ‘근대성’을 주도권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근대 권력의 특이성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이들 연구는 국가 권력을 ‘억압성’으로 단순화시킨 포스트모더니즘의 권력 관념과 유사한 효과-국가 권력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기도 했다.

국가는 지배와 통치라는 두 개의 핵심적 개념을 통해 사유되었다.<sup>82)</sup> 주권(sovereignty)은 대내외적으로 승인된 단일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통치(govern)는 주권 내부의 안녕-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푸코에 따르면 내치국가(중상주의를 채택한 절대왕정)에서 지배자에게 통합된 지배와 통치는 18세기 말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등장, 자본주의 시장이 국가 내부에 자리하면서 분리되었다고 본다. 자본주의를 참조면으로 영토 안의 인구를 대상으로 행사되는 통치, 경제의 형식으로 행사되는 권력이 근대 통치의 특이성이다. 근대 통치는 지배자의 실천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참조하여 계산과 예측 가능성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이다.<sup>83)</sup> 따라서 근대 통치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다.<sup>84)</sup> 자본주의 변화를 참조

81) 미셸 푸코 지음, 이정우 옮김, 2000,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82)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지배자가 정복자인지 인민에 의해 세워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국가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통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83) 아감벤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관념의 기원을 존재와 실천이 절합된 고대의 기독교 관념에서 찾는다. 그는 푸코가 언급한 ‘경제형식에 행사되는 권력’의 기원이 로마의 가정경제를 뜻하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였고, 이것에 의해 기독교의 핵심 개념인 성부와 성자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연결된, 절합의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지배는 실천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통치는 ‘아버지가 없는 성자’와 같이 기원이 없는 텅빈 장치라고 본다. 주권은 국가의 존재로서 무한한 찬양의 대상이 되고, 통치는 국가의 실천으로 탈인격적 기계장치라는 것이다.(조르조 아감벤, 박진우·정문영 옮김, 2016, 『왕국과 영광: 오이코노미아와 통치의 신학적 계보학을 향하여』, 새물결, 251쪽). 근대 주권개념을 구성하는 지배와 통치가 절합 관계라는 점은 근대 경제영역과 국가 권력의 작동방식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나아가 ‘독립주권’을 국가상의

하고,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새롭게 다양한 통치술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근대성’에 대한 탐색에서 자본주의가 플롯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자본주의와 경제, 자본주의와 통치의 관계를 탐색할 때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시장이다. 자본주의와 물질생활이 만나는 곳, 예측과 계산 가능성의 조건이 끊임없이 새롭게 생산되는 곳이 시장이기 때문이다.<sup>85)</sup> 그리고 이는 아담스미스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조건, 규칙, 담론 등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들의 배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민지성’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근대성’이 통치와 관련된 것이라면 ‘식민지성’은 지배와 관련되어 있다. 지배권을 둘러싼 대립, 식민주의와 민족주의는 전쟁하는 적대 관계, 예외 상태를 끊임없이 선언하는 관계이다.

예외상태를 슈미트처럼 정상상태(질서)를 창출하는 전제로 볼 것인지?<sup>86)</sup> 벤야민이나 아감벤처럼 정상상태를 예외상태의 일상화로 볼 것인지?<sup>87)</sup>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양자는 예외상태와 정상상태를 주재하는 힘을 갖는다. 주권의 힘은 예외상태를 끊임없이 창출함으로써 내부의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근대 주권국가의 경쟁질서 역시 전쟁이란 예외상태를 끊임없이 선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상황(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주권의 힘이 배제를 양산하면서 내부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아감벤의 호모사케르가 바로 주권에 의해 배제된 자이다. 식민지 상황은 예외상태가 전면화되고 강도가 세진다는 점에서 조선과 일본 모두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을 더 많이 양산하는 효과이고, 다양한 호모사케르가 양산될수록 통치술은 그들을 포섭하여 고도화된다.<sup>88)</sup> 그래서 식민지성은 식민지에서 발견되는 차이가 아니라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대

---

가장 핵심적 가치로 전제했던 기존 연구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유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84) 지배와 통치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발견된다. 외행하는 주권(지배권의 독립)과 내용하는 주권(통치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외행하는 주권은 주권자의 독자성과 최대권을 의미하지만, 내용하는 주권은 보편적인 인민기본권의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윤추구 주체로서의 인민(호모에코노미쿠스)을 발견한 유길준은 정부를 통해 인민을 잘 통치하여 독립주권(지배권)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길준에서 지배와 통치는 각기 다른 방향과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민을 대상으로 한 통치가 지배의 독자성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통합되어 있다. 유길준은 방국의 권리에서 지배와 통치의 절합 관계를 설명했다(김윤희, 2009,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개념의 형성, -민=적자와 서유견문의 인민-」, 『역사문제연구』 21).

85) 아렌트는 마르크스가 잉여를 생산하는 노동의 사용가치(노동력)를 교환가치에서 분리했지만, 그것이 다시 교환시장에서 내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로 선언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을 ‘생산성’의 영역에서 사유하도록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한나 아렌트, 1996,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133~165쪽).

86) 칼 슈미트 지음, 김항 옮김, 2010,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창』, 그린비출판사.

87) 발터 벤야민 지음, 최성만 옮김, 2008, 「폭력비판을 위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2008, 『호모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88) 지배를 둘러싼 전쟁모델을 통해 국가 주권을 분석하고자 했던 푸코의 시도는 미완으로 중단된 것 같다. 그는 프랑스 군주와 대결했던 부르주아 역사담론을 전쟁모델로 파악했고, 양자의 대립이 빚은 효과는 통치실천을 위한 지식의 생산을 추동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배를 둘러싼 경쟁이 통치실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적이다(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전쟁하는 양자가 통치실천에 개입하고자 하더라도, 개입 전제는 경제의 형식에 있다. 힘의 비대칭성과 무관하게, 지식에 기초한 예측과 계산을 앞에 조정과 합의가 이뤄진다

립을 포함한 식민지 상황이 발생시키는 효과이다. 제국-식민지 관계는 근대 주권국가의 문제들을 극단으로 드러낸다.

## 2) ‘이식된’ 또는 ‘번역된’ 근대

식민지근대성 연구는 한국 근대가 식민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선언했고, ‘근대성’은 등장부터 식민지와 함께 탐색되기 시작했다. 특히 1920년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한 모더니티에 대한 연구들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근대성’은 식민지를 전제로 한 것이란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이는 자본주의가 지배적 생산양식으로 등장한 것은 식민지였다는 인식과 동일하다. 또한, 식민지 자본주의론의 ‘이식’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배가 이식한 근대성은 주권국가의 근대성과 비교할 때 부재, 결핍, 변형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반면, 개항기 연구에서 발견된 ‘번역’ 또는 ‘重譯’된 근대라는 개념은 조선인 행위자의 실천에 주목하여 근대성 형성의 주체로서 조선인을 상정한다. 식민지가 아니기에 행위자의 주체적 실천이 가능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조선인을 주체적인 행위자로 전제하는 연구에서는 ‘이식’이란 어휘에 담긴 규정성을 회피하기 위해 근대를 ‘번역’이란 개념으로 포착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번역(또는 중역)이 ‘이식’의 단일성과 강압성을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횡단적 실천이 빚어 놓은 ‘근대’는 그래서 혼종적이다. 또한, 근대의 불균등 발전을 블로흐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란 개념으로 포착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다. ‘근대’를 혼종성과 복합적 중층성으로 보는 관점은 서구적이고 보편적인 근대와 다른 ‘한국적’ 근대에 대한 탐색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sup>89)</sup>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도 여전히 근대=서양, 전근대=동양(또는 한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적 근대’는 전근대=동양의 유산을 통해 탐색되거나, 전근대(또는 전통)는 근대에 의해 만들어진 것-허구적 창작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근대’가 ‘전근대’와 맺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근대가 전근대를 식민화했다.’라거나<sup>90)</sup> ‘식민주의와 근대성이 특권화되었다.’<sup>91)</sup>라는 비판은 ‘근대’라는 프리즘을 통해 전근대를 재단하거나 전근대에 대한 담론적 개입이 역사의 다양한 현실과 변화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두 가지 타겟을 설정하고 있다. 하나는 서구적 근대(또는 서구이론)의 토대 위에 한국적 근대를 탐색하는 것-서구중심주의의 문제, 다른 하나는 전근대의 역사상은 근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근대중심주의 문제이다.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서구적 근대모델을 기준으로 삼는

고 할 수 있다. 이때 합의되는 것을 통치실천이지 지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조선총독부와 민족주의 정치기획세력은 풍기문란, 빈민, 소득증대에 대한 통치실천에서 서로 공모관계였다(김윤희, 2013, 「근대 서울의 숲, 위험관리와 민족주의 정치기획 -공론화된 숲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11 ; 2016, 「1920년대 초 ‘민족경제’와 통계지식」, 『역사와 담론』 80).

89) 유교자본주의·유교민주주의론과 이에 대한 비판론 등은 한국적 근대의 특이성에 대한 논의를 확대했다.

90) 배향섭, 2016, 「‘탈근대론’과 근대중심주의」, 『민족문화사연구』 62, 9~39쪽.

91) 김홍규, 2013,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창비.

것과 서구의 분석 방법에 의존한다는 비판이다. 역사 전개 차이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분석기준과 방법의 비대칭성을 극복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동아시아’를 시야에 넣을 것, 사례 비교를 통해 차이를 발굴할 것, 역사적 현실과 다층적 변화의 전개 과정을 분석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제시한 대안이 오늘의 현실인 ‘근대성’을 비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를 도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서구적 모델’이 허구적 상상이듯 ‘동아시아’도 그럴 것이고, 역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 근대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자칫 전근대와 근대를 비교하는 순환회로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근대는 전근대의 연속인가? 전근대는 근대에 의해 구성된 것인가? 아니면 연속과 단절의 복합성이 한국적 특성이라는 무의미한 평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은 정형화된 모델과 이론을 절대적 기준을 제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환원주의의 오류-분석이 대안적 비판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오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근대중심주의의 문제는 근대성 연구의 탈민족 담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민족 담론에는 역사이해가 부재하다는 비판은 ‘민족적인 것’이 역사 전개 과정에서 형성된 것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민족(또는 전통)이 근대가 만든 것’이라고 할 때 전근대는 근대 민족담론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고, ‘근대’가 만든 생산물과 관련해서만 존재가치를 갖게 된다. 더구나 식민주의로 인해 정당하지도 않은 ‘근대’가 ‘전근대’를 재단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반감의 배후에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인식론적 토대인 역사주의가 자리하고 있다.<sup>92)</sup> 그러나 특정 현상에서 발견되는 발생 과정의 연속성이 그 현상의 현재적 가치(참과 거짓, 효과 등)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탐색으로는 ‘근대성’의 현재적 의미에 접근할 수 없다. 즉 역사 전개라는 시간적 연속성은 ‘근대성’을 비판하기 위한 거리두기를 어렵게 하며, ‘근대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배치관계와 그 배치의 효과를 탐색하는 데 유효하지도 않다.

환원주의의 오류와 역사주의를 극복하고 근대와 전근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근대성’은 현재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미야지마처럼 “중세와 구별되는 삶의 독특한 형태”를 배제한 채 “현재의 삶과 직결되는 인간관계나 사회의 구성원리 등이 만들어진 시대”를<sup>93)</sup>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현상(또는 요소), 그것의 배치관계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등장하기에 ‘근대’는 특정한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sup>94)</sup>

현재 삶을 구성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본주의와 주권국가의 경쟁질서가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 놓은 격자와 그 격자에 놓인 요소들의 배치 관계가 바로 ‘근대성’이다. 다르게 표현

92) 역사주의는 역사개성주의(랑케, 드로이젠 등)와 역사법칙주의(헤겔, 마르크스 등)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역사주의는 모든 현상은 역사적 제약을 벗어나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역사성은 시간을 축으로 축적되고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절대화되었다(이한구, 2010, 『역사주의와 반역사주의』, 철학과현실사).

93) 미야지마 히로시, 2013, 「유교적 근대로서의 동아시아 근세」,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미야지마는 서구적 근대성의 요소들을 제외한 것을 통해 ‘근대성’을 비판하기 보다 동아시아 근대의 특이성을 발견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94) 푸코는 한시대에는 하나의 에피스테메를 갖는다고 하여 에피스테메를 통해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에피스테메의 모호성으로 인해 분석개념으로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면, 근대의 혼종성과 복합적 중층성 자체가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것들의 배치관계, 관계맺음이 곧 ‘근대성’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빈곤’을 다루는 오늘날의 사회적, 정책적, 정치적 담론과 실천, 그것의 연결 관계가 언제 처음 등장하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이전에 ‘빈곤’을 다루는 방식이 현재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떠한 단계를 거쳐 현재와 같아졌는지? 등을 탐색하는 것이다. 빈곤 현상은 같지만, 동시대(contemporary)의 빈곤과는 전혀 다른 맥락-빈곤의 존재양식, 구제의 실천방식과 그 효과-에 있는 것이다. 현재에 당연한 한 것으로 인식되는 질서-배치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기원, 각기 다른 시점에 등장한 기원과 현재를 비교하여 배치관계, 작동방식, 효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탐색해야 한다.

‘근대성’은 과거 모든 시점에서 그 기원이 등장하고, 그 기원의 모습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낱설게 함으로써 비판의 거리에 놓일 수 있다. 푸코의 ‘계보학’과 ‘고고학’은 현재를 역사화함으로써 현재를 성찰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각성’할 수 있다는 벤야민의 언급을 상기하면 동시대성으로서 ‘근대성’은 단절의 ‘과거’와 대면할 때 비판될 수 있다. 근대를 비판적으로 사유하기 위해 ‘과거’를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역사주의와 결별을 선언할 수 있을까?

### 3. 식민지성 그리고 공공성의 위상

식민지근대성 연구에서 근대는 식민지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선언했지만, 근대성과 식민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식민지가 없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이후였던 것 같다. 서구 근대성은 비서구를 식민화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발리바르의 언급, 근대성은 식민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식민성은 근대성과 결합된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미놀로의 언급 등에 의존해서 식민지근대성은 분리해서 인식될 수 없는 ‘하나의 사태 또는 한 세계의 양측면’으로 이해된다.<sup>95)</sup> 그리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사회변동의 동학으로 ‘식민지적 차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기도 했다.<sup>96)</sup> ‘식민지적 차이’는 ‘근대성의 구성적 외부임과 동시에 내재화된 외부’, 근대성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부에 포섭되어 있지만, 근대성과는 이질적인 것이다. ‘非(또는 未)근대적인 것’이 구조변동의 동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근대에 포섭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것’에 대한 복권을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식민지근대성 연구는 비(미)근대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보고로 ‘민중의 일상사’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성이 (자본의 운동과 동일하게) 배제(외부를 생산하고)와 포섭(이질적인 것의 내재화)의 반복을 통해 지속된다면, ‘비(미)근대적인 것’의 뒤틀림은 포섭의 기술을 제고하고, 포섭할 것을 생산하는 힘이기도 하다. 구성적 외부와 내재화된 외부의 관계설정에는 배제와 포섭의 반복적인 순환회로에 간혀 있다. 문제는 순환회로를 멈추는 것이다. 대립하는 양자 사이의 끊임없는 순환이 만들어내는 환상(마술환등)을 멈추면, 비로소 대립했던 양자의

95) 조형근, 2006,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연구의 흐름」,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사회과학사.

96) 조형근, 2014, 「일제 식민지시기 재래시장의 사회사적 분석을 통한 식민지근대성론의 사회변동론적 재구성」, 『한국사회학』 48-5.



모습, 양자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sup>97)</sup>

따라서 탐색 방법은 식민지와 근대성의 관계가 아니라 식민지와 관련된 것, 근대성과 관련된 것을 각기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자는 무엇을 통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근대사 연구에서 식민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결정권이 없는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 정치적 결정권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제정권, 정책결정권이 없어서 법집행과 행정조치의 ‘선’한 효과에서 배제되어 있고, 실천과정의 강제성과 억압성이란 ‘악’한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자리한다. 식민도국과 식민지의 정책적 차이, 주권국가와 식민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정치적 결정권의 부재에 있기에 정치적 결정권이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바뀌면 식민지가 초래한 문제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이러한 환상은 정치적 헤게모니 문제에 대해 과잉된 가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반대로 문화적 경제적 식민주의가 탈식민국가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 탈식민주의의 관점은 서구/비서구, 제국/식민, 인종과 민족의 차이와 차별의 관계에 주목하는 만큼 식민지성을 차별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탈식민주의에서 식민지성은 근대 국민(민족)국가의 문제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민지 상황은 주권(지배)을 둘러싼 전쟁상태를 통해, 대립하는 양자 내부의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한다. 국가와 민족은 특정 지역에서 행사된 주권의 힘을 자신의 역사 전개 과정으로 서술함으로써 구성된 것이다. 식민주의는 실제적 법질서, 민족주의는 담론적 법질서라는 차이가 존재하고 힘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전쟁상태를 통해 내부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법질서가 참조된다는 점에서 주권국가의 경쟁 관계와 다르지 않다. 탈식민주의가 식민지성을 주권국가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일 것이다. 그러나 탈식민주의는 식민지를 탈식민 주권국가에 대한 비판적 탐색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식민지적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세계체제적 관점에서 근대 국가는 국제분업에 기초한 네트워크의 작동을 위해 만들어진 게마인샤프트이고, 법질서의 선포를 통해 확보된 공간을 동일성으로 구성하여 생산과 교환에서 시공간적 격차를 발생시키는 토대이다. 국제분업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자본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어떻게 회피하고 배분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이익의 확대와 위험의 분배라는 세계적 차원의 진행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은 어떠한 위치, 기능, 효과와 관련된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sup>98)</sup>

또한, 주권의 외부에서 출현한 세계체제가 주권의 내부에 자리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이익을 위한 전략의 실천은 기존의 관습, 윤리, 종교, 문화 등을 활용하기에 한 국가 내에 자리한 자본주의 모습은 다양하다. 자본주의 모습은 주권국가와 식민지로 구별되지 않는다.

97) 벤야민은 마술환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각성’이라고 보았다. ‘각성’은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찾아오는 환기, 마약의 취함에서 깨어나는 순간, 메시아의 도래 등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시간적 불연속성, 우연성, 순간성이다. ‘각성’은 질서를 중지시키는 모든 것-멈춤, 봉기, 파업이며 동시에 예외상태를 정지시키는 ‘신적 폭력’- 법질서를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다.

98) 예를들어, 조선통화의 식민지성으로 거론되는 불환지폐적 성격은 세계차원의 금환태환권이다. 금태환권과 금환태환권는 중심국/주변국, 주권국/식민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때 식민지와 주변국은 세계통화운영에서의 기능과 효과란 점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민지성은 식민지적 차이가 아니라 식민지적 상황,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 각자가 선포하는 법질서의 관계이다. 각자의 내부를 동일성으로 구성하기 위한 담론 경쟁, 정체성을 둘러싼 주체화 기획의 양산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주권의 실천인 통치에 개입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풍기문란과 빈곤 담론은 서로를 지목하면서 대립하지만, 풍기문란과 빈곤을 단속 또는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모가 시작되고, 그것을 다루는 방식과 절차가 합의된다. 그리고 양자의 공모와 합의는 근대 통치의 특이성에 기인한다. 근대 통치 실천은 호모에코노미쿠스를 참조하고, 경제의 형식으로, 과학성과 합리성의 토대인 지식·권력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식민주의와 민족주의는 지식이 진술하는 ‘진리’를 부정할 수 없다.

푸코의 지배와 통치의 분리, 또는 아감벤의 지배와 통치의 절합이란 사유는 국가와 국가 권력을 새롭게 사유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대립이 창출하는 시공간, 문화영토의 동일성이 근대 통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식민권력을 통치성 개념으로 포착할 경우, 식민지에서 ‘정치적인 것’을 사유하기 위해 제시된 공공성, 식민지인의 공공적 실천을 관찰하는 영역으로서의 ‘일상생활 세계’란 분석개념은 관계설정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성’은 정치적인 것, 지배와 저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을 포착하기 위한 은유로서 제시된 개념이었다.<sup>99)</sup> 식민지 민중은 “본래적 의미에서 국민이 아니라 천황 또는 국체의 대상으로서 전근대적 존재, 즉 황국신민이 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과 시민사회가 부재한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와 저항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해석의 부재’는 지배와 저항이라는 지배(주권)와 관련된 사유를 벗어날 수 있는 분석개념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을까?

共(common)은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과 관련된 것으로 통치 합리성의 근거이다. 共(common)의 의제설정과 결정은 지배자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사적영역이 확대될수록 共(common)의 의제설정과 결정은 지배자의 영역에서 벗어나 公(public)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sup>100)</sup> 이해관계인으로서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등장은 共(common)을 公(public)으로 다루는 정치행위를 활성화시킨다. ‘공공성’은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제주체와 관련을 맺고 있다.<sup>101)</sup>

따라서 공공성은 통치실천이 합리성을 확보하는 공간이다. 조선후기 양반 중심의 공론정치는 지배자의 통치실천을 제한하는 것이었지, 지배를 둘러싼 경쟁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1894년 신분제 폐지 이후 의사소통의 장은, 힘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만, 인민 모두에게 열려있었고, 정치적인 것을 활성화시켰다. 인민의 공론장에서는 대한제국 통치의 합리성을 확

99) 윤해동, 2010, 「식민지 근대와 공공성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식민지 공공성』, 책과 함께.

100) 율리히 벡, 홍성태 옮김, 2006, 『위험사회』, 새물결, 304쪽.

101) 아렌트는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의 실천 공간을 공적 영역으로 보고, 공적 영역을 통한 시민의 활동이 나치즘이 행한 통치실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생산)이 확보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에 공적 영역의 성립 토대는 호모폴리티쿠스가 아니라 호모에코노미쿠스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적영역의 정치적 행위가 나치즘을 제한할 수 있는 아렌트의 주장에 기초하여 식민지공공성 개념을 제기한 것은 조선인의 정치행위가 식민지배를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을까?

보하는 방안들이 제출되었을 뿐 황제의 지배를 둘러싼 경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근대 통치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생존권 보장이란 토대 위에 서 있지만, 통치의 실천은 경제형식을 결정하는 시장, 사적 자율성의 영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효성에 의해 제한받는다.

공공적인 것이 논의되는 공론장은 통치실천이 개입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에 개입하는 실천방식의 적절성, 실천의 결과와 그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통치실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정치적인 것’은 더 이상 지배와 관계되지 않고, 통치와 관계한다. 따라서 공공성은 지배와 저항의 교차점이 아니라 통치실천과 효과 사이에 위치하며, ‘정치적인 것’은 해석이 부재하는 영역이 아니라 통치의 적절함이 갈등, 조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공공성’을 은유가 아니라 공공적 실천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 역시 식민지인에게는 사회(시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식민지 주민의 공공적 실천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주체적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인 ‘일상생활 세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02)</sup> 공론장에서 발견되는 힘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는 공공적 실천의 주체를 발견하고, 한국적 ‘시민’의 기원, 한국적 시민성의 특이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정치적인 것’에서 ‘정치적 주체’로서 관점을 전환시킴으로써 주체의 행위와 경험이 이루어지는 ‘일상사’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인의 ‘일상’은 한국적 시민을 발견하는 곳이 되고, 그 시민성은 식민권력의 헤게모니 경쟁에 참여하는 주체성이 된다. 공공적 실천의 주체로서 시민을 발견하고자 하는 관점은 역설적이게도 ‘근대화’연구와 닮아있다. 이는 정치, 사회, 경제의 근대화가 아니라 주체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권력의 헤게모니 관철을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식민지근대성 연구는 일상사로 연구를 확장하였고, 일상사는 식민지배의 헤게모니와 관련하여 저항, 지배의 균열, 식민권력의 포섭과 배제의 효과를 확인하는 장소로 주목되었다.

일상은 구조·제도와 주체성을 매개하는 영역이고, 계급적·민족적 갈등을 분석하는 주요 통로이고, 식민지배 전략과 저항의 전술이 만나는 지점이고,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실재하는 주체성을 분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되었다.<sup>103)</sup> “식민지 근대성의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 설정한 ‘일상’은 모든 실천이 발생하기에 어떠한 실천적 효과도 없는 것이 된 것 같다. ‘일상’이란 개념의 광범위함은 분석대상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고, 분석개념의 모호성을 배가시킨다.

또한, 식민지, 파시즘, 독재 등 비정상적인 권력 형태로 간주되는 시대에 대한 연구에서 ‘일상’이 주목되는 것은 아마도 ‘비정상’을 비판하기 위해 ‘정상’을 전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비정상적 권력과 정상적 일상의 만남은 저항, 균열, 거부, 무시, 동의, 협조 등등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관계이다. 그래서 그 만남의 경험은 구분되지도 않고 어떠한 효과로도 연결되지 않는다.

‘일상사’는 ‘역사서술에서 사라진 인간성의 복원’이란 선언에 부합하는 연구로 주목받기도 하는데 이때 ‘일상’은 탐색을 위한 분석개념이 아니라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이란 상상에 기초한 인간중심주의 선언에 가깝다. 따라서 ‘일상’은 연구가 목적하는 방향에서 특정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개념들을 통해 각기 다른 영역과 다른 방향에서 포착될 필요가 있다.

102) 허영란, 2013, 「일제시기 지역사회와 식민지 공론장」, 『한국사연구』 161.

103) 공제욱·정근식, 2006,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18~22쪽.

#### 4. 맺음말



## 김윤희, 「한국근대사 연구의 주요 분석개념에 대한 재고 -근대성, 식민지성, 공공성-」에 관한 토론문

고태우(서울대)

김윤희의 글은 한국 근대사 또는 한국의 식민지근대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근대성, 식민지성, 공공성 개념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분석개념에 관한 기존 시각을 자본주의 이해에 관한 페르낭 브로델과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시각, 푸코의 통치성 개념 등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다.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사를 메타 분석하고 있는 글이어서 글의 추상성이 높은 편이다. 글의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 1. 분석 대상이 되는 출처의 불분명함

연구 경향을 다루는 글인데 글 전체적으로 서지사항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여러 군데 보인다. 연구사의 문제를 비판하는 논문이라면 그 비판이 되는 대상을 각주 등의 형식으로 밝혀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이지 않고 저자의 선행 연구에 대한 인상 또는 감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로써 과연 저자의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면밀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 적지 않다.

서지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출처 제시가 불분명한 대목 몇 가지를 거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 머리말 첫 문단 : 식민지근대성 연구를 비판한 대표적인 연구라든가, 세계체제 내지 동아시아 관점을 통한 연구의 가능성을 진단한 연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면 좋겠다.
- 2쪽 자본주의 첫 절 첫 문단 : 식민지반봉건론, 사회성격론, 식민지자본주의론, 한국경제성장사론을 거론했는데, 이러한 논의가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식민지 사회성격과 관련한 논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연구자를 위해서도 논쟁을 이루었던 주요 저작을 주석으로 소개해주면 좋겠다.
- 6쪽 ‘번역된’ 근대를 설명하는 셋째 문단 : “최근의 연구에서는 번역(또는 중역)이 ‘이식’의 단일성과 강압성을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연구’가 무엇인지도 거론하면 좋겠다.
- 7쪽 둘째 문단 :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안적인 연구로서, 동아시아를 시야에 넣거나 사례 비교를 통해 차이를 발굴하고, 역사적 현실과 다층적 변화의 전개 과정을 분석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제시된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도 각주로 밝혔으면 한다.

- 7쪽 본문 마지막 문단 : 각주 20번이 지칭하는 “현재의 삶과 직결되는 인간관계나 사회의 구성원리 등이 만들어진 시대”라고 한 직접인용은 쪽수까지 넣어줬으면 한다.
- 10쪽 넷째 문단 각주 26번 뒤 문장 : “본래적 의미에서 국민이 아니라 천황 또는 국체의 대상으로서 전근대적 존재, 즉 황국신민이 된다.”라고 한 직접인용도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지 제시했으면 한다.
- 10쪽 각주 28번 : 아렌트의 이야기 출처가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아마도 『인간의 조건』?
- 11쪽 본론 마지막 문단 : 일상사가 ‘역사서술에서 사라진 인간성의 복원’이란 선언에 부합하는 연구로 주목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선언했거나, 그러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나 해당 대목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발표자의 평가나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언급해둔다.

## 2. 목차, 전체 구성과 관련하여

이 논문의 본론 목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대성의 외부와 내부
  - 1) 자본주의 / 2) ‘이식된’ 또는 ‘번역된’ 근대
2. 식민지성 그리고 공공성의 위상

위 목차만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불분명하다. 분석개념을 재고하는 것이고, 선행 연구에 깔려 있는 인식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안점이지만, 저자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절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첫째, 본론 1장 제목이 ‘근대성의 외부와 내부’인데, 어떠한 외부와 내부인지가 글을 읽고서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근대성의 외부와 내부에 위치한 식민지성의 문제를 염두에 둔 제목인가? 둘째, 1장 1절이 단순히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인식/연구의 탈각’이라든가, 자본주의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목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1장 2절 제목도 분석개념을 재고하는 소재가 제목에 제시된 것에 불과하며, 2절 전체 내용을 볼 때, ‘번역된 근대’에 관한 내용은 실제 분석되고 있지 못하다.

## 3. 연구사 정리에서의 의문

1) 2쪽 셋째 문단에서 식민지 경제를 보는 식민지 자본주의론의 시각을 ‘이식 자본주의’로, 경제성장사론의 경우 ‘종속적 자본주의’라고 제시했는데, 이러한 구분이 타당할까? 이식되었다는 것과 종속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식민지근대화론에서도 일제에 의한 자본주의 내지 근대의 ‘이식’을 강조한 바 있다. 더구나 발표자는 같은 문단에서 경제성장사론의 “‘종속적’ 자본주의는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자본주의 수용성이 높은 문화적 토대 위에서 발전했고, 식민지배 이후에는 ‘종속성’을 탈피하여 선진국 자본주의를 배태했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식민지의 경제성장을 강조한 경제사가들은 병합 이전 시기 19세기 위기론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수용성이 높은 문화적 토대 위에서 발전”했다고 보지 않았다.

2) 2쪽 넷째 문단에서 식민지 자본주의론과 한국 경제성장론을 각각 ‘수탈론’과 ‘개발론’

으로 명명되었다고 했는데, 수탈론과 개발론이라는 명명법이 타당할까? 후자의 경우 개발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식민지 자본주의론(정확하게는 내재적 발전 시각을 견지하면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를 중시한 기존 역사학계의 입장)이 ‘개발’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 ‘개발’은 필연일 수밖에 없고, ‘수탈을 위한 개발’이었다는 식의 입장이 깔려 있다. ‘수탈론’ 대 ‘개발론’이라는 명명법은 수정하면 좋겠다.

3) 3쪽 첫 문단에서 식민지근대성 연구에 대하여 민족주의 입장의 비판은 식민지배 또는 식민지성의 형해화를 우려였다고 하였는데, 다음 문장은 “‘근대성’과 ‘식민지성’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의는 ‘근대성’보다 ‘식민지성’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었다.”라고 하였다. 앞 문장은 식민지성의 탈각을 가리키고, 뒤 문장은 반대로 식민지성에 대한 관심의 집중을 가리키고 있어서 두 문장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4) 6쪽 2절 첫째 문단에서 식민지근대성 연구에서 “식민지배가 이식한 근대성”을 주권국가의 근대성과 비교할 때 부재, 결핍, 변형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고, 다음 문단에서는 개항기 연구에서의 ‘번역된 근대’를 주목했다. 그런데 식민지근대를 볼 때 비록 1920년대 도시 중심의 대중·소비문화를 중시하는 시각이 “이식한 근대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1920년대 이후가 식민지기에 속했던 것일 뿐이지 대중·소비문화의 확대를 반드시 식민지배가 이식한 근대성으로 보았던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근대성은 강제병합 이전 개항 이후 조선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개념사 연구를 돌이켜볼 때 ‘번역된 근대’가 개항기 연구에서만 발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식민지기 이후 개념을 둘러싼 번역의 문제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었다.

5) 11쪽 둘째 문단에서 ‘공공성’을 공공적 실천으로 보는 연구에서 식민지인에게 사회(시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고 보았는데, 과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식민지 공공성’ 관련 초창기 논의를 모은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에 있는 사례 연구들은 일정하게 식민지 ‘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공공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도시사 등 ‘지역사회’에 주목한 연구들이 ‘사회’의 부재성을 가지고 논의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4. 논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1) 머리말 마지막 문단에서 ‘지배와 통치의 분리는 식민지성에 대한 탐색에, 푸코의 근대 통치성 논의는 근대성에 대한 탐색에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5쪽 넷째 문단에서도 근대성을 통치와, 식민지성을 지배와 관련시키고 있다. 식민지근대성론에서 제기했던 바와 같이, 식민지성과 근대성 양자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 개념임을 감안하면 두 갈래로 나누어 분석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2) 3쪽 셋째~넷째 문단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셋째 문단 뒷부분에서 들뢰즈-가타리의 ‘자본의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 브로델과 윌러스틴의 비자본화 영역에 주목한 부분을 언급하고서 전통적인 생산-교환 행위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저항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



경향을 “실패를 예정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집착-신념”이라고 평가했다. 바로 다음 문단에서는 자본주의 외부를 상상하는 것이 자본주의 분석을 위해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전통적인 영역 또는 비자본화/비자본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서 저항성을 강조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자본주의 외부를 상상하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문단 말미와 넷째 문단 처음이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연 전통적인 영역, 자본주의 외부에서 ‘저항성’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실패’를 예정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집착일까? 지난 500년 동안 서구의 비서구 식민화, 자연에 대한 착취를 동반한 자본주의 팽창 과정이 규정력 있게 작동해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에도 비자본화한 영역이 많이 존재하며, 상품화나 자본주의 방식과 다른 삶 속에서 자본주의 비판의 맥락을 상상하는 것은 자본주의 문명을 개혁하고 결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원동력/상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외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패를 예정한 집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8쪽 첫 문단에서 ‘근대성’을 자본주의와 주권국가의 경쟁질서가 서로 교차되는 과정에서 여러 요소의 배치 관계로 정의하고, 이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같은 쪽 본문 마지막 문단에서는 배제와 포섭의 반복 속에서 근대성이 지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제와 포섭의 “반복적인 순환회로”에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전자에서는 교차되는 모습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후자에서는 교차 과정에서 배제와 포섭으로 나타나는 순환회로를 멈출 것을 주장했다. 언뜻 보기에 모순되는 듯한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배제와 포섭의 순환회로 자체가 근대성이 아닐까. 이를 멈춰야 할 순환회로가 아니라, 근대의 동학(dynamics)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4) 9쪽 첫 문단에서 근대 연구의 방법으로 “식민지와 근대성의 관계가 아니라 식민지와 관련된 것, 근대성과 관련된 것을 각기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자는 무엇을 통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식민지와 관련된 것, 근대성과 관련된 것이 명확하게 구분될까? 또 양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식민지와 근대성의 관계이기도 한 것 아닌가?

5) 10쪽에서 “‘공공성’은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제주체와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였고, 이를 한나 아렌트의 공/사 영역의 구분 논리에 서 근거를 가져왔다. 과연 그럴까? 경제주체가 형성되면서 각종 이해관계가 발생/분화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영역/공론장이 활성화하였으나, 이러한 이해관계는 그 자원 분배를 둘러싼 ‘정치’의 문제를 함께 불러온다. 식민지 조선에서 지방자문기구/지방의회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기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민족 갈등이 발생하는 맥락, 한편으로 각종 주민대회와 진정운동에서 나타나는 ‘정치’는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등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식민지에서 호모폴리티쿠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6) 11쪽 마지막 문단에서 “‘일상’은 탐색을 위한 분석개념이 아니라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이란 상상에 기초한 인간중심주의 선언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점이 ‘인간중심주의 선언’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 5.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분석개념을 둘러싼 기존의 인식 한계를 바라본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가 있지만, 한 가지 더 주문하면 ‘재고’를 통하여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토론자도 잘 정리되지 않지만, 1장 1절 말미에서 식민지성이 식민지에서 발견되는 차이가 아니라, 식민지 상황이 발생시키는 효과라는 인식이 정립되었을 때, 우리는 기존 연구와 무엇을 다르게 연구할 수 있을까?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식민지 또는 한국의 근대사 연구에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일국사를 뛰어 넘는 한국 자본주의 연구는 앞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그에 대한 사례와 작업가설을 제시해주는 것이 논문의 의의를 살리고 설득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 한국현대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 -원조·개발·발전사 연구를 중심으로-

이동원(서울대학교)

1. 머리말
2. 1950년대 ‘원조경제’, 1960~70년대 ‘개발독재’·‘발전국가’라는 역사상
3. 원조의 성격과 작동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
4. 개발주의·발전주의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5. 원조·개발·발전을 아우르는 한국 ‘발전사’ 연구의 가능성

### 1. 머리말

1945년 해방 이후 시기 연구로서 한국현대사 연구가 역사학계에서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67년 12월 한국사연구회가 창립되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다루는 세 학회가 독자적 활동을 시작하면서, 역사학회는 1968년 10월부터 ‘종합 학술지’ 『역사학보』에 “사학 연구의 성과를 소개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회고와 전망’ 특집을 수록하기 시작했다.<sup>1)</sup> 여기서 1984년 조동걸은 “최근세와 8·15 후의 ‘현대’를 나누어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고, 1987년 정창렬은 1984~1986년 기간 한국근현대사 연구에서 “1945년 이후의 한국현대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열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평가했다.<sup>2)</sup> 그러나 1993년 서중석은 “해방 이후의 연구는”, “이제 출발 단계”라고 규정했고, 2003년에도 정병준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현대사 연구는 일정한 양·질적 수준을 담보”했으나 “학문사회 내외로부터 시민권을 획득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다고 보았다.<sup>3)</sup>

그럼에도 2000년대 들어 한국현대사 연구는 확연한 성장세를 보였다. 1990년 서중석의 첫 번째 박사학위논문 이후 10년간 11편에 불과했던 한국현대사 박사학위논문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64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76편에 이르렀다.<sup>4)</sup> ‘회고와 전망’에서도 1999년부

1) 강만길, 김용섭, 손보기, 윤병석, 이재룡, 차문섭, 한영우 외, 1992, 「한국사연구회 창립 25주년 기념 좌담회」, 『한국사연구』 79, 131~151쪽 ; 이기백, 1968 「1967년도 한국 사학계의 회고와 전망, 머리말」, 『역사학보』 39, 1쪽.

2) 조동걸, 1984, 「최근세」, 『역사학보』 104, 284쪽 ; 정창렬, 1987 「최근세」, 『역사학보』 116, 305~310쪽.

3) 서중석, 1993, 「현대(1910~)」, 『역사학보』 140, 203쪽 ; 정병준, 2002, 「현대(1945~)」, 『역사학보』 175, 243~267쪽.

4) 오제연, 2022, 「한국현대사 박사학위논문(2000~2021)의 현황과 대학원 교육」, 『사람』 82, 166~168쪽.

터 “현대(1945년~)”를 독자적 시대사로 분류하여 정리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회보』를 기준으로 격년간 400~500여 편의 논문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국현대사 학계는 질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22년 8월 출간된 『한국현대사연구의 쟁점』(202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이다. 이 책은 책머리에서 “연구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언키는 어렵다.”면서,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틀로 한국현대사의 전개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현대사 연구의 성과를 냉전사, 분단체제, 6·25전쟁, 월경하는 마이너리티, 민족주의, 농촌사회, 도시사, 노동사, 이주사, 경제사, 민주화운동, 가족사, 소비문화사의 13개 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새로운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했다.<sup>6)</sup>

본 발표는 위와 같은 한국현대사 학계의 최근 연구사와 문제의식을 고려하면서 원조·개발·발전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사 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것이 현대사 연구에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틀”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일정하게 극복하고 향후 연구의 전망을 확장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1950년대 ‘원조경제’, 1960~70년대 ‘개발독재’·‘발전국가’라는 역사상

한국현대사에서 1950년대 혹은 이승만 정권기의 한국 정치와 사회를 규정하는 개념이 ‘극우반공체제’라면 한국 경제를 규정하는 개념은 ‘원조경제’일 것이다.<sup>7)</sup> ‘원조경제’란 6·25전쟁 발발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한국 경제가 “미국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5) 반병률, 1999, 「현대(1945~)」, 『역사학보』 163, 176~190쪽 ; 홍정완, 2020, 「신진 연구자들에 의한 남·북 현대사 연구의 진정과 확장: 2018~2019년 한국현대사 연구 동향」, 『역사학보』 247, 89쪽 ; 이정은, 2022, 「2020~2021년 팬데믹 시기 ‘정중동(靜中動)’의 한국현대사 연구」, 『역사학보』 255, 101~103쪽.

6) 소현숙, 2022, 「책머리에」, 『한국현대사연구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4~7쪽. 이 책에서 정리한 13개 주제의 필자와 글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정용욱, 한국의 냉전사 연구동향과 과제 (2) 홍석률, 한반도 냉전·분단의 장기지속과 연구동향, (3) 이완범, 21세기 6·25전쟁 연구동향과 과제, (4) 김원, 냉전 시기 월경하는 마이너리티와 역사를 둘러싼 연구동향과 쟁점, (5) 전재호,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구, (6) 김영미, 한국 농촌사회 연구동향과 과제, (7) 엄복규, 한국 현대 도시사 연구동향과 전망, (8) 장미현, 한국 현대 노동사 연구동향과 과제, (9) 김아람, 한국 현대 국내 이주사 연구동향과 과제, (10) 이정은, 해방 후~1970년대 한국 현대 경제사 연구동향과 과제, (11) 오제연, 권위주의 통치/민주화운동 연구동향과 과제, (12) 소현숙, 한국 현대 가족사 연구동향과 과제, (13) 송은영, 한국 현대사의 소비 연구현황과 과제.

7) ‘극우반공체제’에 대해서는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 (하):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 참고. ‘극우반공체제’를 자체의 재생산 기제와 동역할을 가지는 체제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지, 해당 시기의 정치적 억압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 개념적으로 엄밀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용욱, 2000, 「서평, ‘극우반공체제’의 역학과 그 극복 논리를 찾아서」, 『역사비평』 51, 371~372쪽 참고.

에 없는 상황”을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장점이 있다.<sup>8)</sup> 최근 한국역사연구회에서 간행한 『시민의 한국사』(2022, 돌베개)의 제8편 ‘현대’ 중 4장 ‘현대 한국의 경제’에서 1절의 제목이 “1950년대 원조경제”, 2절의 제목이 “1960~70년대 경제개발정책의 추진과 공업화”인 것을 보면 ‘원조경제’는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개발’과 대비되면서, 1950년대 혹은 이승만 정권기 한국 경제의 특성이자 역사상으로서 연구자와 대중에게 여전히 보편적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이에 비해 1960~70년대 혹은 박정희 정권기를 ‘개발독재’ 혹은 ‘발전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좀 더 논쟁적이지만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발독재’는 2003년 “경제와 정치에 대한 통합된 접근방법”으로 제기된 개념으로,<sup>10)</sup> 계급관계의 관점에서는 “박정희 체제에 대한 제도주의적 평가”로 “발전국가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sup>11)</sup> 그러나 역사문제연구소 기획으로 발간된 ‘20세기 한국사’ 시리즈의 박정희 정권기 저술이 ‘개발독재시대’를 전면에 내세운 것처럼 1960~70년대 혹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sup>12)</sup>

한편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는 훨씬 역사가 깊은 개념으로, 1982년 차머스 존슨(Charmers Johnson)이 1925~1975년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 틀로 설명한 이래 1950년대 이후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발전을 설명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sup>13)</sup> 그러나 강력한 정부가 권위주의적 개입을 통해 국가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발전국가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경제 원조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진 경우로 일본, 대만의 경우와 다른 조건에 있었다는 것이다.<sup>14)</sup> 그럼에도 1960~70년대 혹은 박정희 정권기의 성격을 ‘발전국가’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를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1950년대와 1960~70년대, 이승만 정권기와 박정희 정권기를 ‘원조경제’와 ‘개발독재’·‘발전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각 시기를 구별짓고 시대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

8)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2022, 『시민의 한국사 2: 근현대편』, 돌베개, 457쪽.

9) 한국역사연구회, 위의 책, 457~469쪽.

10) 이병천, 2003,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21쪽.

11) 김수행·박승호, 2007,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국제적·국내적 계급관계의 관점』, 서울대학교출판부, 36쪽.

12) 조희연, 2007,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5·16에서 10·26까지』, 역사비평사. 조희연은 이 책의 책머리에서 박정희 체제를 “개발동원체제(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로 규정하기도 한다 (조희연, 앞의 책, 12쪽).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개별 저술로는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참고. 한편 유철규도 ‘박정희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이 사실 ‘박정희 개발독재 모델’을 의미함을 책머리에서 밝힌 바 있다. 유철규 편, 2004,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5~6쪽.

13) Char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차머스 존슨, 김태홍 역, 1983,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 현대 일본의 경제참모본부』, 우아당).

14) 박태균은 발전국가론에서 외적 요소, 즉 국가에 의한 해외자본과 원조의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의 경우 몇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단순한 외적 조건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음의 요소들이다. ① 미국의 경제원조 및 기술원조, ② 미국 현지기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개입, ③ 한일협정과 베트남전쟁, ④ 북한과의 대결과 남북관계 (박태균, 2009, 「박정희 정부 시기를 통해 본 발전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역사와 현실』 74, 34~35쪽.)

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주의·발전주의의 연속성과 각 시기별 원조의 성격 및 역할 변화를 간과한다는 문제가 있다. 원조(foreign aid)와 개발·발전(development)은 경제 성장의 단계이거나 분리된 개념·실체가 아니라, 동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상호 결합할 수 있는 개념·실체이기 때문이다.<sup>15)</sup> 이렇게 보면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개발주의·발전주의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하고 원조의 성격과 작동방식이 이에 조응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결합해 나갔는지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연속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바이다. 2017년 『역사와 현실』 105호 특집으로 기획된 ‘1950년대 후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과 시대적 연속성’에서 이현진은 “한국경제상황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선상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연속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6)</sup> 그런데 이러한 연속성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문제의식과 범주 설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이를 원조와 개발주의·발전주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3. 원조의 성격과 작동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

사실 앞서 제기한 과제, 즉 “원조의 성격과 작동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며 개발주의·발전주의에 결합해 나갔는지 고찰”하는 것은 한국경제 이해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보다 더 큰 범주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흔히 ‘경제원조’라고 인식되는 ‘원조’는 애초부터 수원국의 경제 문제의 해결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고, 구호원조, 군사원조, 경제원조, 기술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생존(식량과 의료), 정치(원조 운영), 군사와 안보(군사력 규모의 결정과 유지 방식), 경제의 안정과 성장(인플레이션 억제와 공업화), 지역사회 개발(생활 개선과 자조) 등 광범위한 국가와 사회 영역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로 원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홍성유의 선구적 연구를 시작으로 이현진에

15) 발전경제학자 에릭 토르베케(Erik Thorbecke)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기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각 시기별 개발주의의 진화와 원조의 역할 변화를 정리한 바 있다. (에릭 토르베케, 2009, 「개발주의의 진화와 원조의 역할(1950~2000)」, 핀 타르프 엮음, 임을출 옮김, 『원조와 개발: 교훈과 미래 방향』, 한울 아카데미, 51~91쪽.)

16) 이현진, 2017, 「총론: 1950년대 후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과 시대적 연속성」, 『역사와 현실』 105, 30쪽. 이 특집은 총론과 함께 다음의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대훈, 2017,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전력 3사의 통합 논의: 국영기업 경영합리화론의 맥락에서」, 『역사와 현실』 105 ; 금보운, 2017, 「1950년대 후반 세계개혁과 미국 조세고문단의 활동」, 『역사와 현실』 105 ; 권혁은, 2017, 「5·16군사정부가 미 대한원조정책의 성격과 AID-유송의 역할」, 『역사와 현실』 105. 한편 이현진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김두열도 “1950년대에 한국에 공여된 원조 그리고 정부의 산업 및 무역 정책에 힘입어 1950년대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1960년대부터 시작되는 고도성장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대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김두열, 2017, 『한국경제사의 재해석: 식민지기·1950년대·고도성장기』, 도서출판 해남, 138쪽.)

의해 대한(對韓) 경제원조 정책이 집대성되기까지, ‘원조경제’ 시대라 할 수 있는 1950년대를 중심으로, 경제원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원조의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시대적 변화를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공유한다.<sup>17)</sup> 외원단체연합회(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KAVA) 등 외국인간원조단체와 한국 사회사업 발전의 관계를 연구한 최원규의 연구, 미국 대한 농산물원조를 연구한 김종덕의 연구와 같이 특정 원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1950~70년대 혹은 그 이상의 시기를 연구의 시야에 넣은 선구적 연구들도 존재하지만,<sup>18)</sup> 이들 연구도 전체적인 원조의 구조와 작동방식을 해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사의 지형 속에서 미국 저개발국 대외원조의 핵심적 성격을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로 보고, 1950년대 미국 대한원조의 기원을 1949년 트루먼 대통령의 포인트 포(Point Four) 계획, 1930년대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등 냉전 이전의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한봉석의 연구가 주목된다.<sup>19)</sup> 이 연구는 미국 대외원조의 역사적 기원을 20세기 초의 경험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에크블라드(David Ekbladh) 등 최근 미국 학계의 연구와 공명하면서,<sup>20)</sup> 후속 연구를 통해 19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가 이란, 터키 등에서와 같이 ‘낮은 수준의 근대화(Low Modernization)’를 목표로 했으며 저개발국의 ‘개발(development)’은 기술협조(technical cooperation) 수준에 머물렀음을 지적했다.<sup>21)</sup> 이는 미국의 대한원조를 다양한 저개발국 원조의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장기지속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1950년대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적 성격을 군사원조로 파악하면서 그 세계사적 맥락과 작동방식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시도한 이동원의 연구도 주목된다. 이 연구는 미국의 대외원조가 제2차 세계대전 개입을 계기로 ① 전쟁 피해 지역 긴급 구호(emergency relief)를 위한 구호원조, ② 유럽 부흥(recovery)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의 재건(rehabilitation)까지 목표로 했던 경제원조, ③ 상호방위원조계획(MDAP) 하의 군사원조, ④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저개발지역의 개발(development)을 위해 기술협조처(TCA)가 운영하는 기술원조 등 크게 네 개의 범주로 작동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로 미국 대외원조 구성에서 군사원조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군사원조를 규정한 상호방위원조법(MDAA)과 경제 및 기술원조를 규정한 대외경제원조법(FEAA)을 1951년부터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 MSA)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미국 대외원조의 군사적 지향성이 강화되었음을 강조했다.<sup>22)</sup> 이를 바탕으로 이승만정권기 군사원조와 경제원조가 유엔군사령관의 강력한 권한 하

17) 홍성유, 1962, 『한국경제와 미국원조』, 박영사 ; 홍성유, 1965, 『한국경제의 자본축적과정』,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이현진, 200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해안.

18) 최원규, 1996,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종덕, 1997, 『원조의 정치경제학 -미국의 대한농산물 원조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출판부.

19) 한봉석, 2017,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 David Ekbladh, *The Great American Mission: Modernization & the Construction of an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21) 한봉석, 2018, 「냉전 초 미국의 포인트 포 사업과 ‘낮은 수준의 근대화(Low Modernization)’-1950년대 이란(Iran)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람』 63 ; 한봉석, 2018, 「19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에서 저개발국 ‘개발(development)’의 의미: 미국계 컨소시엄, 스미스 힌치먼 앤 그릴스의 ‘기술원조’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1.

22) 이동원, 2019,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 2020, 「미국 대외원조와 대한(對韓)원조의 군사화(軍事化)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서 작동하면서 한국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었음을 논증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경제원조 중심의 원조 이해를 기술원조 및 군사원조 분야로 확장하고 지역별, 국가별 원조의 성격 차이, 시기별 성격 변화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또한 1950년대를 중심으로 이해했던 원조 연구를 1930년대 TVA, 1941년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등의 전사(前史)를 통해 확장했다는 면에서 연구사적 기여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대외원조를 중심에 두고 1950년대 이후의 시기를 명확히 그려내지 못했다는 한계도 보인다.

한편 민간 의원단체나 유엔기구와 같이 미국의 공적 원조 밖에 존재했던 다양한 원조 집행 기구에 대한 연구도 원조의 성격과 작동방식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했다. 이봉범, 정종현 등은 스탠포드대학 후버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여 아시아재단, 한미재단 등 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들의 활동을 규명했다.<sup>23)</sup> 이소라는 한미재단 연구에서 출발하여 미군대한원조(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AFAK)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을 연구했다.<sup>24)</sup> 임다은은 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홍수현은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의 조직과 활동을 연구하여 유엔과 미국의 전후 재건 과정을 고찰했다.<sup>25)</sup>

이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1950년대를 중심으로 특정 단체나 기구의 활동에 천착한다는 한계를 보이지만,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발굴·활용하여 미국의 공적 원조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기존 연구의 범주를 확장했다는 면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 4. 개발주의·발전주의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기를 ‘개발독재’나 ‘발전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앞서

---

부터 한국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28 ; 이동원, 2020, 「1953~1955년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상호안전보장계획(MSP)과 대한(對韓) ‘평시(平時) 군사원조’의 재개», 『사람』 74. 상호안전보장법(MSA)에 의한 미국 대외원조의 운영은 1961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FAA)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23) 이봉범, 2015,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39 ; 박연희, 2016, 「1950년대 한국 펜클럽과 아시아재단의 문화원조: 세계작가회의 참관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0 ; 이봉범, 2016, 「한미재단(American Korean Foundation), 냉전과 한미 하방연대», 『한국학연구』 43 ; 정종현, 2016, 「아시아재단의 Korean Research Center(KRC) 지원 연구», 『한국학연구』 43. 이상의 연구들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 “아시아재단과 냉전의 한국문화: 스탠포드대 후버 아카이브 분석을 중심으로”의 공동연구 결과물이다. 같은 아카이브의 아시아재단 컬렉션을 활용한 다음의 연구도 있다. 공임순, 2017, 「김학묵이라는 에이전시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신설을 둘러싼 미국 발 원조의 회로-», 『한국학연구』 47.

24) 이소라, 2015,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소라, 2022, 「1950년대 미군대한원조(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AFAK)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 102.

25) 임다은, 2019,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수현, 2022, 「1953~1955년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살펴본 대로 논쟁적이지만,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발전국가는 시기적으로 1960~70년대를 지칭하며 1980년대는 발전국가 시기의 제도들이 변형·해체되는 발전국가의 쇠퇴기이자 경제 자유화가 추진되는 전환의 시기”라는 것이다.<sup>26)</sup>

그러나 개발주의·발전주의(developmentalism)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그 내용적 구성을 달리하며 진화했다고 볼 수 있고,<sup>27)</sup> 김상현이 잘 정리한 대로 개발·발전(development)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 진보, 합리화, 산업화, 경제 성장, 서구적 근대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발전학(critical development studies)’은 역사학계에서 발전을 역사적 분석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발전사(history of development)’ 연구들로 이어졌다.<sup>28)</sup>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는 레이섬(Michael Latham)의 연구는 근대화론이 제3세계 발전론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정체성, 세계질서에 대한 미국의 사명을 확산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했음을 주장하며, 1960년대 초 케네디 행정부가 추진한 ‘진보를 위한 연대(Alliance for Progress)’, ‘평화봉사단(Peace Corps)’, 남베트남 ‘전략촌(Strategic Hamlet)’ 프로그램 그 사례로 분석했다.<sup>29)</sup> 에크블라드(David Ekbladh)는 미국식 발전의 역사적 기원을 ‘더 넓고 긴(wider and longer)’ 관점에서 추적하여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재건, 필리핀 식민 지배, 뉴딜 정책,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VA) 등에 주목했다.<sup>30)</sup> 이밖에도 “개발·발전을 탈식민화(decolonizing development)”하자는 관점이 대두되어 개발·발전 담론에 깔린 식민주의적 가정과 식민지 개발 정책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sup>31)</sup>

유사한 고민은 일본에서도 ‘국제개발에 대한 성찰’로 나타났다. 일본 국제개발학회(Japan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JASID)는 201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출간한 저서에서 “개발을 되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시카와 준(Nishikawa Jun)은 이 책의 서문을 통해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개발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인식이 깨졌고, 세계화를 동반한 개발의 부작용이 남반부의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실업, 빈부격차, 경제침체 등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sup>32)</sup>

26) 조은주, 2021, 「발전국가와 젠더-통치성의 성별화, 성별화된 주체화-」, 『역사비평』 134, 168쪽. 이는 조은주의 주장이라기보다는 다음의 기존 연구들에 기반한 전제이다. 윤상우, 2006,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 『경제와 사회』 72, 86쪽 ; 지주형, 2016, 「한국의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역사적 변동과 형태분석-」, 『인문논총』 41, 237~239쪽 ; 박찬중, 2018, 「한국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기원-부마항쟁과 광주항쟁 이후의 경제정책 전환-」, 『사회와 역사』 117, 80쪽.

27) 에릭 토르베케, 2009, 「개발주의의 진화와 원조의 역할(1950~2000)」, 핀 타르프 엮음, 임을출 옮김, 『원조와 개발: 교훈과 미래 방향』, 한울 아카데미, 51~91쪽.

28) 김상현, 2021, 「‘발전’을 문제삼기-‘발전사(History of Development)’ 연구의 전개와 동향-」, 『역사비평』 134, 121~122쪽. ‘development’는 ‘발전’이나 ‘개발’로 번역되곤 하는데, 때에 따라 전자는 내재적 과정을, 후자는 의도적 실천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김상현, 위의 글, 139쪽에서 재인용).

29) 마이클 레이섬 지음, 권혁은·김도민·류기현·신재준·정무용·최혜린 옮김, 2021,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그린비 (Michael Latham, *Modernization as Ideology: American Social Science and “Nation Building” in the Kennedy Er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30) David Ekbladh, *The Great American Mission: Modernization & the Construction of an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31) Gilbert Rist,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ZED Books, 2014; Aram Ziai, *Development Discourse and Global History: From colonialism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outledge, 2016.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비판에 관한 세계체제론적, 페미니즘적 시각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나,<sup>33)</sup> 한국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구조조정과 금융 자유화를 수용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발전사’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수룡이 지적했듯이 발전국가론을 비판하는 대표적 논자들의 연구도 “발전국가가 가지는 체제 내적 모순과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발전국가의 존재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들어 역사학, 역사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그리고 이들을 포괄하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개발주의·발전주의, 나아가 개발·발전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는 ‘사회과학 담론사’를 통해 발전 담론이 사회과학 지식에 배태되는 양상을 탐구하고 냉전과 발전이 맺고 있는 동시적 관계에 주목했다.<sup>35)</sup> 역사문제연구소는 “‘개발주의/발전담론’의 비판적 재해석”, “발전과 근대화의 역사: 새로운 시선과 관점”이라는 두 차례 기획을 통해 발전경제학의 계보학, 발전국가의 성별화된 주체화, ‘발전사’ 연구의 전개와 동향을 조망했다.<sup>36)</sup> 특히 두 차례 기획에 모두 참여한 이상록은 1970~80년대 한국의 인간개발 담론과 ‘성과주체’ 생산, 1960년대 한국 지성계의 ‘발전’에 대한 강박을 조명하면서 ‘근대화론’·‘개발주의’를 역사화할 것을 제안했다.<sup>37)</sup>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씨울의 소리』와 『녹색평론』에 대한 분석을 통한 탈성장(degrowth) 사상의 한국적 전개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갔다.<sup>38)</sup>

## 5. 원조·개발·발전을 아우르는 한국 ‘발전사’ 연구의 가능성

32) 니시카와 준 외 편저, 최민경·이태주 옮김, 2013,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아르케.

33) 에티엔 발리바르 외, 1998,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세계 체제론의 시각』, 공감 ; 다니엘 엘슨 외, 1998,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페미니즘의 시각』, 공감.

34) 조수룡, 2015, 「발전이라는 매트릭스 -한국현대사 연구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 『역사와 현실』 100, 371~378쪽.

35)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오경환 엮음, 2019, 『사회과학 지식의 담론사: 발전과 냉전의 얽힘』, 한울 아카데미.

36) 오경환, 2020, 「발전경제학의 계보학 -발전의 상상과 경제학의 기술정치-」, 『역사비평』 132 ; 조은주, 2021, 「발전국가와 젠더 -통치성의 성별화, 성별화된 주체화-」, 『역사비평』 134 ; 김상현, 2021, 「‘발전’을 문제삼기 -‘발전사(History of Development)’ 연구의 전개와 동향-」, 『역사비평』 134.

37) 이상록, 2020, 「동기부여와 인간개발, 자기관리형 인간의 탄생 -1970~80년대 한국에서 인간개발 담론과 ‘성과주체’ 생산-」, 『역사비평』 132 ; 이상록, 2021, 「민주주의는 개발주의에 어떻게 잠식되어왔는가 -1960년대 한국 지성계의 ‘발전’에 대한 강박-」, 『역사비평』 134.

38) 이상록, 2022, 「탈성장(degrowth) 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그 의미 -『씨울의 소리』와 『녹색평론』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51.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원조와 개발주의·발전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종합적 시야에서 이루어졌다고보다는 대체로 개별적,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기한 대로 한국현대사에서 개발주의·발전주의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하고 원조의 성격과 작동방식이 이에 조응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결합해 나갔는지 성찰하는 작업은 원조·개발·발전을 아우르는 새로운 한국 ‘발전사’ 연구로 나아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원조 및 외자도입 연구의 시기적 확장이 요구된다. 주한 케아(C.A.R.E.) 등 외원단체를 중심으로 한 1960~70년대 인도주의 구호에 대한 연구, 1960년대 대자본의 외자도입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경향을 선도하고 있지만,<sup>39)</sup> 자료적 한계로 인해 경제기획원, 주한미원조사절단(USOM),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시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정부 조직 및 원조 관련 기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1963년 이후 시기 NARA RG 59(미 국무부) 문서, RG 286(미 국제개발처) 문서 등에 대한 추가 수집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여전히 1960년대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개발주의·발전주의의 역사화 시도 역시 1940~50년대, 나아가 식민지시기 연구로 확장해갈 필요가 있다. 물론 식민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나, 이것이 해방 이후 한국 개발주의·발전주의와 어떻게 연결되었고 원조와 결합하면서 변화해 나갔는지 해방 전후의 연속성을 염두에 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대만, 필리핀 등 동시대 식민지 개발과의 비교사적 연구, 냉전 시기 남북한의 서로 다른 개발주의·발전주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 탈성장 및 생태환경사 연구와의 접합 등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고 또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원조·개발·발전을 아우르는 새로운 한국 ‘발전사’ 연구로 나아간다면 한국현대사의 새로운 거시적, 체계적 이해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9) 한봉석, 2020, 「1960년대 미공법 480호 2관과 3관 원조의 의미 -주한 케아의 ‘근로를 위한 식량’(Food for Work)을 중심으로-」, 『사림』 74 ; 한봉석, 2020, 「구호물자에 담긴 냉전: 주한 케아(C.A.R.E.)의 패키지로 살펴보는 냉전과 인도주의」, 『통일과 평화』 12-1 ; 이정은, 2017, 『박정희 정권 시기 대자본의 외자도입과 금융기관 진출 연구(1960~1973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 2017, 「1960년대 대자본의 일본 외자도입 개시와 조직적 대응」, 『사학연구』 128 ; 이정은, 2018, 「1960년대 외자도입법 시행 하 박정희 정부의 외자도입 인가 실태: 1966-1969년 상업차관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67.



## 이동원, 「한국현대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원조·개발·발전사 연구를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이정은(순천대)

현대사는 다른 시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많은 자료와 증언에 의해 생생하게 구현되고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방대한 자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거나 학문적 ‘거리두기’에 실패하는 등 여타 시대사에 비해 체계적 해석 ‘틀’을 구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발표문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틀”로서 ‘원조·개발·발전사’ 혹은 이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발전사’를 제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기존연구를 모아내고, 또한 향후의 과제를 짚어보고 있다.

또한 이는 얼마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금까지의 한국현대사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간한 『한국현대사연구의 쟁점』이 취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사 구분방법-냉전사, 분단체제, 민주화운동, 경제사 등-만으로는 충분히 담아낼 수 없는, 현대사의 새로운 연구 흐름을 흡수하고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를 강구하고자 한 필자의 고민 결과라고도 여겨진다. 특히 경제원조에만 국한되지 않는 1950년대 대한원조의 다각적 고찰을 강조하듯, 발표문은 기존의 ‘경제사’만으로는 포괄될 수 없는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시야에 담고 있다.

‘개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지금껏 한국현대사의 성장과정 메커니즘과 특성을 도출하는 데만 급급했던 본 토론자로서는 발표문으로 인해 많은 배움과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얕은 이해를 자원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 우선 ‘발전사’라고 구획할 수 있는 학문분야의 범위와 특성은 무엇일지 구체적인 정의가 제시되었으면 한다. 발표자가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상현의 연구(「‘발전’을 문제삼기- ‘발전사’ 연구의 전개와 동향」, 『역사비평』134, 2021)에서 드러나는 서구의 ‘발전사’는 “발전을 역사적 분석의 대상으로 접근”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형성·구성된 담론으로서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지식과 실천”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는 일련의 연구라 보여진다. 이를 전통적 구분법에 대입해 보자면, 담론과 지식 생성을 아우르는 사상사적 접근과 더불어, 이를 전파하고 실천시키는 권력의 의도와 작동이라는 정치사의 문제의식이 겹쳐있다고 여겨지는데, 발표자의 파악도 이와 유사한지, 혹은 다른 지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발표문에서는 ‘개발주의’ ‘발전주의’ 용어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 관련 ‘-주의’를 한국의 역사적 조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나아가 ‘발전사’와는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지(발전사의 주요 연구대상 중의 하나가 개발주의?) 용어의 사용과 관계망에 대해 고민하신 바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듣

고 싶다.

2. 발표자가 중요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원조의 성격과 작동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며 한국의 개발주의·발전주의에 결합해 나갔는지 고찰”한다는 것에는, 그만큼 한국적 성장주의·개발주의에 미친 미국의 전략적 영향과 주입·개입이 강력했음을 인정·전제하고, 다양한 원조를 매개로 했던 그 침투 메커니즘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해된다. 이는 곧 한국 ‘발전사’ 속의 미국 영향력의 규명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현재 학계에서 수행 중인 미국 근대화론의 영향과 한국사회의 수용을 다루는 연구 흐름과 같은 선상에 놓인 것이되, 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원조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일지 궁금하다. 다만 원조에 관한 연구, 나아가 원조를 포괄한 외자에 관한 연구는 모두 ‘발전사’로 포괄되거나 등치될 수 없는 훨씬 광범한 탐구 영역이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경제원조·구호원조·군사원조·기술원조 각각이 한국사회에 들어와 발휘하는 힘과 실질적 파급, 그 속의 일부분으로서 위치할 이들의 ‘개발주의·발전주의’의 형성과 관련된 작동과 영향은 전략적으로 분리되어 탐구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다.

2-1. 2장에서는 1950년대 경제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원조경제’를 제시하는 한편,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기에 대해서는 ‘개발독재’와 ‘발전국가’ 논의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후를 구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연속적 이해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 의도와 전략은 충분히 이해되나, 전자는 1950년대 경제 운용상의 주요 특질을 잡아낸 것이고, 후자는 좀 더 큰 차원의 체제와 시스템을 아우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어 간 위상의 간극이 크게 느껴진다. ‘발전사’와 경제사의 일정한 구분짓기가 가능하다면, 1950년대의 높은 원조 의존도를 드러내는 개념 역시 기존의 경제영역에 국한된 ‘원조경제’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사회·군사 분야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이 이번 기회에 오히려 고민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발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발전 담론의 각계 침투·확산과 발전에 대한 지성계의 강박 등 일련의 연구가 선도 중이지만, 아직 한국에서 본격적인 ‘발전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구체적 가능성과 전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발표자가 맺음말에서 이에 대한 구상을 써준 데 더하여, 토론자는 이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추가적인 단상만을 더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구 ‘발전사’ 자체의 기본출발뿐만 아니라, 발표문에서 전제로 삼은 미국의 저개발국정책(원조) 혹은 ‘발전국가’의 영향력이라는 기본 구도하에서는 일단 국가를 위시한 권력의 작동·주입·실천에 연구의 무게중심이 두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연구의 시야가 권력의 층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머문다던가, 더 나아가 선형적으로 권력 일방의 영향력을 ‘전제’한 채 연구가 이뤄지는 경우일 것이다. 발전국가론에 대한 기왕의 비판 역시, 발표자가 지적한 국가 밖의 외부권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외에도, 내부적 차원에서 국가 자체를 갈등적인 계급 관계 속에 놓인 모순적 실체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조희연, 1997 등)도 이와 관련 있다.

이를 위해 한미관계의 경우, 미국의 원조건 이를 필두로 한 근대화론이건 미국의 영향력에 더한 ‘한국적’ 수용·굴절·변용, 나아가 상호작용의 측면까지 아우른 연구시각이 필요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국가권력이나 지배층 일방에 의한 개발주의·발전주의의 침투뿐만이 아닌, 이를 둘러싼 각계 각층과의 갈등·상호작용 속에서 야기되는 변화·균열·역작용 등에 이르는 양상까지 의식적으로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발전을 사람들의 실질적 자유의 확장과정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아마티아 센과 같이, ‘발전’ 개념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조류를 한국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이 역시 ‘발전사’의 입장에서 또 다르게 해석해 보는 것도 가능할 듯 하다.

4. (기타 질문) 발표문에서 미국 저개발국 원조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에 대한 개인적 물음을 덧붙이려 한다. 우선 당대 기준에서 통용되던 technical assistance(TA)와 technical cooperation(TC)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흔히 TA에 TC를 포함하여 보기도 하지만, 이를 구별하는 경우 TC는 해외파견 등 교육까지 포괄하는 인적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말 그대로의 독립적 기술원조(기술협조), TA는 거대 투자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서 제공되는 노동이나 전문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다고 알고있다. 트루만의 ‘포인트 포’의 강조 역시 TA가 아닌 TC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발표문 저개발국의 ‘개발’이 기술협조(TC)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 역시, 위와 같은 TC의 정의 및 1950년대 한국 내 TC의 비중이 매년 FOA/ICA 전체 원조계획 중 2% 내외였다는 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